



■ 정책보고서 2013-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

김미숙 · 전진아 · 정익중 · 노충래 · 최은진 · 하태정

【책임연구자】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공동연구진】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충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하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자문위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위
1	강란혜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	강병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소장
3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4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5	고 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6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7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8	김승혜	푸른나무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부장
9	김정주	모든학교 체험학습연구소 소장
10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1	김형욱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학생인권옹호관
12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단장
13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	이상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8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	임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1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출문 <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이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지원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정책은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고, 초중고생을 이르는 모든 아동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동 및 아동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취약한 상황이고, 아동은 성인으로 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질적 수준’에 있다. PISA 성적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고, 건강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나 아동은 별로 삶의 만족하지 못하다. 이러한 아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가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동안 아동을 위한 범부처적 정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바 없다. 영유아의 경우는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의 경우는 벌써 5차에 이르는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다행히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매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로서 시작되었다. 아동정책분야를 총 3 추진분야와 1개 인프라로 나누어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계, 아동현장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과제를 완성하였다. 아동관련 전문가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아이디어를 집약한 만큼, 본 연구 결과가 이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수립되는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유용한 연구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을 내 자녀로 인식하고 양육하는 기본시각을 가질 때 모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통일한국을 맞이해서 북한의 아동의 삶의 질도 담보하는데 본 연구가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자문위원분들과 연구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4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제1부 아동정책 여건진단 및 기본계획틀	1
I. 추진배경	3
1.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5
2.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및 방법	6
II. 정책여건	7
1. 국내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아동의 현실	9
2. 아동관련법 및 관련분야 기본계획, CRC 주요 내용, 국정과제 주요 내용	3·2
3. 외국 기본계획사례	94
III.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분야	9 5
1. 기본방향 및 비전	6
2. 비전 및 추진과제	26
3. 분야별 세부과제	36
제2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3·7
I. 역량과 참여증진	56
1-1. 학업과 여가의 균형	77
1-2. 사회성 제고	78
1-3. 사회참여증진	19
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7 9
2-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9 9
2-2. 선제적 정신건강관리	1

2-3. 안전환경 구축	17
2-4. 사회적 안전 확보	18
III. 보호 및 돌봄 강화	19
3-1. 아동사회안전망 조성	19
3-2. 차별 없는 사회 구축	19
3-3. 지역사회보호 강화	20
IV. 인프라	237
4-1. 조직 개편	239
4-2. 예산 확충	247
4-3. 전문인력 확보	252
4-4. 평가체계 도입	258
참고문헌	265

표 목차

〈표 1-Ⅱ-1〉	합계출산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2005-2013년)	0	1	
〈표 1-Ⅱ-2〉	아동복지법상 아동 수 및 총인구 대비 구성비 변화 추이(2008-2013년)	0	1	
〈표 1-Ⅱ-3〉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변화 추이(1980-2010년)	1	1	
〈표 1-Ⅱ-4〉	한부모 가구 수 및 비율(2007-2012년)	2	1	
〈표 1-Ⅱ-5〉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1995-2010년)	2	1	
〈표 1-Ⅱ-6〉	총 이혼 건수, 조(粗)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2	1	
〈표 1-Ⅱ-7〉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2007-2013년)	3	1	
〈표 1-Ⅱ-8〉	다문화 가구 자녀의 연령별 현황(2007-2013년)	4	1	
〈표 1-Ⅱ-9〉	다문화 가구 학생수(2006-2012년)	4	1	
〈표 1-Ⅱ-10〉	유배우 가구 현황	6	1	
〈표 1-Ⅱ-11〉	맞벌이 및 비맞벌이가구의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요일 평균 사용시간	6	1	
〈표 1-Ⅱ-12〉	아동 관련 법률에서의 호칭과 연령구분, 목적 및 소관부서	3	2	
〈표 1-Ⅱ-13〉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6	2	
〈표 1-Ⅱ-14〉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2004년)	7	2	
〈표 1-Ⅱ-15〉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9	2	
〈표 1-Ⅱ-16〉	제1차 부산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 플랜(2010-2014)	2	3	
〈표 1-Ⅱ-17〉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 (2013~2017)	5	3	
〈표 1-Ⅱ-18〉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내 아동정책 관련 과제	6	3	
〈표 1-Ⅱ-19〉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조항별 주요 내용	0	4	
〈표 1-Ⅱ-20〉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별 세부내용	1	4	
〈표 1-Ⅱ-21〉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4	4	
〈표 1-Ⅱ-22〉	미국 아동상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영역 및 목표	9	4	
〈표 1-Ⅱ-23〉	호주의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의 성과목표 및 전략	5	5	
〈표 2-I-1〉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체계	4	8	
〈표 2-I-2〉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의 특징, 기본요소, 이행요건	4	8	
〈표 2-Ⅱ-1〉	연도별 연령별 성별운수사고 사망률	0	0	1
〈표 2-Ⅱ-2〉	19세 이하 근시, 원시, 난시, 주요 질환자 추이	0	0	1
〈표 2-Ⅱ-3〉	만 12세의 영구치우식경험도에 대한 주요 국가간 비교	2	0	1
〈표 2-Ⅱ-4〉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2	0	1
〈표 2-Ⅱ-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세부과제	2	0	1

〈표 2-Ⅱ- 6〉	영아기 건강 관련 법과 개선 사항	4·0·1
〈표 2-Ⅱ- 7〉	유아기 아동의 건강관리 관련 법과 개선 사항	6·0·1
〈표 2-Ⅱ- 8〉	취학어린이 건강증진정책 관련 법과 개선 사항	7·0·1
〈표 2-Ⅱ- 9〉	청소년기 건강증진정책 관련 법과 개선 사항	9·0·1
〈표 2-Ⅱ-10〉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및 중독자 수	3·1·1
〈표 2-Ⅱ-11〉	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현황(2009-2012년)	4·1·1
〈표 2-Ⅱ-12〉	2011~2013년 어린이 손상사고 발생 수	9·2·1
〈표 2-Ⅱ-13〉	실종아동 발생건수(2009-2013년)	8·4·1
〈표 2-Ⅱ-14〉	전문기관 서비스 전달체계 확대(안)	7·5·1
〈표 2-Ⅲ- 1〉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	3·7·1
〈표 2-Ⅲ- 2〉	재신고 및 신규신고 접수건수	3·7·1
〈표 2-Ⅲ- 3〉	아동학대행위자 유형	3·7·1
〈표 2-Ⅲ- 4〉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현황	9·7·1
〈표 2-Ⅲ- 5〉	장애인의 교육 수준	1·8·1
〈표 2-Ⅲ- 6〉	이주아동의 학내차별경험	0·0·2
〈표 2-Ⅲ- 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2012년 기준)	1·0·2
〈표 2-Ⅲ- 8〉	다문화 이해 교육 받은 횟수	2·0·2
〈표 2-Ⅲ- 9〉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2·0·2
〈표 2-Ⅲ-10〉	2012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	2·0·2
〈표 2-Ⅲ-11〉	2009년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률	3·0·2
〈표 2-Ⅲ-12〉	중도입국 아동의 학교급 분포	4·0·2
〈표 2-Ⅲ-13〉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4·0·2
〈표 2-Ⅲ-14〉	북한이탈 청소년 1인 가구 비율	6·0·2
〈표 2-Ⅲ-15〉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9·1·2
〈표 2-Ⅲ-16〉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0·2·2
〈표 2-Ⅲ-17〉	소년범죄 처리 현황	1·2·2
〈표 2-Ⅲ-1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2·2·2
〈표 2-Ⅲ-19〉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3·2·2
〈표 2-Ⅲ-20〉	보호소년의 수용현황	5·2·2
〈표 2-Ⅲ-2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6·2·2
〈표 2-Ⅳ- 1〉	세목별 세입 비교	8·4·2

그림 목차

[그림 1-Ⅱ-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변화추이(2004-2013)	5	1
[그림 1-Ⅱ-2]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	7	1
[그림 1-Ⅱ-3]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8	1
[그림 1-Ⅱ-4]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 현황	9	1
[그림 1-Ⅱ-5]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후 생활	10	2
[그림 1-Ⅱ-6]	요일별 아동 사교육 시간 변화추이	11	2
[그림 1-Ⅱ-7]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비율(3-17세)	11	2
[그림 1-Ⅱ-8]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수준 변화(2008, 2013년)	12	2
[그림 2-Ⅱ-1]	아동·청소년 비만인구 증가량(%)	11	0 1
[그림 2-Ⅱ-2]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중단자료)	16	1 1
[그림 2-Ⅱ-3]	아동 자살예방 및 대응체계	14	2 1
[그림 2-Ⅱ-4]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17	2 1
[그림 2-Ⅱ-5]	어린이 자동차보호장구(카시트) 장착률	10	3 1
[그림 2-Ⅱ-6]	어린이 가정안전용품 예시	11	3 1
[그림 2-Ⅱ-7]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2002-2012년)	17	4 1
[그림 2-Ⅱ-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추진방향	14	5 1
[그림 2-Ⅱ-9]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 관리 강화	15	5 1
[그림 2-Ⅲ-1]	2007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제정 전후 아동(13세 미만)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15	5 1

제1부

아동정책 여건진단 및 기본계획틀

- I. 추진배경
- II. 정책여건
- III.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분야



I . 추진배경

1.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2.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방법

1.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의의

□ 아동정책 기본계획수립의 근거자료 필요성

- 아동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 정책에 대한 연계·조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12.8월 시행)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등에 대한 관련 연구 추진 필요

□ 근거에 기반한 아동정책 도출 필요

-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아동을 둘러싼 정책 및 양육환경을 진단하고, 증거에 기반한 아동정책 수립 필요 및 수립된 정책의 관리운영방안 모색 필요
 - 향후 아동의 변화를 예측하여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
 - 나아가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을 국가가 선도하는 정책을 수립

□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방안과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과제별 추진방안 및 자원조달방안 제시

□ 기본계획 수립의 의의

- 선진적 아동정책 도입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의 삶의 질 수준 제고
-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 추진과제 선정 등으로 향후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
-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

2.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 선행연구, 통계자료, 정부간행물, 서베이데이터

- 기존의 각종 아동관련 기본계획 검토
- 아동을 둘러싼 양육환경, 정책환경에 대한 통계정리
-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주요 결과 반영

□ 분과회의

- 주기적인 회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 연구진, 각 부처 공무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회의체를 운영
-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방법 논의
 - 과제의 이행방안, 재원마련방안, 평가방안도 함께 논의
- 과제도출 후 일반국민에의 홍보 및 의견수렴

□ 해외 아동정책 관련계획 고찰

- 미국, 영국, 호주 등 아동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국가에 대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고찰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행동계획 리뷰



Ⅱ. 정책여건

1. 국내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아동의 현실
2. 국내 아동 관련 법률과 기존 중장기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3. 외국의 기본계획 사례

1. 국내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아동의 현실

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1) 저출산 및 아동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의 대체 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인 2.1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통계청(2014)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합계출산율¹⁾은 1.19명으로 나타남. 2005년의 합계출산율(1.08명)보다는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0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감소하고 있음(표 1-Ⅱ-1 참고).

□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0-18세 미만)이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중 아동(0-18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 2008년부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표 1-Ⅱ-2 참고).

1) 합계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의 수준비교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출산율의 총합임.
합계출산율 = 연령별출산율(15~49세)의 합/1,000
연령별출산율 = (여자의 연령별 출생아수)/(당해연령별 여자인구 수) × 1,000

〈표 1-Ⅱ-1〉 합계출산율과 모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2005-2013년)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천명당 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08	17.8	91.7	81.5	18.7	2.4	0.2
2006	1.12	17.6	89.4	89.4	21.2	2.6	0.2
2007	1.25	19.5	95.5	101.3	25.6	3.1	0.2
2008	1.19	18.2	85.6	101.5	26.5	3.2	0.2
2009	1.15	16.5	80.4	100.8	27.3	3.4	0.2
2010	1.23	16.5	79.7	112.4	32.6	4.1	0.2
2011	1.24	16.4	78.4	114.4	35.4	4.6	0.2
2012	1.30	16.0	77.4	121.9	39.0	4.9	0.2
2013	1.19	14.0	66.0	111.5	39.5	4.8	0.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각년도, 「장래인구추계」 2011. 12.
통계청(2014). 「2013 한국의 사회지표」의 자료 재구성

〈표 1-Ⅱ-2〉 아동복지법상 아동 수 및 총인구 대비 구성비 변화 추이(2008-2013년)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아동복지법상 아동 수 (0-18세 미만)	총인구 대비 아동 구성비
2008	49,540,367	10,655,575	21.5
2009	49,773,145	10,396,743	20.9
2010	50,515,666	10,156,455	20.1
2011	50,734,284	9,921,012	19.6
2012	50,948,272	9,691,876	19.0
2013	51,141,463	9,431,699	18.4

자료: 안전행정부(2014),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재구성.
(<http://rcps.egov.go.kr:8081>)

2) 아동이 속한 가구의 변화

(1) 한부모 가구의 증가 및 가정해체의 지속

□ 우리나라의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1-Ⅱ-3>과 같음. 2010년 현재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4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12.3%, 부부와 조부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5.0%로 나타났다. 가구 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995년부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표 1-Ⅱ-3>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 변화 추이(1980-2010년)

(단위: %)

연도	핵가족			직계가족		기타
	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한부모와 미혼자녀	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1980	6.4	56.5	10.0	0.6	10.4	16.1
1985	7.8	57.8	9.7	0.8	9.9	14.0
1990	9.3	58.0	8.7	0.9	9.3	13.8
1995	12.6	58.6	8.6	1.1	8.0	11.2
2000	14.8	57.8	9.4	1.2	6.8	10.1
2005	18.1	53.7	11.0	1.2	5.7	10.4
2010	20.6	49.4	12.3	1.2	5.0	11.6

자료: 통계청(2014b). 2013 한국의 사회지표.

□ 2012년 현재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은 9.3%이며, 저소득한부모가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표 1-Ⅱ-4 참고). 한부모가구의 형성요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사별이 형성요인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이혼으로 인해 형성된 한부모가구가 전체 사유 중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남(표 1-Ⅱ-5 참고).

〈표 1-Ⅱ-4〉 한부모 가구 수 및 비율(2007-2012년)

(단위: 1,000가구, %)

연도	전체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¹⁾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비율
2007	16,543	1,468	148	73	8.9
2008	16,791	1,509	150	82	9.0
2009	17,052	1,551	171	94	9.1
2010	17,339	1,594	185	108	9.2
2011	17,687	1,639	189	115	9.3
2012	17,951	1,677	218	131	9.3

자료: 통계청(2013),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주: 1)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 국가보훈대상 중 한부모를 말함.

〈표 1-Ⅱ-5〉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 현황(1995-2010년)

(단위: 1,000가구, %)

연도	총가구수	한부모가구					한부모가구 비율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계	
1995	12,958	526(54.8)	124(12.9)	94(9.8)	216(22.5)	960(100.0)	7.4
2000	14,312	502(44.7)	246(21.9)	123(10.9)	253(22.5)	1,124(100.0)	7.9
2005	15,887	501(36.6)	399(29.1)	142(10.4)	328(23.9)	1,370(100.0)	8.6
2010	17,339	474(29.7)	523(32.8)	185(11.6)	413(25.9)	1,594(100.0)	9.2

자료: 보건복지부(2013a),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실제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3년 이혼 건수는 전년의 11만 4천 3백건보다 0.9% 증가함(표 1-Ⅱ-6 참고).

〈표 1-Ⅱ-6〉 총 이혼 건수, 조(粗)이혼율 및 유배우 이혼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이혼 건수(천 건)	166.6	138.9	128.0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증 감(천 건)		21.7	-27.7	-10.9	-3.5	-0.5	-7.5	7.5	-7.1	-2.6	0.0
증감률(%)		15.0	-16.6	-7.8	-2.7	-0.4	-6.1	6.4	-5.8	-2.2	0.9
조이혼율 ¹⁾		3.4	2.9	2.6	2.5	2.5	2.4	2.5	2.3	2.3	2.3
유배우 이혼율 ²⁾		7.2	6.0	5.5	5.3	5.2	4.9	5.2	4.8	4.7	4.7

자료: 통계청(2014c), '2013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재인용

주: 1) 조이혼율: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2) 유배우 이혼율: 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

(2) 다문화 가구의 증가

□ 여성가족부(2014b)의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²⁾는 2007년에는 142,015명, 2013년에는 281,295명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표 1-Ⅱ-7 참고).

□ 다문화 가구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만 6세 이하가 61%, 만7세~만12세 이하가 23.6%, 만13세~만15세 이하가 9.6%, 만16세~만18세 이하가 5.8%로 나타남(표 1-Ⅱ-8 참고).

□ <표 1-Ⅱ-9>를 통해 할 수 있듯이, 다문화 가구의 학생 수 역시 증가 추이를 보임.

○ 다문화 가구의 학생 수는 2012년 현재 46,954명으로 2006년에 비해 약 5배 가량 증가함.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의 72.0%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남.

〈표 1-Ⅱ-7〉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2007-2013년)

연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계
2007	87,964	38,991	15,060	142,015
2008	102,713	41,672	23,839	168,224
2009	125,673	41,417	32,308	199,398
2010	125,087	56,584	39,877	221,548
2011	141,654	69,804	41,306	252,764
2012	144,214	76,473	47,040	267,727
2013	147,591	83,929	49,775	281,295

자료: 여성가족부(2014b).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의 내용 재인용.

2)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가족에 포함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표 1-Ⅱ-8〉 다문화 가구 자녀의 연령별 현황(2007-2013년)

(단위: 명, %)

구분	만6세 이하	만7세-만12세 이하	만13세-만15 세 이하	만16세-만18 세 이하	계
2007	26,445 (59.8)	14,392 (32.5)	2,080 (4.7)	1,341 (3.0)	44,258 (100.0)
2008	33,140 (57.1)	18,691 (32.2)	3,672 (6.3)	2,504 (4.3)	58,007 (100.0)
2009	64,040 (59.5)	28,922 (26.9)	8,082 (7.5)	6,645 (6.2)	107,689 (100.0)
2010	75,776 (62.1)	30,587 (25.1)	8,688 (7.1)	6,884 (5.6)	121,935 (100.0)
2011	93,537 (61.9)	37,590 (24.9)	12,392 (8.2)	7,635 (5.1)	151,154 (100.0)
2012	104,694 (62.1)	40,235 (23.9)	15,038 (8.9)	8,616 (5.1)	168,583 (100.0)
2013	116,696 (61.0)	45,156 (23.6)	18,395 (9.6)	11,081 (5.8)	191,328 (100.0)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외국민주민현황」 각년도.

〈표 1-Ⅱ-9〉 다문화 가구 학생수(2006-2012년)

(단위: 명)

구분	다문화 가구 학생수1)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6	9,389	7,910	1,139	340
2007	14,654	12,199	1,979	476
2008	20,180	16,785	2,527	868
2009	26,015	21,466	3,294	1,255
2010	31,788	24,701	5,260	1,827
2011	38,678	28,667	7,634	2,377
2012	46,954	33,792	9,647	3,515
구성비	100.0	72.0	20.5	7.5

자료: 교육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각년도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의 자료 재인용

주: 1) 국제결혼가정 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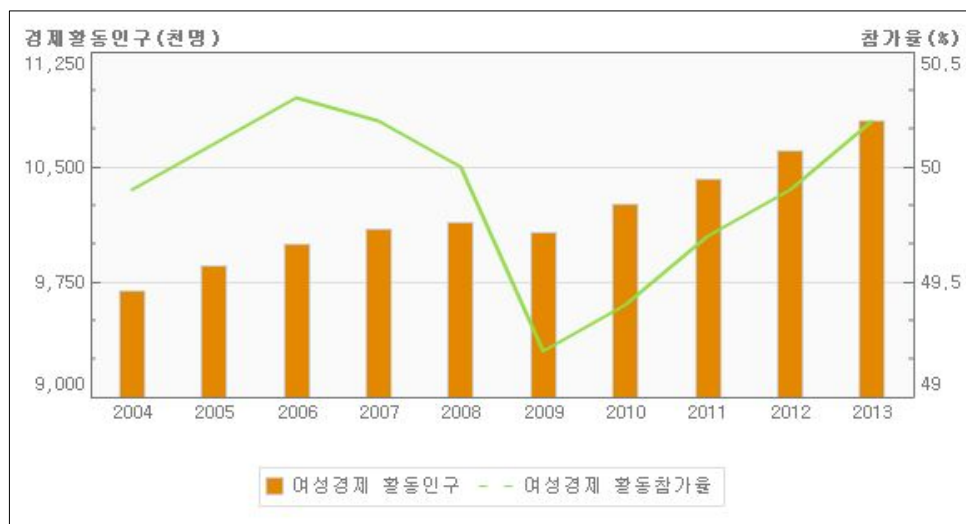
(3)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및 맞벌이가구의 보편화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구와 같은 가구형태는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 이는 아동의 양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변화로 볼 수 있음.

□ 2004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변화추이를 살펴 보면, [그림 1-Ⅱ-1]과 같음.

○ 여성경제활동참가율³⁾은 2004년에는 49.9%, 2005년에는 50.1%로 나타났으나, 2009년 경제위기로 다시 49.2%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다시 50%대를 넘어섰음.

[그림 1-Ⅱ-1]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변화추이(2004-2013)



자료: 통계청(2014a). 「경제활동인구조사」

3)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 여성인구/15세 이상 여성인구 전체)×100

- 통계청(2014)이 발표한 ‘2013년 맞벌이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 현재, 유배우 가구는 1,178만 가구이고, 이중 맞벌이가구는 505만 5천가구로 유배우 가구의 42.9%를 차지하였음. 맞벌이 가구 중 8.8%(44만7천 가구)는 부부가 같은 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동거 맞벌이 가구’로 나타남.

〈표 1-Ⅱ-10〉 유배우 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 %)

유배우 가구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	기타가구
		비동거 맞벌이		
11,780 (100.0)	5,055 (42.9)	447 (3.8)	4,971 (42.2)	1,753 (14.9)

주: ()는 유배우 가구의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2014b). 「2013년 맞벌이 가구현황」 보도자료」의 자료 재인용.

-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가구의 주부와 남편이 가정을 관리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데에 사용하는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표 1-Ⅱ-11〉과 같음.
- 맞벌이가구의 주부는 음식준비 및 정리 등의 가정관리에 2시간 38분, 가족을 보살피는 데에는 42분을 쓰는 반면, 남편은 가정관리에 24분, 가족보살피기에 13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맞벌이가구의 경우에도 남편이 주부보다는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에 투자하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Ⅱ-11〉 맞벌이 및 비맞벌이가구의 가정관리 및 가족보살피기 요일 평균 사용시간

(단위: 시간:분)

구분	맞벌이가구				비맞벌이가구			
	주부		남편		주부		남편	
	2004년	2009년	2004년	2009년	2004년	2009년	2004년	2009년
가정관리 ¹⁾	2:47	2:38	0:20	0:24	4:19	4:11	0:15	0:19
가족보살피기 ²⁾	0:41	0:42	0:12	0:13	2:06	2:07	0:16	0:20

자료: 통계청(2004), 통계청(2009). 「생활시간조사」. 전진아 외(2013)의 자료 재인용.

주: 1) 가정관리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등이 포함됨.

2) 가족보살피기에는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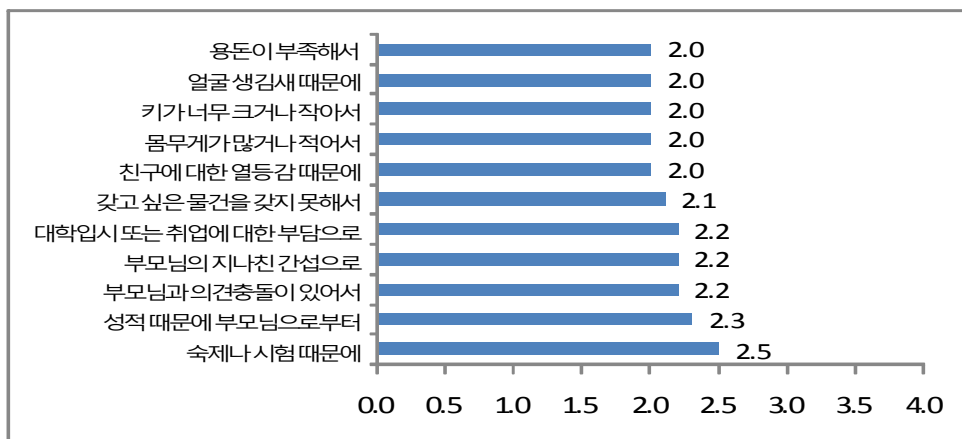
나. 아동의 현실

1)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제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평균 2.47점),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평균 2.30점),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로 인한 스트레스(평균 2.25점), 대학입시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평균 2.1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Ⅱ-2]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원인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188의 내용 재구성.

2) 매체(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저연령화

□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매체 발달에 따라 이에 대한 중독과 매체 중독의 저연령화 또한 아동 분야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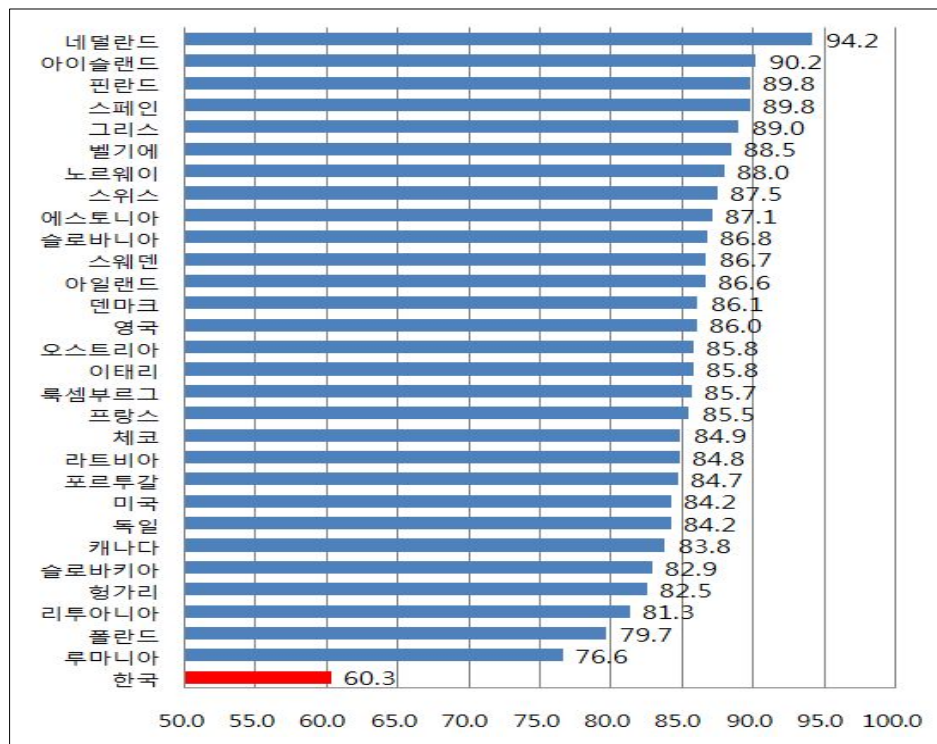
○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 따르면, 9~11세의 초등학교 연령 아동은 16.3%가 고위험군, 7.5%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파악되었으며, 12~17세의

중고생 아동의 경우 고위험군은 9.3%, 잠재적 위험군은 8.1%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은 아동의 스트레스와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김미숙 외, 2013).

3) 낮은 수준의 아동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 우리나라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를 OECD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11, 13, 15세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Ⅱ-3]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200의 자료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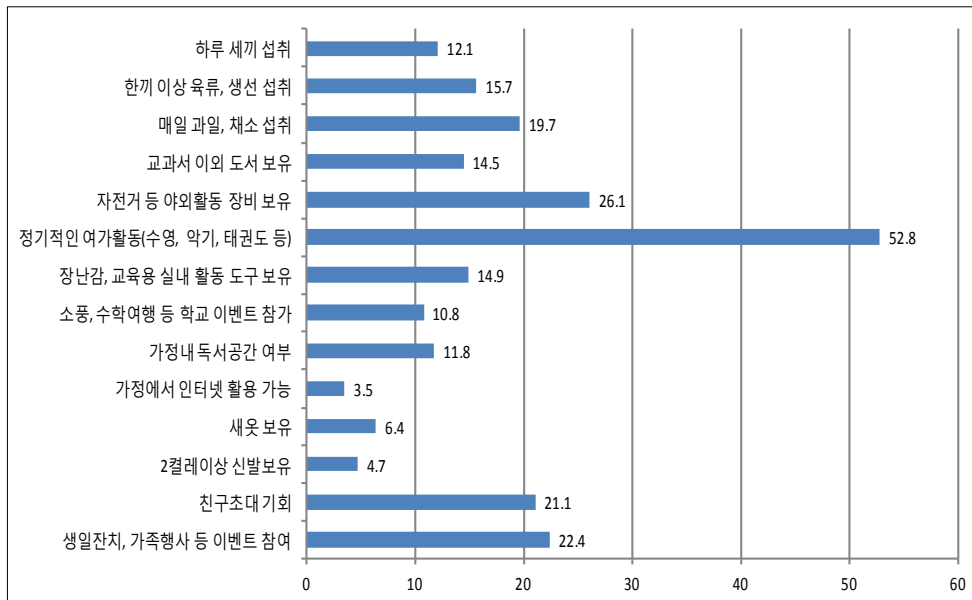
4) 높은 수준의 아동 결핍 상태

□ UNICEF에서는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를 통해 아동의 빈곤 상태를 측정하고 있음. 아동결핍지수는 하루 세끼를 섭취하는지 등의 식습관과 관련된 문항, 교과서 이외의 도서보유, 자전거 등 야외활동을 위한 장비 보유여부, 정기적 여가활동 여부 등을 통해 측정됨.

○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54.8%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남(김미숙 외, 2013).

○ 결핍 현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그림 1-Ⅱ-4 참조), 정기적인 여가활동(수영, 악기, 태권도 등)을 누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전거 등 야외활동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26.1%, 생일잔치, 가족행사 등의 이벤트 참여할 기회가 없음이 22.4% 등의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Ⅱ-4] 우리나라 아동의 결핍 현황



주: '아니오(=미보유, 가능하지않음, 없음)'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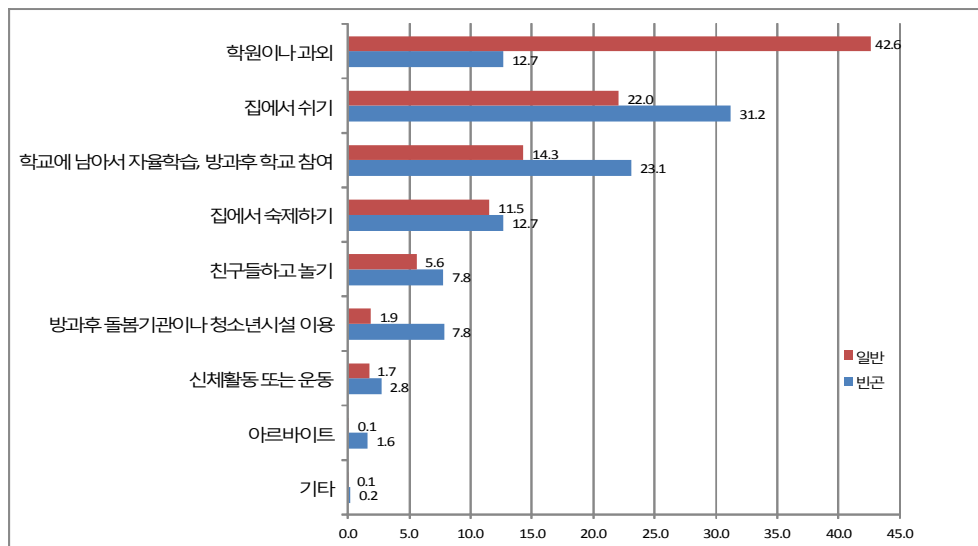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173의 자료 재인용.

5) 학습 활동 위주의 방과후 생활

□ 우리나라 아동(9-17세)의 67.6%는 방과후에 학원, 숙제, 자율학습 등의 학습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김미숙 외, 2013).

○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아동 42.6%는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가구의 아동은 집에서 쉬거나(31.2%),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참여(23.1%)하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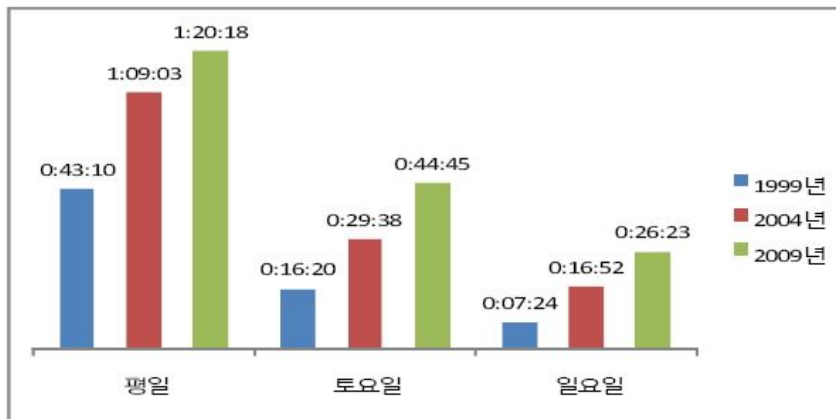
[그림 1-Ⅱ-5] 우리나라 아동의 방과후 생활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374의 자료 재구성.

□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1999, 2004, 2009)에서도 아동이 사교육과 같은 학습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규수업 외의 사교육 수강 시간은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되기 전인 2004년에는 평일 사교육 시간은 1시간 9분 3초였으나, 2009년에는 1시간 20분 18초로 약 11분 정도 증가하였음(김기현 외, 2011).

[그림 1-Ⅱ-6] 요일별 아동 사교육 시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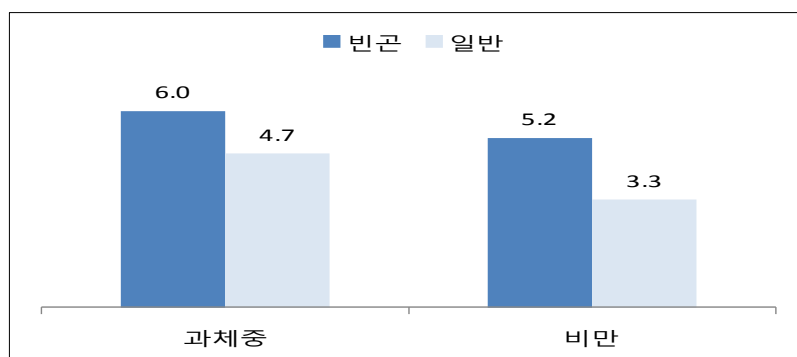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1999, 2004, 2009), 「생활시간조사」
김기현 외(2011)의 p.26의 그림 재인용.

6)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 우리나라 아동의 신체적 건강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비만비율과 운동 실천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의 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별로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비율은 일반가구 아동의 3.3%, 빈곤가구 아동의 5.2%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만 6세부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비율이 증가함.

[그림 1-Ⅱ-7]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비율(3-1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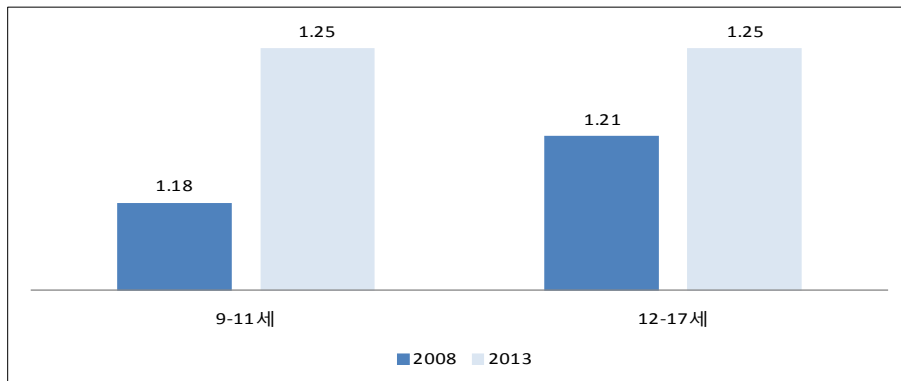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246의 자료 재인용.

○ 운동 실천율의 경우, 주3일 이상 30분이상 운동하는 아동은 34.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31.2%는 운동을 단 하루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김미숙 외, 2013).

□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수준은 2013년 현재 9~11세 아동의 우울수준은 3점 평균으로 볼 때 1.25점, 12~17세 아동은 1.25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2008년에 측정된 아동의 우울수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김미숙 외, 2013).

[그림 1-Ⅱ-8] 우리나라 아동의 우울 수준 변화(2008, 2013년)



자료: 김미숙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p.184의 자료 재인용.

□ 또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며, 이 중 25.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국내 아동 관련 법률과 기존 중장기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

가. 아동 관련 법률 및 아동의 정의

□ 국내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과 같은 법률과 특수한 목적을 가진 대상 안에서 아동을 간접적으로 포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으로 나눌 수 있음(하정화 외, 2009).

○ 아동 관련 법률 중에서도 법률 내에 직접적으로 아동과 그 대상 연령을 명시한 법률은 <표 1-Ⅱ-12>와 같으며, 각 법률별로 아동의 연령 정의나 호칭은 다양함.

□ 본 연구는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로서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찾을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내림.

<표 1-Ⅱ-12> 아동 관련 법률에서의 호칭과 연령구분, 목적 및 소관부서

법률	대상	호칭	목적	소관부서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아동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 보장	보건복지부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 청소년 육성 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유통 및 유해업소 출입규제, 폭력,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규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9~24세	청소년	청소년 활동 적극 진흥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9~24세	청소년	청소년 복지 증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구제 및 지원 관리	여성가족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아동	실종아동 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이후 사회적응 지원	보건복지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아동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	여성가족부

법률	대상	호칭	목적	소관부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세 미만	아동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	법무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아동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 영위	보건복지부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학교의 학생, 18세 미만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식품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유아교육법	만 3세 부터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유아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 정함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6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보건복지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아동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 서 소외 및 차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18세 미만	아동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	보건복지부
소년법	19세 미만	소년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보호소년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무부
민법	19세 미만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민사상 이슈(법정 대리인 등)을 규정	법무부
형법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상 이슈(14세 미만은 범죄하지 않음 등)를 규정	법무부

법률	대상	호칭	목적	소관부서
도로교통법	13세 미만	어린이	어린이통학버스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정	경찰청
모자보건법	6세 미만	영유아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도 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보건복지부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16세 미만	아동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하여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	법무부

자료: 대한민국정부(2008), 김미숙 외(2012), 전진아 외(2013)의 자료 재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14. 9.1)

나. 기존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

1)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

□ 이제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된 아동 관련 종합계획 및 대책 중,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고 아동의 생애주기 및 대상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제시한 사례로는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2002)」,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2004)」,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을 들 수 있음.

(1)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2002)

□ 2002년 5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어린이·보호 육성 종합계획」은 그동안의 아동관련 정책이 생존과 보호를 위주로 되어있는 등 추진 목표와 비전 제시가 미흡하고 아동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책개발 부족과 더불어, 특히 부처간 협조체계의 결여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가 없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였음(관계부처합동, 2002).

○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은 ‘밝고 희망찬 인격체로서 21세기를 주도할 어린이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5개의 중점 추진분야로 ① 어린이 권리 증진, ② 어린이 보건복지 지원, ③ 어린이 안전강화, ④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⑤

어린이 교육·육성을 제시하였음.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의 중점 추진분야에 따른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계획은 <표 1-Ⅱ-13>과 같음.

<표 1-Ⅱ-13>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분 야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1. 어린이권리 증진	1-1. 어린이 권리 증진	1. 어린이 권리지표 개발·활용 2. 어린이 백서 발간 3. 어린이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환경 개선 4. 가정·학교에서 어린이 참여권 확대 5. 남녀 성차별적 자녀양육 문화 개선 6. 어린이권리증진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7. 장애어린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1-2.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1.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2.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실화 3. 각종 집회시 어린이 동원행위 금지
	1-3. 어린이 성보호	1. 어린이 성보호 제도개선 2. 어린이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2.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2-1. 어린이 복지서비스 지원	1. 재가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 2. 보호시설 수용 어린이 지원 3. 장애 어린이 지원
	2-2. 어린이 보건서비스 지원	1. 어린이 건강지표 개발 2. 취학전 어린이의 건강관리 3. 학령기 어린이의 건강관리 4. 보호시설 수용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 5. 아동 건강관리를 위한 부모교육 강화
3. 어린이 안전 강화	3-1. 주택, 육상·교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용품 안전강화	1. 주택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2. 교육·육성시설의 안전강화 3. 어린이 놀이용품 안전기준 강화 4. 부모 및 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5. 교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6.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3-2. 불량식품 방지	1. 학교급식 개선 2. 불량식품제조·판매업자 단속 강화 3. 식품안전교육 실시
	3-3.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1. 통학로 시설개선 및 보호활동 강화 2. 어린이 교통안전장구 설치 및 착용의무화 3. 보호차량 운전자 교육강화 및 등록 제도 강화 4. 교통안전 교육담당교사 육성 및 교육체계화
4.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4-1. 유해업소, 유해약물·물질, 유해매체로부터 보호	1. 어린이유해업소 확산 방지 2. 유해매체 및 인터넷 정보로부터 보호 3. 유해약물·물질 표시 및 판매가능 연령 표기 강화

분 야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4. 어린이에게 유익한 매체 생산 및 보급 5.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및 교육 실시
5. 어린이 교육·육성	5-1. 어린이 교육·육성 프로그램 개발	1. 어린이·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2. 상담프로그램 개발 3.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5-2. 어린이 건전놀이 문화조성	1. 어린이놀이프로그램 개발 2.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 개발 3. 어린이 주간 선포
	5-3. 어린이육성전문 인력 양성	1. 전문상담인력 확보 2.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3. 수련활동 지도자 육성

자료: 관계부처합동(2002), 김미숙 외(2012)의 자료 재인용

(2)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2004)

□ 2004년 7월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발표된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은 빈부격차 심화, 가족해체 증가, 사교육비 등 양육부담 증가로 인한 계층 간 투자 격차 심화 등과 같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아동의 기본권과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여 미래사회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음(관계부처합동, 2004).

〈표 1-Ⅱ-14〉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2004년)

분 야	추진과제
1. 빈곤아동의 기본생활보장	1-1 학교급식 지원대상 확대 1-2 급식거부 방지체계 구축 1-3 지역사회 급식 발견체계 강화 1-4 급식방법 다양화 및 단가 현실화 1-5 Child Support 제도 도입 1-6 한부모가정 자활지원 강화 1-7 빈곤아동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강화 1-8 저소득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2. 빈곤아동·청소년 건강성장 보장	2-1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확대 2-2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2-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2-4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지원 2-5 보육시설 건강검진 내실화 2-6 학생 신체검사 내실화 2-7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2-8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강화 2-9 빈곤 아동·청소년 의료급여 확대

분 야	추진과제
3. 균등 교육·보육기회 보장 및 학교적응 강화	3-1 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 확대 3-2 영유아 대상 교육·건강·복지 연계사업 기초연구 3-3 지역아동센터 제도화 3-4 방과후 교실 운영 3-5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확대 3-6 저소득학생 e-Learning 지원 3-7 저소득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8 학교상담체계 혁신
4.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	4-1 종합장학정보시스템 구축 4-2 대학 장학제도 개편 4-3 희망경로사업 시범사업 4-4 학자금 대여제도 개선 4-5 생활비 지원 및 자원봉사 연계사업
5.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내실화	5-1 아동학대예방사업 내실화 5-2 가정 없는 아동보호 내실화 5-3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보호 5-4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지원 5-5 가출청소년 구호·가정복귀 5-6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취업지원
6. 빈곤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6-1 SOS 상담전화 개설 및 긴급보호 6-2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6-3 지역복지 협의체 운영 활성화 6-4 교육복지 전담부서 설치 6-5 교육청과 지자체간 연계강화 6-6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내실화 6-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6-8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6-9 중장기계획 및 백서발간

자료: 관계부처합동(2004), 김미숙 외(2012)의 자료 재인용

(3)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 2008년에 수립된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인프라를 축적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생애주기별·대상자별로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부재 및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과의 연계 등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짐(김승권 외, 2008).

○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 아래, 7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6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표 1-Ⅱ-15〉 아동·청소년 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8)

영역	세부영역	정책과제
1. 권리보장 및 참여증진	1-1. 아동·청소년권리증진 및 권리모니터링 강화	1-1-1.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강화 1-1-2. 아동·청소년권리 교육 강화 1-1-3. 지역사회에서의 권리강화
	1-2. 아동·청소년의 참여기회 확대	1-2-1.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운영 개선 1-2-2. 국제기구와의 연대 활성화 1-2-3.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기회 확대 1-2-4. 학교에서의 참여 활성화
2. 안전 및 보호강화	2-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1-1. 안전한 가정환경조성 2-1-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1-3.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2-1-4. 체계적 안전보호 시스템 구축
	2-2. 유해환경 개선 및 유익환경 조성	2-2-1.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 2-2-2. 유해매체 환경 개선 2-2-3. 유익매체 환경조성 2-2-4.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
	2-3. 유해행위로부터 보호	2-3-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2-3-2. 아동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2-3-3. 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2-3-4. 학교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
3. 건강증진	3-1. 건강한 신체발달	3-1-1. 식생활 및 비만·저체중 관리 3-1-2. 질병예방 및 관리 3-1-3.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3-2. 정신건강 향상	3-2-1. 정신질환 예방 3-2-2.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및 인식향상

영역	세부영역	정책과제
	3-3. 건강생활 실천	3-3-1. 신체활동 및 구강건강 강화 3-3-2. 학교 및 지역사회 보건교육 강화
4. 역량개발	4-1. 글로벌·다문화역량강화	4-1-1.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강화 4-1-2. 다문화 수용성 증진
	4-2. 민주시민역량강화	4-2-1. 시민역량제고 4-2-2.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
	4-3. 진로 및 자립 지원	4-3-1.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 지원 강화 4-3-2. 청소년 근로지원 및 근로환경 관리 강화
	4-4. 아동·청소년활동기반 강화	4-4-1. 학교교육과 연계 활동 지원 확대 4-4-2. 아동·청소년 체험활동의 교육적·사회적 가치제고 4-4-3. 아동·청소년활동자원 확보
5. 공평한 출발기 회 보장	5-1. 아동·청소년의 기본생활보장	5-1-1. 경제적 지원 5-1-2. 통합적 지원
	5-2.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위기 관리강화	5-2-1. 보호강화 5-2-2. 위기관리강화
	5-3. 보호필요 및 위기아동·청소년 의 역량강화와 자립지원	5-3-1. 역량강화 5-3-2. 자립지원 확대
	5-4. 통합적 가족 지원	5-4-1. 한부모·조손임양위탁가족 지원 5-4-2. 다문화새터민 가족 지원
6. 관련 산업 육성	6-1. 교육·문화 관련 산업 육성	6-1-1. 교육·출판 및 상담 산업 지원 6-1-2. 특기적성 전문인력 양성 산업 지원 6-1-3. 문화공간 확대 및 지원 6-1-4. 스포츠 활동 증진 6-1-5. 건강 및 뷰티 산업 활성화
	6-2. 금융·창업 관련 산업 육성	6-2-1. 전용 복합 문화 공간 운영 및 확대 지원 6-2-2. 금융상품 개발지원 및 경제교육 확대
	6-3 아동·청소년 산업 품질 관리 강화	6-3-1. 관련 산업 생산품 품질 모니터링
7. 지원체계	7-1. 아동·청소년 지원 인프라 강화	7-1-1. 아동·청소년 핵심역량 개발체계 구축 7-1-2. 아동·청소년 시설·단체 활성화 7-1-3. 아동·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및 지원 7-1-4. 아동전문인력 양성
	7-2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7-2-1. 아동·청소년정책 종합조정기능 강화 7-2-2. 아동·청소년정책지원체계 구축·운영 7-2-3. 지역 아동·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7-2-4. 아동·청소년통계 체계 정비 7-2-5. 아동·청소년분야 재정기반 확충

자료: 김승권 외(2008), 김미숙 외(2012)의 자료 재인용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정책 관련 중장기 계획

□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외의 관련 법률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5년을 주기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이행하고 있음.

○ 그러나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만으로는 정책 대상인 아동과 청소년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시책 시행의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도 함.

□ 본 연구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향후 5년 동안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 대상의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거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제1차 부산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 플랜(2010-2014)

□ 부산광역시는 2006년부터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기능적으로 아동복지와 청소년 활동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출생에서 자립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09년에 「제1차 부산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음(부산광역시, 2009).

□ 「제1차 부산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 플랜」은 정책 대상 연령을 0~24세까지로 하며,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라는 정책비전 아래, 5가지의 핵심영역을 두고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 5가지 핵심 영역은 ①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 ② 안전 및 보호, ③ 건강증진, ④ 역량개발, ⑤ 인프라 구축으로 나눌 수 있음. 핵심 영역에 따른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는 <표 1-Ⅱ-16>과 같음.

<표 1-Ⅱ-16> 제1차 부산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 플랜(2010-2014)

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인권과 평등이 살아 숨쉬는 부산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	1-1 권리증진 및 모니터링	1-1-1 아동청소년관련 종합적 정보 수집 및 분석 1-1-2 아동청소년 정책추진 협의체 구성 1-1-3 어린이주간 및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 1-1-4 청소년증 발급 및 복지기능강화 1-1-5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및 모니터링 1-1-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개발 및 통계관리 1-1-7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신문고 운영
	1-2 참여기회 확대	1-2-1 아동청소년 욕구조사 실시 1-2-2 아동청소년 참여 포럼 개최 1-2-3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1-2-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1-2-5 「N세대 창의프로젝트」 운영
	1-3 취약계층 기본 학교생활 유지 및 교육격차완화	1-3-1 학업중단학생 복교 지원 1-3-2 교육취약지구학교급식비 지원 1-3-3 어려운청소년학업장려금지원(기금) 1-3-4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1-3-5 소외계층 “IPTV 공부방” 설치 확대 1-3-6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3-7 청소년 공부방 운영 1-3-8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3-9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1-3-1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11 드림스타트 사업 1-3-12 교육복지시범학교 운영 지원 1-3-13 교육취약지구 학교시설 현대화 지원
2.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부산 (안전 및 보호)	2-1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2-1-1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1-2 배움터지킴이 운영지원 2-1-3 서·북 부산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운영 2-1-4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2-1-5 부산119 소방동요대회 개최 2-1-6 방범용 CCTV 시스템 통합구축
	2-2 위해행위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2-2-1 아동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실 운영 2-2-2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개최 2-2-3 아동학대·실종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2-2-4 아동성폭력 범죄예방 2-2-5 유해환경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2-2-6 금연권장구역 지정확대 2-2-7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2-2-8 청소년 약물예방사업 지원

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2-2-9 청소년 대상 모범업소 선정 2-2-10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지정 운영 2-2-11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 및 지도단속
	2-3 학교폭력예방보호	2-3-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2-3-2 학교폭력예방대책 2-3-3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지원 2-3-4 찾아가는 학교상담
	2-4 위기·취약청소년 지원강화	2-4-1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2-4-2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2-4-3 시설보호아동 지원 2-4-4 시설보호아동 행사지원 2-4-5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2-4-6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보호 2-4-7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자립지원금 지원 2-4-8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등 대학등록금 지원 2-4-9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2-4-10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2-4-11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지원(양육보조금지원) 2-4-12 소년소녀가정과 후원자 만남의 행사 2-4-13 디딤씨앗통장 운영기관 지원 2-4-14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2-4-15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2-4-16 입양기관 운영 2-4-17 입양의 날 행사 2-4-18 입양장려금 지원 2-4-19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 2-4-20 퇴소아동·종사자 교육프로그램운영
3. 생기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 (건강증진)	3-1 건강한 신체발달 및 질병예방	3-1-1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 3-1-2 체능교실운영 3-1-3 학교우유급식 3-1-4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3-1-5 취학전 아동 비만사업운영 3-1-6 아동척추측만증 및 비만학생 예방사업
	3-2 정신건강 증진	3-2-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관련 「부모교실」 운영 3-2-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관련 「전문가 교육」 운영 3-2-3 정보문화센터(인터넷 중독예방)운영 3-2-4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사업 3-2-5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
4. 꿈과 배움의 도시 부산 (역량개발)	4-1 청소년활동 기반조성	4-1-1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자원봉사센터 운영 4-1-2 청소년문화존 4-1-3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4-1-4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운영
	4-2 문화예술·체험활동	4-2-1 한국청소년 합창콩쿠르 4-2-2 부산청소년 민속예술제 4-2-3 청소년 문화축전 4-2-4 부산청소년 예술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4-2-5 부산국제어린이 영화제 4-2-6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 4-2-7 역사체험 박물관프로그램 4-2-8 친숙한 미술관 프로그램
	4-3 글로벌 역량강화	4-3-1 Busan Global Viliage 운영 4-3-2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 4-3-3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4-3-4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연합청소년 캠프 4-3-5 어려운 청소년 해외탐방 4-3-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5.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부산 (인프라 구축)	5-1 아동청소년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5-1-1 아동청소년 지도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5-1-2 아동복지시설 인력충원 지원 5-1-3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5-1-4 청소년시설운영자 연수 5-1-5 아동시설운영자 연수
	5-2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	5-2-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5-2-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5-2-3 청소년지원센터운영 5-2-4 아동맞춤형 성교육운영 5-2-5 일시청소년 쉼터 5-2-6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5-2-7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5-2-8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운영
	5-3 아동청소년시설확충	5-3-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장·이전 5-3-2 청소년수련시설확대

자료: 부산광역시(2009)의 자료 재구성

(2)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 (2013~2017)

□ 경기도에서는 2008년 경기도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한 바 있음. 그러나 2009년 경기도 내 보건복지국 관할이던 아동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해 여성가족국으로 이관되면서 아동, 청소년 업무 통합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아동 복지와 보호 분야의 사업이 포함되어 변경·수립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전경숙, 최윤선, 이의정, 2012). 이에 따라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됨.

○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9~24세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아동·청소년이 꿈꾸는 희망찬 미래 경기도’라는 정책비전 아래, ‘성장, 통합, 안전’이라는 정책이념을 갖고, 4대 전략목표

를 선정하여 12개의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표 II-17〉과 같음.

〈표 1-II-17〉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안) (2013~2017)

핵심영역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역량강화	1-1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1-1-1 지역사회 체험활동 활성화 1-1-2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 1-1-3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 1-1-4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 강화
	1-2 청소년 직업역량 개발 및 청년층 성인기 이행지원	1-2-1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지원 1-2-2 청년층 생애설계지원 강화 1-2-3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 확대
	1-3 글로벌 역량 강화	1-3-1 다문화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 1-3-2 해외체험활동 활성화 1-3-3 시민의식/공동체의식/경기도 정주의식 함양
2.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	2-1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	2-1-1 아동·청소년 신체건강 증진 체계 구축 2-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2-2 위기·취약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2-2-1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2-2-2 위기 아동·청소년 치료지원 확대 2-2-3 농촌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2-2-4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2-2-5 장애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증진
	2-3 요보호 아동 지원 내실화	2-3-1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역량 강화 2-3-2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 돌봄 확대 2-3-3 요보호 아동 지원 확대
3. 아동·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3-1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3-1-1 아동·청소년 친화환경 조성 3-1-2 지역사회 유해환경 규제 강화
	3-2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3-2-1 유익매체 환경 조성 및 교육 확대 3-2-2 세대간 이해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
	3-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3-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3-3-2 성교육 시스템 내실화
4. 정책추진체계 정비	4-1 정책추진 인프라 확충	4-1-1 아동·청소년 조례 제정 4-1-2 아동·청소년 재원 확충 및 기금 확대 4-1-3 정책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비
	4-2 정책지원 인프라 정비	4-2-1 정책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도자 역량강화 4-2-2 통계시스템 및 실태조사체계 구축
	4-3 정책 환류체계 구축	4-3-1 아동·청소년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 4-3-2 도민 정책 홍보

자료: 전경숙 외(2012) p137의 자료 재인용

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40개) 내 아동정책 관련 과제

□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 -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4대 국정기조(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와 그에 따른 14대 추진전략, 그리고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 140개 국정과제 중 추진계획 내에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대상 연령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언급하였거나, 아동이 정책 대상으로서 작간접적으로 포괄되는 관련 과제는 <표 1-Ⅱ-18>과 같음.

○ 아동이 직접 대상으로서 포괄되는 국정과제에는 교육비 부담경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됨. 더불어 아동이 속한 가정이나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통해 아동을 간접 대상으로서 포괄하는 국정과제로는 건강한 가정 만들기,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등이 해당될 수 있음.

<표 1-Ⅱ-18>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내 아동정책 관련 과제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과제번호	과제내용
경제부흥	민생경제	27	주거안정대책 강화(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28	서민금융부담 완화(국민행복기금)
		29	교육비 부담경감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 사교육비 경감 추진(공교육 정상화 촉진특별법 제정)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국민행복	맞춤형 고용·복지	43	저소득층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4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45	건강한 가정 만들기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50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
		51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강화
		52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53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	
		과제번호	과제내용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59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6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창의교육	66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67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국민안전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78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79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81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8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사회통합	101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문화융성	문화참여확대	108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문화와 산업의 융합	116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의 자료 재구성

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의 생존 및 보호, 발달, 참여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 조약을 비준하였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Preamble), 제1부(Part 1), 제2부(Part 2), 제3부(Part 3)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문에는 협약의 기본 정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부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제2부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의 이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부는 협약에 따른 부가적인 행정규정을 다루고 있음(김미숙 외, 2012).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부를 통해 아동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명시한 총 41개 조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1-Ⅱ-19 참조).
 - 먼저 협약 제1조에서는 아동을 ‘만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를 통해 아동의 인종, 피부색, 종교, 능력여부, 성별 등에 따라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무차별의 원칙, 제3조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기관, 입법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조에서는 아동의 권리실현에 모든 강요한 자원과 조치를 동원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음.
 - 제5조를 통해서 아동권리 이행시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동이 속한 가정과 관련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는 제9조(부모로부터의 분리와 관련된 권리), 제10조(가족과의 재결합), 제11조(타국으로 아동을 불법이송 금지), 제18조(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책임)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
 - 더불어 아동이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관련된 내용(제19조)과 가정환경이 박탈된 아동에 대해 특별보호 및 지원을 제공(제20조)하고, 입양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제21조), 양육지정이 조치된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게 할 것(제25조)과 제27조를 통해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제6조~8조에서는 아동의 생존권(제6조), 출생등록·성명권·국적취득권 및 부모의 돌봄을 받을 권리(제7조)와 신분을 보장 받을 권리(제8조)를 규정함.
- 또한 아동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와 자유를 아동의 견해 존중(제12조), 표현의 자유 보장(제13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보호권(제16조), 대중매체 및 정보의 접근권(제17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금 및 처벌의 금지(제37조)의 내용이 담긴 조항을 통해 명시하고 있음.
- 제28조~29조에서는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권리, 제31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23조, 제24조를 통해 장애아동의 특별호보 및 지원에 대한 권리(제23조)와 아동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제24조), 제26조에서는 아동이 사회보장제도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
- 협약에서는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 또한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는 난민아동의 적절한 보호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조항(제22조)과 법적인 분쟁상황 하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제37조, 제39조, 제40조), 경제적, 성적착취와 매매, 유괴 등의 착취상황에 놓인 아동의 보호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제32조~35조), 전쟁 및 무력분쟁시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을 삼가 할 것을 규정한 조항(제38조)이 해당됨.
- 마지막으로 제41조를 통해 협약이 이행당사국의 국내법과 당사국에 대해 효력을 갖는 국제법을 포함하여 아동권리 보장 및 실현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상위법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표 1-Ⅱ-19〉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조항별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조	아동의 정의(만18세 미만인 자)	22조	난민아동의 권리(난민아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 및 인도적 지원)
2조	무차별 원칙(인종, 피부색, 종교, 능력 여부, 성별, 언어, 출신배경, 재산,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	23조	장애아동의 특별보호 및 지원 권리(장애아동의 자립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수호(특히 성인, 아동 관련기관, 입법 및 행정기관 등)	24조	건강 및 보건서비스권(아동의 건강유지 및 치료와 회복의 권리)
4조	권리보호(권리실현에 모든 가용자원 및 조치 동원할 의무)	25조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의 보호와 치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권리
5조	부모의 감독과 지도(아동권리 이행시 부모의 적절한 감독·지도 존중)	26조	사회보장제도를 제공받을 권리
6조	생존권(아동의 생존과 발전 보장)	27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7조	출생등록·성명권·국적취득권 및 부모의 돌봄을 받을 권리	28조	교육의 권리(초등 의무교육, 상급교육에 대한 균등기회 제공,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존엄성에 합치될 것)
8조	신분보장(국적·성명·가족관계 등 아동 신분의 보존 및 회복권)	29조	교육의 목표(아동인격 및 능력개발, 인권존중, 부모·문화 존중 등 5개 목표)
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관련 권리(부모와 함께 살 권리, 분리 시 면접교섭, 연락 및 기타 관계 유지의 권리)	30조	소수민족/원주민 아동의 권리(고유 문화, 언어, 종교 등에 대한 권리)
10조	가족 재결합(부모와 아동의 거주국이 다르더라도 가족재결합 및 개인적 관계유지를 위한 국가간 이동의 자유권)	31조	여가놀이·문화활동의 권리(아동의 쉼,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
11조	남치로부터의 보호권리(타국으로 아동의 불법이송 금지)	32조	아동노동시 보호권(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12조	아동의 견해 존중(아동의 의사표시 존중 및 적절한 표시 기회 제공)	33조	약물남용으로부터 보호권(해로운 약물의 사용 및 거래에 아동의 이용 금지)
13조	표현의 자유	34조	성착취로부터 보호(모든 유형의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보호)
14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5조	납치, 매매 및 거래로부터 보호
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36조	기타 유형의 착취로부터 보호
16조	사생활보호권	37조	구금 및 처벌금지(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하거나 해로운 처벌의 금지)
17조	대중매체 및 정보의 접근권	38조	전쟁 및 무력분쟁 시 동원금지(15세 미만 아동의 징병을 삼감)
18조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국가의 책임	39조	아동피해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 촉진
19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40조	청소년 사법권(위법·고소된 아동의 사법지원 및 공정한 절차 보장, 형법위반 능력에 대한 최저연령 설정)
20조	가정환경이 박탈된 아동에 대한 특별 보호 및 지원의 권리		
21조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에 입각할 권리(아동의 입양 및 위탁양육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 및 양육되어야 함)	41조	상위법의 존중(본 협약내용은 국내법 혹은 효력 있는 국제법 중 보다 넓은 범위의 아동권리보호가 가능한 법에 영향을 주지 못함)

자료 : 김미숙 외(2012)의 pp.81-82의 표 재인용.

□ 이와 더불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1년도에 개최된 회의에서 조약 비준국의 보고서의 구조화 및 보고 편의를 위해, 협약에 제시된 조항들을 내용에 따라 8개의 영역(Cluster)로 구분하였음(우병창, 2011; 김미숙 외, 2012). 협약 전반을 8개 영역별로 나눈 세부 내용은 <표 1-Ⅱ-20>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1-Ⅱ-20>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역(Cluster)별 세부내용

영역	주요내용	협약 관련조항
1. 일반이행조치	1.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방안 2.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 및 지방기관 현황 및 계획	4조, 42조, 44-6항
2. 아동의 정의	1. 관련 법규의 연령규정 및 최소연령 등	1조
3. 일반원칙	1. 무차별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3. 아동의 생명, 존중 및 아동발달권 4. 아동 견해의 존중	2조, 3조, 6조, 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이름과 국적 2. 신분의 유지 3. 표현의 자유 4.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 5.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 집회 및 결사의 자유 7. 사생활의 보호 8.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7조, 8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37조(a)
5.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1. 부모의 지도 2. 부모의 책임 3. 부모로부터의 분리 4. 가족의 재결합 5. 아동 양육비 회수 6. 가정환경 상실 아동 7. 입양 8. 불법이송 및 미귀환 9.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0.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5조, 18-1항, 18-2항, 9조, 10조, 27-4항, 20조, 21조, 11조, 19조, 39조, 25조
6. 기초보건 및 복지	1. 생존 및 발달 2. 장애아동 3. 보건서비스 4.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5. 생활수준	6-2항, 23조, 24조, 26조, 18-3항, 27-1항, 27-2항, 27-3항
7.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1. 교육(직업훈련 포함) 2. 교육의 목표 3. 여가 오락활동 및 방과후서비스	28조, 29조, 31조
8. 특별보호조치	1. 비상상황하의 아동: 난민, 무력분쟁상 아동 2. 법적 분쟁상의 아동: 사법행정, 자유상실 아동, 형의 선고, 회복과 사회복귀 3. 착취상황하의 아동: 경제적 착취, 약물남용, 성적착취 및 성학대 기타 착취, 매매거래 및 유괴 4. 소수민족 및 원주민	22조, 38조, 39조, 40조, 37조, 39조, 32조, 33조, 34조, 35조, 26조, 39조, 30조

자료 : 김미숙 외(2012)의 p.84의 표 재인용.

마.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심의결과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 2008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7일에 열린 제1668차 회의에서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전달하였음.

○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영역(Cluster) 중 따른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 조치로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음. 더불어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후속조치 및 배포, 차기 보고서에 대한 권고 사항도 담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협약의 영역별로 제시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자세한 내용은 표 1-Ⅱ-21 참조).

○ 일반이행조치

－ 일반이행조치 영역에 관한 권고사항은 협약 제4조, 42조, 44(6)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기존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촉구와 유보 조항 철회, 입법, 조정, 국가행동계획, 독립모니터링, 자원 할당, 자료 수집,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국제협력, 아동권리와 재계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원칙

－ 일반원칙 영역에 관한 권고사항은 협약 제2조, 3조, 6조, 12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 비차별과 아동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실시 및 정책, 제도·행정적 방안 이행 등과 같은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것과 교육, 정책,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 견해를 존중할 것을 권고함.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의 권고사항은 협약 제7조, 8조, 13~17조, 19조, 37(a)에 근거하여 부모의 법적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

생시 신고가 되도록 하고, 출생신고에 생물학적 부모가 명시되도록 보장할 것을 다루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적절한 보고체계의 마련, 법적 신고의무의 강화, 보호기관의 증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함.

○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영역에서는 가정환경상실 아동, 즉 가정외보호아동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교육과 더불어 대안돌봄기관을 체계적·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함. 또한 대안돌봄시설 내에 아동 학대 관련 사항에 대한 접수, 조사,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이 친부모를 찾거나 친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입양과 관련해서는 헤이그 협약 제6조에 따라 중앙입양정보원(현 중앙입양원)의 역할과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임무권한 규정 및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 입양과정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음.

○ 기초보건 및 복지

-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건강 및 보건서비스에서 총예산 대비 보건 예산 수준 증가 및 저소득 가정의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의료시설 체계 구축,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건(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식품, 성교육 등)에 관한 사항, 법률 내 아동복지재원 배정에 관한 구체적 의무 조항 포함한 법 개정 등과 같은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과 생활수준에 관한 내용을 권고함.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영역을 통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공교육을 강화

하기 위한 노력 증진과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 학교폭력 감소 등에 대한 내용을 권고하고 있음.

○ 특별보호조치

-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 등과,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상황의 아동의 교육권 및 권리보장,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에 대한 감독 기능, 규제를 위한 법조항 제정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와 인신매매, 아동매매의 억제 및 처벌의 위한 조치,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합치를 위한 조치, 소년사법운영과 범죄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 1-Ⅱ-21〉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구분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1.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기존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유보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협약 21조(a)항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자인 모든 아동이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판결 재검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보장하는 협약 40조 2항(b)(v)에 대한 유보 철회
	입법	-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
	조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거나, 가급적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 설립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인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의 명확화
	국가행동계획	- 협약의 전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 채택 및 시행
	독립 모니터링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지위 규정 및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환경 제공
	자원의 할당	-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자원 수준의 검토 및 증가 - 아동권리 관점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배정 평가 - 국가예산 수립시 예산 내 아동위한 자원의 배분 및 사용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 제공 - 자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 기반 예산수립 도입 - 아동 포함하는 공개대회를 통한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 보장 -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빈곤아동, 취약계층 아동,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 자녀)을 위한 전략적 예산병안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

구분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 긴급 상황에서도 이 예산 지켜지도록 할 것 -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평의 위원회 권고안 고려
	자료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고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 설립 및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다각적 연구 착수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 포함 -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에게 협약과 관련한 충분한 연수 받도록 할 것 - 협약의 대중 인지도 높이는 방안 강화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국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도달하고, 가능하면 이를 넘어설 것 -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중요 우선순위가 되도록 할 것
	아동권리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도입하도록 법체제 마련을 통한 효과적 기업사회책임 모델 도입 촉진 -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 반드시 실시
2.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 신속히 제정 -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하여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하여,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 제공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실시 및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 - 모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및 충분한 수의 사후복지요원 지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 -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 둘 것
	아동견해의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포함하도록 개정 -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 촉진, 아동 견해 존중되도록 입법 조치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 취할 것 -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 청문권과 아동의 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 아동 견해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조)	출생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할 것 -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할 것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경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 - 종교적 다양성 존중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형성을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12-17조에 비추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 및 수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회와 표현의 자유 완전히

구분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p>누릴 수 있도록 할 것</p> <p>체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 체벌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 체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 실시 -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p>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위한 적절한 보고체계 마련하고,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의무 강화 및 확대 - 지역시설을 포함하여 더 많은 보호기관 설립하고, 학대 및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재활지원 제공할 것 더불어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배정
<p>4. 가정환경 및 대리보호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p>	<p>가정환경 상실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 -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 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 보장하고, 학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p>5. 기초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p>	<p>장애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 제공 - 장애아동의 교육요구의 충족, 교육을 받기에 용이한 환경 조성 등 - 장애아동에관한특수교육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p>건강 및 보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예산 대비 보건예산 수준 늘릴 것 -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 구축 -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 늘릴 것
	<p>정신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 개발할 것 - 자살행동, 특히 영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활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할 것 -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한 시설 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 -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조치 마련
	<p>청소년 보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 늘릴 것 -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양식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습관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 도움 것

구분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 판매 규제하는 추가적 조치 취할 것 -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상 아동복지 증진 의무 규정되어있지 않는 것 우려됨. - 법률에 아동복지지원 배정에 관련한 구체적 의무적 조항 포함되도록 법 개정 고려할 것 - 빈곤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 보장되도록 할 것
6.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2001)을 고려하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 평가 - 사교육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된 대학진학시 불평등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하기 위한 노력 증진할 것 -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 보장 - 학교 접근성 평등을 실현하는 데에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 특히 외국 출신 아동에 주의를 기울여 학교폭력(bullying)의 방지하고, 학교 폭력 감소를 목표로 하는 계획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강화 할 것 이 조차에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 포함할 것
7.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망명희망자의 자녀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할 것 -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게 재정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의 권리에 대한 특별교육연수 제공할 것 -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급을 삼가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최대구급일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 시행할 것
이주 상황의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및 전략 개발하고 채택할 것 - 대한민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을 아끼하는 근본적 사회경제적 요인 해결을 위한 조치 취할 것 - 야간근무금지,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기준 엄격히 시행 할 것 - 변칙적 노동관행 규제하는 추가적 법 조항 제정 -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 개선 - 근로환경에서 폭력,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제공하고, 해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 보장
성적 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 취할 것 -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인수하는 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 성적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노력 할 것 -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성범죄자 교화를 위한 노력 계속할 것 - 여아 뿐만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 제공하고, 인신 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여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구분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인신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할 것 -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고려할 것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 -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 취할 것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금지할 것 -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 이루도록 보장할 것 -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
소년사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 설립 - 형법위반 혐의를 받은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제공 - 교화시설 또는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정기적인 연락 유지, 음식, 교육, 직업훈련 제공 - 자유를 박탈 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 결정에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한 회복적 사법이나 상담 등 대안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
범죄 피해자 및 증인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아동이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법률조항과 규제를 통해 모든 범죄 피해 아동이나 범죄의 증인이 된 아동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 관련 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자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

자료: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의 내용 재구성

3. 외국의 기본계획

가. 미국의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⁴⁾

□ 미국의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Child Injury Prevention)’은 2012년 미국 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소속 질병관리센터(CDC: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주도로 미국 내에서 아동 상해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국가차원에서 아동 상해 예방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수립되었음.

○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의 주요 목적은 첫째, 연방정부, 주 정부, 지역 정부, 자선단체, 기업, NGO, 학교, 보험회사, 보건계통 종사자, 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미국의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동 상해 예방 지침을 제공하고, 둘째, 아동 상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기존의 사항들이 가진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며, 국가 차원에서 아동 상해로 인한 사망과 사고피해를 줄이는 데에 있음.

□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6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은 3-5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각 영역과 영역별 목표를 살펴보면 <표 1-II-21>과 같음.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2012)의 내용 요약발췌하였음.

〈표 1-Ⅱ-22〉 미국 아동상해예방 국가행동계획의 영역 및 목표

영역	목표
1. 데이터 및 관리·감독	기존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개선
	데이터 격차해소를 위한 데이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강화
	데이터 접근성 개선
	관리·감독 데이터의 분석, 해석 및 보급 개선
2. 연구	아동상해와 관련한 위험 및 예방요소, 개입 효과성, 지식 전달 등과 관련한 다 학제적 연구 수행을 통해 아동 상해 예방 지식과 관련된 격차 감소
	아동 상해 관련 연구를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력 및 조정
	아동 상해와 관련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수행
3. 홍보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해 타겟팅 되고 강력하며 일관적인 메시지 전달 및 개발
	아동 상해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대상별 홍보 채널 및 자원 사용
	홍보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지역, 지방정부, 연방정부 간의 파트너십 구축 및 강화
4. 교육 및 훈련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해 상해 위험과 효과적인 대응책에 관한 대중교육 실시
	대상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증거기반의 자료, 도구 등의 개발
	동종 건강 전문가에 대한 아동 상해 관련 교육 및 훈련 실행 및 보급
	학교, 지역사회, 새로운 전문가들에게 아동 상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한 장소 개발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한 전략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 이용
5. 보건 체계	상해 예방을 통한 아동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 체계 개혁의 기회 마련
	가정진료(medical home)로의 아동 상해 예방 통합
	아동 및 청소년 상해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건강관리 기반 서비스 및 시스템 확대
	아동의 상해를 예방을 위해 보건 체계 환경 내에서의 첨단기술 사용 및 개발
6. 정책	정책입안자 등에게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한 필수요건 및 우선순위 제시
	아동 상해 예방을 위한 증거기반의 법률 및 정책 채택 및 시행 지원
	기존의 아동 상해 예방 정책 강화 및 준수

자료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2012) pp.79-90의 내용 재구성.

2. 영국의 아동 입양을 위한 행동계획⁵⁾

□ 영국 교육부에서는 2012년에 ‘아동 입양을 위한 행동계획(An Action Plan for Adoption-Tackling Delay)’을 수립함. 해당 행동계획은 특히 입양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과 제안 사항을 담고 있음. 즉, 더 많은 아동이 입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양 체계의 전 과정에 있어 빠르고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계획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음.

□ ‘아동 입양을 위한 행동계획’은 입양 지연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

○ 아동 입양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기존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 사회복지사는 아동 입양 절차에서 입양에 필요한 근거 수집, 친부모와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입양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아동 최선 이익의 보장을 위해 입양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재량에 따른 결정권이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영국에서는 2011년 초부터 사회복지 전문학교(the College of Social Work)를 통해 사회복지사 양성 및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질적 수준이 높은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사회복지 전문학교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돌봄과 입양이 전문 분야인 사회복지사들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더불어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의 판사 양성 시에도 아동의 성장단계 및 입양 지연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여파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함.

○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양 패널)

- 아동의 입양을 결정할 때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입

5) Department for Education(2011)의 내용을 요약발췌하였음.

양패널과 같은 체계를 활용하여 입양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중복을 피하고 의사결정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함.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게 하는 데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Farmer et al., 2010).

- 입양패널은 5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적어도 사회복지사 1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구성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입양패널의 역할은 예비 입양부모를 승인하고 입양이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국가적인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 자원 활용

- 아동의 영구적인 배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동이 적합한 입양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동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이와 동시에 아동이 적합한 가정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아동에 관한 최신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예비 입양부모 대상의 새로운 방식의 훈련 및 사정

- 아동 입양을 고려하는 예비 입양부모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입양과 관련한 훈련 및 평가가정을 거쳐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들이 적절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의 입양을 위한 훈련 및 사정은 2단계로 이루어짐(1단계 사전자격심사(2개월), 2단계 심층 사정(4개월)). 그러나 이미 입양 경험이 있거나 위탁부모가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할 때에는 그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입양 체계 통하는 새로운 게이트웨이(gateway) 구축

- 입양 체계로 통하는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입양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 상담과 웹사이트와 같은 중앙 컨택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입양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입양 절차를 도움.
- 또한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그들이 거주

하는 지역에서 적절한 입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양과 관련한 상담의 진행 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입양 가정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지원개선 - 입양여권(adoption passport)
 - 입양 가정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입양여권(adoption passport)’을 제작함. 입양여권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지원을 보장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아동이 입양될 경우 그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입양 지연 개선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 가족사법체계 검토과정을 통해 법원을 거쳐 입양 되는 아동의 입양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함.
 - 또한 전국의 가정법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공개였고, 모든 소송절차를 6개월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여 가정법원의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소송절차와 주요 지표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주요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보다 빨리 적절한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함.
- 입양 성과표(adoption scorecard)
 - 취약한 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아동을 대변하여 지역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입양 성과표(adoption scorecard)를 도입하여 지역 정부가 매년 새롭게 데이터를 출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입양 성과표는 지역 정부가 신속하게 입양을 성사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정부 스스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객관화시킨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2014년 8월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입양 성과관리표가 훈련 및 평가 과정을 준비하며 입양이 성사되기까지의 기간을 평가할 계획임.
 - 입양 성과표의 지표의 구체적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보호시설로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한 가정에 입양이 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측정함.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입양 부모, 법원 및 가정사법체계와 함께 이 과정을 주도함.
- 같은 기간 내에 입양이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는 아동의 비율을 확인함. 이 지표를 통해 아동의 대기시간을 측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지체되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법원이 입양을 승인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가정으로 연결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측정을 통해, 아동이 입양될 가정과 연결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및 그 효과성을 평가함.

3. 호주의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 ‘아동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⁶⁾

□ 호주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인 ‘아동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를 수립하였음. 이 프레임워크는 상위레벨의 결정사항 및 그 성과목표를 담고 있으며, 3개년 실행계획과 국가체계의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략 기획이 포함됨.

○ ‘아동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의 최상위 목표는 호주 아동과 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있음. 최상위 목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영역에서 아동 학대 및 방임의 지속적인 감소’를 타겟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하위지표를 통해 해당 사항을 측정함.

- 아동의 건강, 발달 및 복지(wellbeing)에 관한 주요한 국가 지표 흐름 파악
- 3세 미만의 아동이 방임 및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가게 된 동향 파악
- 입증된 아동보호 사례의 동향 파악
- 가정외보호아동의 규모 파악

6) 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2009)의 내용 요약·발췌하였음.

□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실행 중인 ‘아동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에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주요 성과목표는 총 6가지로 제시되어 있으며, 성과목표에 따른 추진전략은 <표 1-Ⅱ-23>과 같음

- 아동이 안전하고 지지적인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의 성장
- 아동과 그 가정의 안전성 향상과 조기개입을 위한 적절한 지원
-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위험 요소를 제거
- 학대나 방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책 및 필요한 안전과 복지 서비스 보장
- 호주 원주민 아동 지원 및 그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전 보장
- 아동 성학대 및 성적 착취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표 1-Ⅱ-23> 호주의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의 성과목표 및 전략

성과목표	전략
1. 안전하고 지지적인 가정 및 지역 사회에서의 성장	1.1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의 능력 강화
	1.2 아동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1.3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커니즘 개발 및 이행
2. 아동과 가정을 위한 안전성 향상과 조기개입을 위한 적절한 지원	2.1 아동과 그 가정의 생애주기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설계, 계획 및 전달을 위한 통합적 접근의 이행
	2.2 연방정부 및 중앙정부와 NGO 간에 취약가정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최신 정보의 개발
	2.3 모든 아동과 가정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2.4 가장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위기아동과 가정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 및 지원책 강화
	2.5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인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우선적 접근 제공
3.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 요소 제거	3.1 가정에게 추가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알콜 및 약물 남용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
	3.2 가정 내 폭력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3.3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책 확충
	3.4 위기가정 및 위기아동을 위한 주거 서비스 확충

성과목표	전략
	3.5 위기아동의 욕구 부응을 위한 성인 중심의 서비스, 취약한 가정의 욕구 부응을 위한 아동 중심의 서비스, 위기아동을 규정하기 위한 폭넓은 시스템의 수용성 및 수용능력 확대
4. 학대나 방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책 및 필요한 안전과 복지 서비스 보장	4.1 학대나 방임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4.2 아동의 조부모, 위탁부모 및 친인척과 같은 양육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4.3 가정외보호체계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한 지원책 향상
	4.4 아동보호서비스 내에서의 국가적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한 지원
5. 호주 원주민 아동 지원 및 그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전 보장	5.1 호주 원주민 아동 및 그 가정에 필요한 주요 서비스 접근성 확대
	5.2 호주 원주민 지역사회의 강화 및 안전성 발달을 위한 방안 마련
	5.3 호주 원주민 아동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보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 강화
6.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6.1 온라인 성착취를 포함한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6.2 아동 성학대 예방 전략 강화
	6.3 아동 성학대 및 성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 집행 및 사법 체계 강화
	6.4 성학대 피해아동이 효과적인 치료 및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자료 : 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2009)의 pp.15-33의 내용 재구성.

□ ‘아동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 이행을 위해 아동 개인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아동: 그들 스스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함.

○ 부모와 가족: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며 아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참여함.

○ 지역사회: 아동, 특히 취약 가정에서 자란 아동을 지원하고 모든 아이들이 지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 비정부기구: 정책과 프로그램과 과학적 근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여하고 아동 안전, 보호, 권리 및 복지를 적극적으로 옹호함.

○ 기업: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아동 부양을 위해 부모를 지원함. 직접적 자

금 지원, 직원들의 자선 사업과 같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돕는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역 정부: 아동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및 지역 시설을 포함하여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함.
- 주(州)연방 직할지 정부의 대표: 아동 폭력과 방임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원 및 조기개입 시도하며, 비정부기구와 조율하여 자금을 지원함.
- 중앙정부: 보편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족 안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가족과 아동에게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비스(가족수당, 육아수당, 세금공제 등)를 제공함.



Ⅲ.

기본계획 방향 및 추진분야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분야 구성 및 목표
3.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

III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분야 <

<

1. 기본방향 및 비전

□ 기존 아동정책의 한계

-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폐해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시각에 대한 방향전환이 필요함.
 - 우리 사회는 모든 아동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고, 아동은 선거권이 없어서 아동의 복지는 정책의 최우선에서 항상 밀려있음.
 - 아동정책은 정부의 다른 정책에 비해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취약했음.

□ 기본방향

- 이번에 최초로 수립되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 아동의 실태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기본계획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양육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을 우리 자녀로 인식하고 양육하는 기본시각을 필요로 하며, 이때 모든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비전

- ‘모아플랜’, 즉 모두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만들기로 함.
 - 기존에는 아동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미약했음. 점차 아동이 우리의 미래 생산인력이자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세대임을 인식하여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지는 움직임이 서구에서부터 일고 있음.
 - ‘모아플랜’의 앞의 2글자는 영어로는 ‘more’로서 각 영역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내포.

○ 목적

- 최종목적은 ‘아동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보장’을 설정함.

2. 비전 및 추진과제

비전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 만들기 (모아플랜)		
목적	아동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보장		
추진 분야	역량과 참여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보호와 돌봄 강화
추진 과제	학업과 여가 균형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아동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성 제고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	차별없는 사회 구축
		안전환경 구축	
	사회참여 증진	사회적 안전확보	지역사회보호 강화
인프라	조직개편	예산확충	
	전문인력 확보	평가체계 도입	

3.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

I. 역량과 참여증진		
추진과제	정책과제	
1-1. 학업과 여가의 균형	1-1-1. 교육제도 개선	학업시간 축소 및 교과목 시간 안배
		자유학기제(집중학기제, 체험학습)
		대학서열화 개선
	1-1-2. 여가 인프라 확충	여가기반 인프라 확충
		협동심 제고 및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체육활동 확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1-1-3. 아동친화도시 구축	아동친화도시 구축
1-2. 사회성 제고	1-2-1. 일반아동의 사회성 제고	아동의 관계지향성 제고를 위한 제도 확충
		각종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1-2-2. 취약아동 사회성 제고: 은둔형, NEET	은둔형 외톨이 아동 지원
		니트(NEET)족 대책 마련
1-3. 사회참여 증진	1-3-1. 학교내 참여활동 활성화	수업에서 학생참여 제고를 위한 학생참여형 수업 설계
		학내 자치기구 내실화
		시민교육, 인권교육 강화
	1-3-2. 학교밖 참여기회 발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각종 위원회 내실화(아동총회, 청소년위원회 등)
		정치참여 제고 (선거연령 1세 하향 조정)
		아동 인권옹호 활동의 현실화
		아동친화적 기업 활성화
	1-3-3.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예산 수립시 아동청소년 참여 강화

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추진과제	정책과제	
2-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2-1-1. 영아기 건강보호사업	산전산후 관리
		신생아 건강증진사업
	2-1-2. 유아기 건강증진사업	공공시설에서의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관리 체계수립
		건강한 신체발달, 질병예방 및 치료관리체계의 확립
		건강생활실천 지원 강화
	2-1-3. 취학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신체발달 지원정책 강화
		비만예방
	2-1-4. 후기아동기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발달지원
		학교 보건관리 강화
		취약아동의 급식카드(식비지원)체계의 개선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생활실천지원체계 강화
2-2.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	2-2-1. 정신질환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	정신질환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위한 예방교육홍보사업
	2-2-2. 아동 중독,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매뉴얼 구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위한 법적규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연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후 사후조치에 관한 법적규정마련
		또래 상담 운영프로그램 강화
		아동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사업
		아동 정신건강 전문인력 자격요건 설정
	2-2-3. 아동정신건강 증진사업	소아정신장애 아동 부모대상 부모교육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
		교사대상 아동정신건강 증진교육
		취약계층 아동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증진 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증진 체계 및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교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
		국립트라우마 대응센터 설립 및 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
		아동 대상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 구축
		트라우마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추진과제	정책과제	
		트라우마 대응 위한 아동, 부모, 교사 교육
		정신질환 아동 지역사회 통합위한 가족상담 바우치 지원
	2-2-4. 아동 자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자살예방교육
		부모교육
		학교 및 학급대상 트라우마 대응사업
2-3. 안전한 환경 구축	2-3-1.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사업	가정사고 예방사업 확대
		안전한 주거환경 표준모델 개발지원
		안전한 주거시설 관리 감독
	2-3-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아동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법적 규제
		어린이보호 차량 안전성 개선사업
		아동 카시트 장착률 확대
		아동 자전거 등(바퀴달린 놀이기구)에 대한 규제
	2-3-3.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사업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강화
		식품안전교육강화
		식중독 상시예방체계 강화
	2-3-4.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사업	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유키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환경 안전성 강화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관리
		익사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 강화
	2-3-5. 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사업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안전교육 강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관 설립 및 확대
	2-3-6. 안전한 보육시설환경 조성사업	안전사고 보상체계 현실화
		보육시설 안전주치의제도
	2-3-7. 안전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아동·청소년안전정책 조정기구 설치
		아동·청소년안전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아동·청소년 안전 및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안전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네트워크 구축·운영
		어린이의 주기적 손상현황 파악

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추진과제	정책과제		
2-4. 사회적 안전 확보	2-4-1.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인식개선 및 규제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부처 연합 캠페인
			온라인-오프라인 인식 개선 운동
			폭력물 등급제 강화
			폭력유해물 규제 강화
			폭력물 정기 모니터링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사업 실효성 제고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실시
			산모, 예비부모 교육 등에서 폭력 및 인성에 대한 교육과정 확대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모색
		예방교육 강화	폭력예방교육 조기 실시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학급단위, 소그룹 단위 예방교육 확대
			예방교육 시수확보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강화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 확충
			학교폭력 피해 아동 중심 청소년 쉼터 확충
			지역사회 유관기관(공공 및 민간)과의 연계 구축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 바우처 실시
		학교폭력 치유 바우처 사업	학교폭력 가해 선도(치유) 전담 바우처 실시
			가해학생 선도 위한 전문인력 확충
			가해학생 선도시위 전담기관 확충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응
			실질적 학교폭력 피해보상 마련
			갈등조정 능력함양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점검 및 안전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강화
	2-4-2.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강화	공익광고를 통한 인식개선 도모
			아동대상 교육강화
			아동교육 담당 강사 양성
			부모 및 신고의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온라인 교육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학대 위험 노출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기능회복 및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추진과제	정책과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양형기준 상향 조정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경우 아동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제한
			검사 및 판사 등 법조계 인식 개선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 및 개입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아동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 정착 및 홍보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확충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개입 강화
			CCTV 모니터링 강화
	2-4-3. 실종아동 대상 예방 및 개입 강화	실종아동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사업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 TF 설치
			찾기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실종아동전문기관 확충(광역단위 거점)
		실종유괴 예방사업	인식교육 프로그램 강화
			실종예방관련 교사교육이수 의무화
			14-18세 연령확대에 따른 예방 프로그램 마련
			보호자 교육 강화
			실종고위험군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실종예방 ID 발급 및 보급
		실종아동 찾기사업	경찰관,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지문등록사업 홍보강화
			가족 대상 Child ID Kit 보급
		실종가족지원사업	기존 실종가족지원사업 강화
		실종 아동 관련 법제도 재정비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상카드 제출
			실종정보제공 및 실종아동 포스터 게시
			정보게시판 활용의무화

Ⅲ. 보호 및 돌봄 강화		
추진과제	정책과제	
	3-1-1. 가족의 기능강화	가족 지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아동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
		학교와 연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모교육 지원센터 설립
	3-1-2. 가족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가족기능 및 부모역할 강화를 통한 원가정 분리 예방대책 마련
		가정보호우선원칙의 실현을 위한 아동복지 제도적 기반 개편
	3-1-2.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국가책임성 강화	아동 출생시부터 국가차원 관리 보호망 구성
		보호대상 아동보호체계 개선
		고위험 아동 대상 서비스 기능 향상
		국가 차원의 생존권·발달권 보호
		교육권 보장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3-1-3. 저소득층 및 유사빈곤층 아동 보호망 구축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보장
	3-1-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노동참여아동 보호 (노동착취율 감소)
		미혼모 및 미혼모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향상
		입양대상 아동을 위한 제반 지원서비스 확대 (중앙입양원 설치)
		장애아동 교육권 보호를 통한 자립 및 사회참여 보장
	3-1-5. 가정 외 아동 보호 강화	퇴소아동의 자립률 향상
		보호대상아동의 친가족 복귀율 향상
3-2. 차별 없는 사회 구축	3-2-1. 소수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 다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교사 대상, 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률 확대
		사회적 평등과 소수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정책 수립
		우리 사회의 단일혈통주의와 같은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및 교육
		아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어 교육과 일방적인 문화전달에 중점을 둔 기존 교육정책 개선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모국어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기회 부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국어 및 모국 문화 교류 기회를 증대하여 이중언어 습득 가능성 개발(이중언어 교육 실시율)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 보고 지원정책 제공
		중도입국아동의 국적 취득 현실화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 및 의료 접근권 보장률

III. 보호 및 돌봄 강화		
추진과제	정책과제	
		중도입국아동 특성에 맞는 멘토링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부모교육 프로그램 포함)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시간 확충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정 간 자조모임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의 강화 및 확대
		비동반 북한이탈 청소년의 생존권 및 보호권, 발달권 보장
		북한이탈청소년의 주인의식 확립을 위한 정책 비전 수정
		현안 위주의 단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학교 중심으로 장기적·종합적인 교육 지원 대책 수립
	3-2-2. 농어촌 아동 발달 인프라 구축	농어촌 아동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및 문화시설 우선 지원
		농어촌을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적인 전달체계 수립
		농어촌 지역 특수성의 이해가 선행된 후 특성에 맞는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망 구축
		농어촌 지역 병원, 교육기관, 돌봄시설 등 사회서비스 기관 설립 장려(세제 혜택 등)
		희망나눔지원단 활용을 통한 농어촌 아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
		농어촌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위해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 실행 및 강화
		아동발달을 위한 아동도서 출판 및 보급 장려
		농어촌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도서 보급 정책 시행
	3-2-3. 청소년 계층화현상 해소: CDA(아동발달계좌) 의 점진적 확대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매 3년 마다 추진)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효과성 검증 근거를 마련
		빈곤가정 청소년 중 '나홀로 아동'을 지도 및 보호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 등 이용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빈곤청소년의 취약한 심리정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모관계 개선 pg 포함)
		빈곤청소년에 대한 교사 교육 및 교내 사회복지사 배치 등 학교사회복지 기능 강화
		빈곤가정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제공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및 학부모 참여 개선
		중앙부처 내 아동보육 및 방과후 활동 추진체계 구축
		교육, 노동, 경제정책과의 협력적 방안 모색을 통한 정책 수립
		CDA(아동발달계좌)의 확대
3-3. 지역사회 보호강 화	3-3-1. 학업중단 예방 및 가족지원 강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운영
	3-3-2. 학교 밖 청소년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Ⅲ. 보호 및 돌봄 강화		
추진과제	정책과제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학업 및 진로지원, 생활 및 건강지원, 활동 및 기타 지원)
	3-3-3.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법의 개입 강화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법에서의 개입 노력 강화
		경찰훈방시 조건부 선도 교육 확대
		저연령 아동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강화
		법원단계에서의 보호자 감호위탁 기준 강화
	3-3-4.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여건 마련	소년원 시설의 소규모화
		8호처분 전문기관 확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 기능 분리 (소년분류심사기관 확대)
		소년보호기관 담당자의 전문화
	3-3-5. 소년사법 경험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후 연계서비스 제공

IV. 인프라		
추진과제	정책과제	
4-1. 조직개편	4-1-1. 아동정책 총괄 조정 강화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조정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아동·청소년 통합 부서 설치)
		아동·청소년정책 R&D를 위한 연구원 및 인력공단 설치
		아동정책 총괄시스템 지원
	4-1-2. 정책 전달체계 정비	지역사회 수준의 아동 정책 전달체계 정비
		지자체별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실천여부 점검
		우수 실천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수여
	4-1-3.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중앙-지방-지역 서비스 중심축 통합 및 규모화, 지역중심의 서비스 비중 확대
		드림스타트센터의 시군구 내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또는 기관간 네트워크를 위한 허브 기능 확보 방안 마련
	4-1-4. 아동보호나 가정의 보호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화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 방안 마련
		헤이그협약에 맞는 아동임양절차 개편 및 입양기관 공공성 강화위한 방안 마련
		아동보호에서 가정외보호로 이어지는 과정 공공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시군구 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성화
	4-1-5. 방과후돌봄서비스 체계의 확립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및 특성화·전문화된 지역아동센터 체제 구축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간의 유기적 통합, 연계 구축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과후돌봄종합센터의 설치 통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조정
	4-1-6. 아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 마련 및 검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여성가족부 청소년희망센터 통합 및 16개 시도 설치
		NGO, NPO단체의 아동·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아동·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참여 지원
		아동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아동권리지표 제시 영역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및 모니터링 활성화
		심층사례분석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정도 평가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4-2. 예산확충	4-2-1. 아동 예산의 개편 및 확대	아동 예산의 대폭 확대
		지방이양사업 재검토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
		아동재원 확충
		지자체 평가기준으로 아동·청소년예산 일정 비율 확보 추진

IV. 인프라		
추진과제	정책과제	
		지방청소년기금 현황 파악 및 재원조달, 확충방안 마련
	4-2-2.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금 현실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의 관리운영비 및 표준건축비 상향 조정(시설별 차등지원 철폐 및 표준관리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기능보강비 지원
	4-2-3. 세제 개편을 통해 아동정책 활성화 도모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 신설
		특수목적세 신설, 아동기금 마련 등

제2부

아동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 I. 역량과 참여증진
- 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 III. 보호 및 돌봄 강화
- IV. 인프라



I .

역량과 참여증진

- 1-1. 학업과 여가의 균형
- 1-2. 사회성 제고
- 1-3. 사회참여증진

1-1. 학업과 여가의 균형

가.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학업시간

- 우리나라 아동의 긴 학습 및 짧은 여가시간은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사항임. 다양한 여가활동의 개발 및 아동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배정과 교사지원,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함.
 - 우리나라 아동의 학습시간은 미국보다 2배나 더 길고, 반면 수면시간은 2시간 적음(김기현, 2009).
 - 주 5일제 수업이 도입되었으나 전체 수업시수는 줄지 않고, 주중 학업시간이 늘어남.
 - 연간 수업일수는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되었으나, 수업시수가 줄어들지 않아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하여 학습부담이 증가함.
- (스트레스) 지난 5년간 아동의 스트레스는 초등생의 경우는 약간 증가. (1.82 → 2.02 (↑), 중고생은 거의 유사한 수준 (2.14 → 2.16).
 - 학업스트레스로 인하여 빈곤층보다 일반층의 스트레스가 더 높음.

□ 공교육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목적은 균형적인 인성발달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의 도구로 사용됨.
- 가족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과도한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희망교육수준은 대다수 아동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삶의 만족도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0으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낮은 수준임. OECD 기준으로는 61.5점으로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은 매우 낮은 편으로 우려의 수준임. 학업스트레스 등이 주요인으로 추정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화후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함.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터넷 중독, 비속서 사용 등 다른 위험요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함.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의 긴 학업시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적절한 학업과 여가의 안배가 필요함.

□ 방과후 활동의 불균형

- 평일 방과 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측정하였음.
-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은 평일 방과 후에 ‘학원이나 과외’(41.3%)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집에서 숙제하기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총 67.6%가 방과 후 시간을 주로 학습활동으로 보내고 있음.
- 반면 실제로 아동이 평일 방과후 하고 싶은 활동은 ‘집에서 쉬기’(30.2%) 및 ‘친구들과 놀기’(24.5%)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비율은 18.3%에 불과함.

□ 여가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피폐한 여가생활

- 우리나라 아동은 방과후 사교육으로 인해서 여가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여가 인프라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활동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남.
- UNICEF에서 개발한 아동결핍지수란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소유상태, 서비스 및 각종 기회충족여부(14항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활용 등은 비교적 양호한데, 정기적 취미활동(음악, 스포츠, 동아리 활동)의 결핍률이 52.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대체로 여가활동 및 각종 여가향유를 위한 인프라 관련 항목의 결핍수준이 높게 나타남.
- 취미활동, 스포츠 등(52.8%), 야외활동 장비보유(26.1%) 등임.
- 이러한 높은 결핍률로 인해서 아동결핍지수도 가장 높게 나타남.

나. 정책과제

1-1-1. 교육제도 개선

□ 학업시간 축소 및 교과목 시간 안배

○ 등교시간조정 9시 등교

-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는 등교시간이 9시로 조정된 바, 효과성 검토를 통해서 이의 전면 도입 필요성을 진단함.
- 9시 등교제에 의해서 아동의 수면시간이 증가되었고, 수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집중력이 향상 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난 반면, 늦어진 수업시간, 아침 진로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의 중단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서 심도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적절한 학업시간 추계

- 현재 과도한 학업시간으로 인해서 아동의 놀권리가 박탈되고 있음.

○ 주5일제 실시에 걸맞게 수업시수 하향 조정이 필요함

- 완전한 주5일제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수업일수와 함께 수업시수도 줄여야 함.
- 구체적인 시수는 연구를 통해서 정립해 가야 함.

○ 진학 중심의 학습을 탈피하여 다양한 과목시간 안배

- 진학 중심의 교과학습 지양
- 진로성숙도 제고를 위한 역량 제고 학습
 -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진로교육을 강화
-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 제공을 위해 지덕체 과목시수 확대
 -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하여 주말에 시행되었던 예체능과 체험학습이 위축됨으로 이를 부활하도록 해야 함.

□ 자유학기제(집중학기제, 체험학습)⁷⁾⁸⁾

○ 아동이 자유롭게 수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교수 방법 전환

- 참여·활동중심 수업강화
- 아동이 꿈을 가지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제고.

○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 진로설계 및 준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 강화

○ 학생의 시험부담 감소

- 중간·기말 등 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유학기는 고입에 미반영.

□ 대학서열화 개선

○ 모든 아동의 생활환경이 대입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염두에 두어 중장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서열화된 대학 실태 개선

- 이를 위한 연구개발 실시. 선진사례 검토 등

7)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edi.re.kr/khome/freesem/home/Home.do>

8) 자유학기제 도입 현황: 2013년 전국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 2014년 800여개 학교, 2015년에는 중학교 50%까지, 2016년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 (한국교육개발원, 2014).

1-1-2. 여가 인프라 확충

□ 여가기반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활동 개발
-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바우처 강화
 - 바우처의 유형 다양화
 - 바우처의 대상 확대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
 - 지역사회 근린지역에 체육시설, 야구장, 미술관, 수영장 등 확충
 - 독일사례: 지역사회 공원 확충시 청소년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제화함

□ 협동심 제고 및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체육활동 확대

- 지역사회 체육시설 확충 : 수영장, 테니스장 등
- 지역사회 헬스장 및 각종 체육 활동경비 지원
- 학교 유휴공간을 체육시설로 전환

□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 확대를 통한 인성 제고
- 예술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심, 공격성 등 완화, 창의력 제고

1-1-3. 아동친화도시 구축 (아동이 행복한 마을 구축)

□ 아동친화도시 구축

- 아동의 생활영역인 지역사회는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 모든 아동의 삶의 질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지역사회환경의 개선이 필요함.

○ 아동친화도시의 도입

- 유니세프가 제안한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이념(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 참여의 원칙)에 기반으로 함.
- 아동 친화도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함.
- 아동의 참여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요한 요건으로 봄.
-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함.

○ 아동친화도시 사례: 성북구

- '11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정책 대상 : 아동복지법 대상 아동 중 12세 이하의 어린이
 - 조례 주요 내용 : ①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②조성 기준, ③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④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⑤어린이 건강증진 등
- '13년 현재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 전략
 - 비전 : 아동친화 및 교육도시 정착
 - 목표 : 아동의 권리, 4대 기본권의 보장 및 실현
 - 정책과제 : 아동 4대 기본권리(생존권, 참여권, 보호권, 발달권) 바탕으로, ①돌봄, ②보육, ③친환경 급식, ④체험마을만들기, ⑤어린이·청소년 참여지원, ⑥학습·진로·진학의 체계적 지원 확대

- 7개 세부사업 : 아동 권리, 보육, 돌봄, 교육지원, 친환경급식, 어린이·청소년 참여, 어린이 세상)

○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황옥경 외, 2011)

-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의 이념을 전제로 함.
 - 통합성 :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보호 및 지원정책 구현
 - 보편성 : 모든 청소년의 기회 공평
 - 청소년 중심 : 청소년, 부모의 지역수요에 따른 정책 추진
- 청소년 친화마을의 기본요건
 - 청소년 친화적인 법 : 지역사회 차원의 친화마을 관련 조례 등을 통한 제도 마련
 - 청소년 친화적인 마을의 정책 및 행정체계 마련
 - 청소년 친화마을을 위한 예산 확보
 -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체계

○ 아동친화도시 도입방안

-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에 대한 태도변화 혹은 문화조성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확충,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함.

〈표 2-I-1〉 청소년 친화마을 실행체계

구분	내용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역량을 갖춘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청소년 -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 충분한 자원과 공평한 발달기회 제공 - 청소년 친화공간의 확보 - 청소년의 참여촉진
조성기준	누구나 건강한 마을 모두가 안전한 마을 더불어 활동하는 마을 살기좋은 환경
추진방향	안전한 환경 : 지역사회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 역 량 발 달 :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소년 역량발달 제거 손 상 회 복 : 지역사회 공간의 재구성 및 확보, 가족생활 문화 및 이웃과의 관계회복 촉진 살기좋은 환경 : 청소년-성인 관련 전문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자료 : 황옥경 외(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2-I-2〉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도시의 특징, 기본요소, 이행요건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특징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양질의 기본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 쓰레기로부터 분리되어야 함. 지방정부는 정책적으로 시행을 실시해야 하며, 자원의 배분과 정부의 행동계획은 시민과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함.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안에 대해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함. 거리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 장애아 혹은 적절한 가족의 지원이 없는 아동·청소년과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제공되어야 함. 성별, 종교적 배경,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 요소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결정권 행사하기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것들 표현하기 가족, 지역사회,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참여하기 의료와 교육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안전한 식수와 깨끗한 위생환경을 제공받기 폭력과 착취 그리고 학대로부터 보호받기 거리를 안전하게 걷기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놀이기 자연과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구분	내용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문화행사와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기
	모든 시민이 향유하는 서비스에 종교, 민족, 경제적 수준, 성별, 장애와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 받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9가지 이행 요건	아동·청소년의 참여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률 구조
	도시 전반에 걸친 아동·청소년 권리 전략
	아동·청소년 권리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
	아동·청소년 영향 사정과 평가
	아동·청소년 예산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상황 보고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홍보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옹호기구

자료: CFCI Website(<http://www.childfriendlycities.org>)

홍승애(201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9에서 재인용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1-1. 학업과 여가의 균형	1-1-1. 교육제도 개선	학업시간 축소 및 교과목 시간 안배					
		자유학기제(집중학기제, 체험학습)					
		대학서열화 개선					
	1-1-2. 여가 인프라 확충	여가기반 인프라 확충					
		협동심 제고 및 학업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체육활동 확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1-1-3. 아동친화도시 구축	아동친화도시 구축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1-1-1. 교육제도 개선	학업일수 하향조정	220일	190일
	학업일수 축소	교급별로 다름	논의필요
	자유학기제 학교 확대	800개교	모든 중학교
	대학평준화	연구실시	실시
1-1-2. 여가 인프라 확충	예체능시간 확대	논의	실시
	아동청소년 여가시설 확충	논의	실시
	체육활동 바우처 보급	논의	실시
	문화바우처 대상 확대	논의	실시
1-1-3. 아동친화도시 구축	아동친화도시 확대	1개지역	10지역

1-2. 사회성 제고

가.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의 폐해로 사회성이 취약한 아동 양산

- 세계 최저출산(2013년: 1.19)으로 외동이 혹은 1명의 형제 또는 자녀와 자라는 아동수의 증가에 따라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발생
 - 형제자매가 없거나 소수의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과도한 보호를 받아 사회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미흡
 -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아동은 가족관계 안에서 성장하기보다 게임이나 학업 등 혼자 보내는 시간이 과다
- 한편, 학력지상주의의 팽배로 관계지향적이기보다는 학업지향적 문화 보편화
 - 급우는 경쟁의 대상이 되어 협동심이나 유대감이 낮아짐
 - 학력중심의 사회분위기로 아동은 관계를 맺을 기회 및 시간이 박탈됨
 - 가족도 학력신장을 아동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고, 관계형성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음.

□ 낮은 사회성으로 각종 사회문제 양산

- 학교폭력의 궁극적 원인 중의 하나는 소자녀화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 낮은 사회성으로 친구사회 안에서도 건강한 관계형성이 되기보다는 외곽되거나 비사회적인 관계 패턴인 왕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
- 이는 결국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였더라도 그대로 문제로 남아 향후 비사회적 인간이나 반사회적 인간을 양산할 우려가 큼.

나. 정책과제

1-2-1. 일반아동의 사회성 제고 : 인성교육, 동아리활동 활성화(수련시설, 청소년단체-YMCA, YWCA, 청소년연맹, 아람단)

□ 아동의 관계지향성 제고를 위한 제도 확충

- 협동심 중심의 과목확충 및 학업평가시 협동심 반영
- 신뢰형성 교육 강조
 - 기업의 협동심 강화 교육 벤치마킹
- 학급내 교우간 권력 피라미드 타파를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 각종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 낮은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함.
 - 교내 동아리 활동 참여율은 28.9%이고, 교회 동아리활동은 7.2%에 불과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동아리활동 만족도는 4점 만점에 교내 3.23, 교외 3.21로 비교적 높은 편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동아리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형식적인 활동에서 탈피하여 수업의 일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1-2-2. 취약아동 사회성 제고 : 은둔형, NEET

□ 은둔형 아동 지원

-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은둔형 외톨이가 많으나, 사회적인 주목을 받지 못함.
-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 등으로 인해서 홀로 지내는 외톨이들은 정

신적인 고통, 사회적 고립 및 도태 등의 문제를 낳게 됨.

-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 동료 학생들의 지원,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부모 등 아동을 둘러싼 관련자들이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함.
 - 이들이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함.

□ 니트(NEET)⁹⁾측 대책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니트측은 1백만명에 달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수반함.
 - 대부분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일찍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한 층임.
 - 이중 대다수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은둔형 외톨이와 함께 니트측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
 - 니트측이 된 원인, 경위 등을 파악하여 원인별 접근 필요.
 - 취업알선, 장학금 대여 등을 공격적 정책 마련 필요

9) 니트측이란 영어로는 NEET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in training의 약자로 15-34세 취업인구 중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자들을 말함.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1-2. 사회성 제고	1-2-1. 일반아동의 사회성 제고	아동의 관계지향성 제고를 위한 제도 확충					
		각종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					
	1-2-2. 취약아동 사회성 제고: 은둔형, NEET	은둔형 외톨이 아동 지원					
		니트(NEET)족 대책 마련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1-2-1. 일반아동의 사회성 제고	협동심 중심의 과목 확충	일부 실시	실시
	교사 역량강화	—	실시
	동아리 참여율 제고	교내: 28.9% 교외: 7.2%	교내: 28.9% 교외: 7.2%
1-2-2. 취약아동 사회성 제고: 은둔형, NEET	은둔형 아동 발견율	—	10%
	니트족 학업률 제고	—	20%
	니트족 취업률 제고	—	30%

1-3. 사회참여증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지역사회, 정치 등 모든 사회생활영역에서 아동의 사회참여는 저조한 편
 - 학업이외의 활동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수준은 낮음.
 - ICCS(시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은 시민점수는 높으나, 시민으로서의 태도(시민성) 및 행동은 매우 낮은 점수를 보임.
 -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선진적 사회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아동의 자원봉사활동 평균 시간은 1분으로 외국 아동에 비해서 현저히 낮음.
 - 지역사회 정책결정과정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역할이 미미함.
 - 이밖에 ‘아동총회’, ‘청소년특별위원회’ 등도 있기는 하지만 활동이 저조하고 극소수의 아동청소년만이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의 사회참여기회로의 역할이 되지 못함.

나. 정책과제

1-3-1. 학교내 참여활동 활성화

- 수업에서 학생참여 제고를 위한 학생참여형 수업 설계
 - 일방적 교사교육을 탈피하여 서구식으로 수업방식 변경
- 학내 자치기구 내실화
 - 형식적 자치기구 활동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이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민교육, 인권교육 강화

- 인권교육의 확대
-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균형
- 형식적인 인권교육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리와 의무 교육

1-3-2. 학교밖 참여기회 발굴

□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 정규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과목을 정규과목으로 도입
 - 현행 자원봉사활동의 형식적인 것, 아동과 활동의 미스매치를 개선
- 관련법: 「나눔활동기본법」
- 재능봉사 및 기부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지원
 - 자원봉사를 통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예: 일본)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제도를 만들어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포인트 적립을 하게 하고 이를 등록금 감면, 포인트카드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연계기업의 포인트 제공을 독려하여 기업의 홍보효과 제고
 - 외국사례: 일본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등록금 감면 실시; 영국 - 시민활동시 포인트 적립. 이를 할인카드로 사용

□ 각종 위원회 내실화(아동총회, 청소년위원회 등)

- 형식적인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활동과 역할을 하도록 제도기반 정비

□ 정치참여 제고

- 선거연령 1세 하향조정 (현행 만 19세 →만 18세로)

- 선거권 하향조정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 왔음. 아동이 선거권이 없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아울러 주요 선진국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되어 있음.
 - 참고: 국가별 선거권 연령

선거권 연령	국가
만 16세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니카라과
만 17세	인도네시아, 북한, 수단, 동티모르
만 18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만 19세	대한민국
만 20세	바레인, 카메룬, 일본, 나우루, 대만
만 21세	가봉,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오만, 싱가포르

자료: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만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고, 본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지역사회내 정치참여 보장

- 고학년 아동의 지자체장 선거 참여기회 부여
- 지역사회 정책 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의견반영 의무관

○ 바른 정치참여를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 글쓰기, 논리학 강의 등

□ 아동 인권옹호 활동의 현실화

- 인권활동 상설감시기구 설립
- 인권옹호기구 설립으로 인해 인권침해 방지 (예: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인권보호 등)

□ 아동친화적 기업 활동

- 아동의 건강, 안전, 영양, 발달 등을 고려한 기업활동 촉진

1-3-3.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함.

○ 유사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음. 이는 주민이 지역예산수립시 참여함.

○ 이러한 제도를 아동청소년에게도 도입하여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을 예산 편성시 의견을 내도록 함.

-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2012년 고등학생 20여명의 수원시 청소년위원들이 예산배정에 참여함.
- 그 결과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 및 혼잡 교통정리 등의 사업에 15억의 예산을 배정받음.
- 해외사례: 핀란드 ‘시장과 함께 하는 청소년의 목소리 회의’, 필리핀 청소년의회, 바라질 바라만사시의 ‘어린이참여예산평의회’ 등.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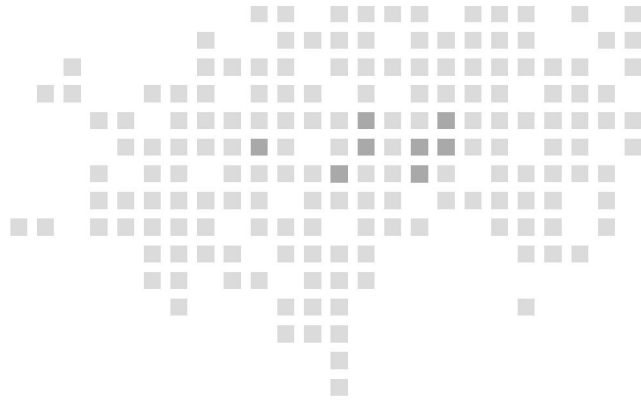
10) 여성가족부(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1-3. 사회참여 증진	1-3-1. 학교내 참여활동 활성화	수업에서 학생참여 제고를 위한 학생참여형 수업 설계					
		학내 자치기구 내실화					
		시민교육, 인권교육 강화					
	1-3-2. 학교밖 참여기회 발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각종 위원회 내실화 (아동총회, 청소년위원회 등)					
		정치참여 제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					
		아동 인권옹호 활동의 현실화					
		아동친화적 기업 활성화					
	1-3-3.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지방자치단체예산 수립시 아동청소년 참여 강화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1-3-1. 학교내 참여활동 활성화	참여형 수업 도입	도입	활성화
	인권교육 이수율	-	50%
	학내 자치기구 활성화	도입	활성화
1-3-2. 학교밖 참여기회 발굴	자원봉사 보상제도 도입 (참여시 포인트 카드 제공)	-	도입
	선거연령 1세 하향 조정	만19세	만18세
	아동인권 옹호기구 설립	-	1개소
1-3-3.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	아동청소년 참여예산 도입 지자체수	미도입	100개 시군구



Ⅱ.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 2-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 2-2. 선제적 정신건강관리
- 2-3. 안전환경 구축
- 2-4. 사회적 안전 확보

II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

2-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3.3명으로 OECD 30개국의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평균 5.1명보다는 낮으나, 스웨덴(2.8명), 일본(2.6명)보다는 높음(복지부, 2010).

○ 신생아기의 사망원인은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등 선천성 이상이 68.4%이고 고령산모 및 저체중출생아 증가가 사망률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장애의 현황

○ 0~17세의 아동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유형은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등의 순으로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장애의 원인은 90.0%가 질병 및 사고와 같은 후천적 장애임. 후천적 장애의 원인중 질환의 비중이 55.6%로 사고보다 다소 높은 편임.

□ 운수사고사망은 아동기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지난 10년간 다소 감소하였으나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음.

〈표 2-Ⅱ-1〉 연도별 연령별 성별운수사고 사망률

(단위 : 인구 10만명당)

구분	연령계층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전체연령	25.3	20.9	19.1	19	17.1	16.3	15.9	15.5	14.7
	15세 미만	7.3	6.2	6	5.1	3.9	3.6	3.5	2.9	2.5
	15~19세	17.7	14.5	11.7	12.3	8.7	7.9	8.5	9	8.4
	20~24세	20.9	16.6	14.7	14.3	11.1	9.4	9.3	10.2	10.0
남자	전체연령	36.8	30.6	27.3	27.7	25.1	23.9	23.3	22.8	21.8
	15세 미만	8.6	7.0	7.1	6.0	4.7	4.3	3.8	3.4	2.8
	15~19세	26.9	20.9	17.4	17.7	13.7	11.7	12.4	14.2	13.5
	20~24세	32.4	25.6	22.3	22	17.1	14.8	13.8	15.5	15.1
여자	전체연령	13.8	11.1	10.8	10.3	9.1	8.6	8.5	8.1	7.7
	15세 미만	5.8	5.2	4.9	4.1	3.1	2.8	3.1	2.4	2.1
	15~19세	7.9	7.6	5.6	6.4	3.2	3.8	4.2	3.2	2.7
	20~24세	8.9	7.1	6.8	6.2	4.8	3.7	4.6	4.6	4.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 신생아 모유수유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감염병 수준은 감소추세이며, 12세 이하 영유아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14종 감염병, 11종 백신)을 권장, 추진하고 있음.

□ 아동기(1-19세)의 운수사고 사망률은 4.7명(10만명당, 2007)으로 선진국수준 7.0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감소하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박혜숙, 2009).

□ 우리나라 아동의 근시가 증가하고 있음. 2013년 아동실태조사에서도 안경착용률이 연령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약시로 진료 받는 인원이 2만1천명이었고 이중 61.6%가 10세미만의 아동이었고, 10-19세는 23.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9세이하의 약시 진료비중은 매년 0.3%(1,000명당 3명) 증가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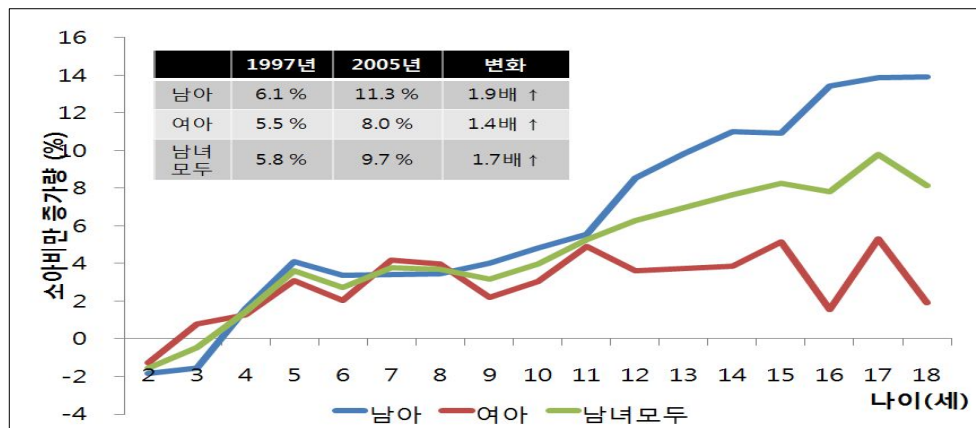
〈표 2-Ⅱ-2〉 19세 이하 근시, 원시, 난시, 주요 질환자 추이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근시 진료실인원 (10만명당 진료실인원)	553,642 (4,393)	706,083 (5,804)	767,723 (6,612)	865,788 (7,627)	876,950 (7,762)	58.4 (76.7)
원시 진료실인원 (10만명당 진료실인원)	79,537 (631)	90,597 (745)	90,964 (783)	101,427 (894)	101,375 (897)	27.4 (42.1)
난시 진료실인원 (10만명당 진료실인원)	308,600 (2,449)	331,949 (2,729)	337,694 (2,908)	353,393 (3,113)	354,360 (3,136)	14.8 (28.1)
사시 진료실인원 (10만명당 진료실인원)	108,059 (858)	110,448 (908)	104,036 (896)	110,262 (971)	111,002 (983)	2.7 (14.6)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p.542

□ 우리나라 아동의 비만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득수준별로 비만율의 차이가 있었음.

[그림 2-Ⅱ-1] 아동·청소년 비만인구 증가량(%)



자료 : 보건복지부,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 p. 263.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2013년 5월3일. “눈이 침침해요...”시력발달막는 ‘약시’, 조기에 교정해야

□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건강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의 강화정책이 필요함.

〈표 2-Ⅱ-3〉 만 12세의 영구치우식경험도에 대한 주요 국가간 비교

국가	조사년도	영구치우식 경험자율(%)	1인 평균보유 우식경험영구치수(개)
한국	2010	60.5	2.1
호주	2000	35.1	0.8
덴마크	2005	36.1	0.8
독일	2005	27.6	0.7
네덜란드	2002	32.0	0.8
노르웨이	2000	52.0	1.2
영국	2002	53.7	1.5

자료 : 외국-WHO Data Bank, 한국-'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10)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p.305

□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12년기준 부비동염(일명 축농증)의 건강보험진료인원중 약 31.62%가 9세이하 아동이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비동염은 세균감염, 알레르기, 치아감염, 외상, 기형, 비강내 이물질,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표 2-Ⅱ-4〉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10.2월 기준,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검진	48.0	51.3	51.6	55.7	59.9	65.3	66.1
암 검 진	13.6	14.7	23.3	28.6	35.4	40.3	45.3
생애전환기	-	-	-	-	46.0	52.5	55.6
영 유 아	-	-	-	-	-	36.5	39.8

* 수검률 : 국민건강보험공단(2009).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0)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p.219

〈표 2-Ⅱ-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세부과제

구분	내용	영아기	취학전	학령전기	학령후기
· 건강한 임신 및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관리강화 - 산후관리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생후4개월-71개월) 	○			
· 건강한 신체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건강검진 - 비만예방 및 관리 - 저체중의 예방 및 관리 - 천식 및 아토피 예방 및 관리 - 구강건강증진 -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	○	○	○
· 건강생활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추구관리강화 - 영양균형 - 신체활동 및 운동실천 강화 - 생식건강증진(조기임신예방, 낙태예방) 	○	○	○	○

나. 정책과제

2-1-1. 영아기 건강보호사업

□ 산전산후 관리

-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 취약계층 산전관리 지원확대
-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산모 건강관리 지원확대
- 방문보건서비스에서 산전산후관리 강화

□ 신생아 건강증진사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강화
- 신생아집중치료실 공급확대
- 저체중아출생예방 홍보사업(여성흡연예방, 식생활교육 등)
- 생후6개월 이하 완전모유수유 확대지원

- 생후6개월까지 완전모유수유 영아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산모대상의 영양교육이 강화되어야 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모유수유율 목표 : 2011년 52.6%를 2020년 60.0%로 증가)
- 공적인 의료체계안에서 유휴간호인력을 활용한 모유수유지도사업(컨설팅이나 파견사업) 필요

○ 난치성질환아동 지원사업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

□ 관련 법과 개선사항

〈표 2-Ⅱ-6〉 영아기 건강 관련 법과 개선 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선사항
모자보건법	(제10조) 시도지사 및 시장, 시군구청장의 의무: 임신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건강진단, 예방접종, 치료, 간호, 시설수용, 이송 등)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는 영유아건강기록부 관리, 질병감염예방조치의무	미숙아(저체중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를 위한 지원강화(건강진단 접근성제고 등) 사후조리시설의 관리감독강화 미혼모의 건강관리 미혼모 아동의 건강관리 강화
영유아보육법	(31조)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32조) 치료 및 예방조치, 보건소, 보건지소의 협조 (33조)급식관리	-영유아의 건강진단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조치강화 영유아 격리시 격리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항 마련필요

주: 의료서비스관련법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2-1-2. 유아기 건강증진사업

□ 공공시설에서의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관리 정책강화

○ 필수예방접종 강화

○ 보육시설 및 영유아 대상 학원, 공공시설에서 감염병예방대책강화/독감예방접종 등 각종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보건소와 공조체계 확립

□ 건강한 신체발달, 질병예방 및 치료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원 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수검율 제고
 - － 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 : 보건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영유아 영양교육, 식습관 관리를 위한 부모, 보육담당자 교육지원
- 영유아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부모, 보육담당자 교육지원
- 난치성질환아동의 지원, 비급여부담완화
- 장애아동 재활사업지원확대

□ 건강생활실천 지원 강화

- 보육시설, 공공기관중심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 홍보 및 교육
 - － 저염, 저당 섭취
 - － 적절한 지방섭취
 - － 다양한 과일과 채소 섭취
 - － 칼슘섭취 지원(적절한 일광욕이 부족한 지역아동 대상)
 - － 결식아동지원
- 보육시설, 공공기관중심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
 - － 신체활동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 지역사회 영유아 체육시설의 확충 및 보급

□ 관련 법과 개선사항

〈표 2-Ⅱ-7〉 유아기 아동의 건강관리 관련 법과 개선 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선사항
모자보건법	시도지사, 영유아건강진단, 건강관리 의무	질병예방관리 및 건강검진후속관리에 대한 의무 부과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원장, 영유아건강진단, 건강관리의무	질병예방관리 및 건강검진후속관리에 대한 의무 부과
유아교육법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취학전): 건강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규제를 받음	
학교보건법	제7조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구강검진)(학교장) 제12조 학생안전관리교육의무(학교장)	질병예방관리 및 건강검진후속관리에 대한 의무 부과

주: 의료서비스관련법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2-1-3. 취학어린이 건강증진사업

□ 건강한 신체발달 지원정책 강화

- 학교 급식위생관리 강화 : 식중독 예방관리
- 학교내 감염병 관리 강화 : 신종감염병, 매개체(진드기, 이 등) 관리
- 집단결핵, 수족구 병등 새롭게 대두되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 보건소와 학교의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함

□ 비만예방

-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식품섭취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영양섭취 및 식습관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교육홍보가 필요함.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2008), 식생활교육지원법(2009), 국민영양관리법(2010) 등을 근거로 아동대상의 영양교육 및 식생활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학교체육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청소년(만12세-19세미만)신체활동 목표에서는 중등도 신체활동 30분씩 주5일 이상 실천, 격렬한신체활동 20분이상 주3일이상실천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신체활동의 지침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함.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

□ 관련 법과 개선사항

〈표 2-II-8〉 취학어린이 건강증진정책 관련 법과 개선 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선사항
학교보건법	제7조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구강검진)(학교장) 제12조 학생안전관리교육의무(학교장)	건강검진의 후속관리 강화 필요 신체활동강화 대책 보장필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8조)식약처장은 고열량, 저영양식품판매 금지를 위한 고시를 할 수 있음. 학교, 우수 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21조의2)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 지도감독 (26조) 식약처장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필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을 위한 재원확보, 안전환경조성 등 의무가 있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무(시장) (10조)교통안전교육의무(시장, 경찰서장)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학교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의 건강 관리영역의 갭이 존재함.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물질의 표기, 판매금지 등	

주: 의료서비스관련법: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2-1-4. 후기아동기 건강증진사업

□ 건강한 발달지원

- 예방접종지원 : 자궁경부암예방접종, 풍진예방접종 등
- 10대임신예방/낙태예방사업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지원사업

□ 학교 보건관리 강화

- 집단결핵, 수족구 병등 새롭게 대두되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 보건소와 학교의 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함

□ 취약아동의 급식카드(식비지원)체계의 개선

-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려(저염, 저당, 적절한 지방섭취)
- 부족하기 쉬운 칼슘섭취 등 보충제 지원 강화

□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 풍진예방접종 지원
- 조기임신예방교육
- 낙태예방교육
- 흡연, 알코올사용예방교육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의 교육, 양육비지원(여성가족부에서 25세미만에게 지원)
- 미혼모의 건강관리 지원 필요 : 모자보건법 적용

□ 건강생활실천지원체계 강화

- 비만, 영양불균형예방을 위한 식생활교육사업, 취약계층 영양사업지원확대
- 학교체육수업 강화
- 국민체력100사업의 활성화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사업

□ 관련 법과 개선사항

〈표 2-Ⅱ-9〉 청소년기 건강증진정책 관련 법과 개선 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선사항
학교보건법	제7조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구강검진)(학교장) 제12조 학생안전관리교육의무(학교장)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대책강화 필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학교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의 건강관리영역의 갭이 존재함.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물질의 표기, 판매금지 등	-

주: 의료서비스관련법 : 건강검진기본법, 의료급여법, 지역보건법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2-1.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2-1-1. 영아기 건강보호사업	산전산후 관리					
		신생아 건강증진사업					
	2-1-2. 유아기 건강증진사업	공공시설에서의 영유아 감염병의 예방관리 체계수립					
		건강한 신체발달, 질병예방 및 치료관리체계의 확립					
		건강생활실천 지원 강화					
	2-1-3. 취학어린이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신체발달 지원정책 강화					
		비만예방					
	2-1-4. 후기아동기 건강증진사업	건강한 발달지원					
		학교 보건관리 강화					
		취약아동의 급식카드(식비지원)체계의 개선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생활실천지원체계 강화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2-1-1. 영아 기건강보호사 업	영아사망률	3.2명(출생아1천명당; 2008) (HP2020)	3.0
	저체중아 발생률	5.0%(2010)	4.0%
	6개월모유수유율	52%(2010) (HP2020)	55%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확충률	10%(2008) (HP2020)	40%
	장애예방/신생아난청 선별검사	46천명(2010) (HP2020)	45천명
	필수예방접종률	70%(2008) (HP2020)	80%
2-1-2. 유아 기건강증진사 업	영유아건강검진수검률	55.4%(2012) (HP2020)	60%
	보육시설감염병발생건수	신설지표개발 (HP2020)	개발완료
	필수예방접종률	70%(2008) (HP2020)	80%
	유치(5세)치아우식경험률	21.0%(2011) (HP2020)	20%
	영유아정기구강검진수검률	62.2%(2012) (HP2020)	70%
	아동안전사고사망률	4.21명(2011) (HP2020)	4.0명
2-1-3. 취학 어린이건강증 진사업	영구치(12세)치아우식경험률	57.3%(2012) (HP2020)	55.0%
	결핵발생률	22.7명(10만명당; 2008)	15명
	신체활동(주3일이상운동; 9-11세))	37.2%(2013: 아동실태조사)	40.0%
	아침식사결식율	10.7%(2013: 아동실태조사)	5%
	아동안전사고사망률	4.21명(2011) (HP2020)	3.0명
2-1-4. 후기 아동기건강증 진사업	천식의사진단율(중고)	9.4%(2013)	9.0%
	아토피피부염의사진단율(중고)	23.6%(2013)	20.0%
	구강건강(치아우식경험률12세)	57.4%(2011) (HP2020)	55.0%
	안경착용률(12-17tp)	45.3%(2013)	40.0%
	생활체육참여율(10대)	33.8%(2012)	40.0%
	신체활동(격렬)	27.9%(2012) (HP2020)	30.0%
	신체활동(중등도)	7.6%(2012) (HP2020)	10.0%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신체활동(걷기)	52.3%(2012) (HP2020)	60.0%
	근력운동실천율	14.1%(2012)	20.0%
	10대임신율	0.3%(2012)	0.2%
	낙태율	0.2%(2012)	0.1%

자료원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2. 선제적 정신건강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증가 및 문제점

- 2012년의 만 5-9세의 유아동의 인터넷 중독률은 7.3%, 만 10-19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0.7%로 성인(6.0%)보다 유아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더욱 높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 학령별 인터넷 중독률을 살펴보면, 중학생이 1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생이 9.6%, 초등학생이 9.4%, 유치원생이 4.3%으로 나타남. 청소년들은 주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수치심이나 모욕감 유발(6.9회)이나 원치 않는 접속을 통한 괴롭힘(4.0회)을 당한 것으로 나타남.

〈표 2-II-10〉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률 및 중독자 수

(단위: 천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N	%	N	%	N	%	N	%
인터넷 중독 ¹²⁾								
유아동(만 5세~9세)	—	—	—	—	160	7.9	157	7.3
청소년(만 10세~19세) ¹³⁾	938	12.8	877	12.4	677	10.4	754	10.7
고위험군 ¹⁴⁾								
유아동	—	—	—	—	20	1.0	16	0.8
청소년	187	2.6	218	3.1	187	2.9	198	2.8
잠재적 위험군 ¹⁵⁾								
유아동	—	—	—	—	140	6.9	141	6.5
청소년	751	10.2	659	9.3	490	7.5	556	7.9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12) 인터넷중독에 대한 고위험 사용자군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을 합하여 산출함

13) 2005년까지는 만 9~19세 중 학생만을 청소년으로 보았으나, 2006년부터 만 9세~19세의 학생, 직장인 모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며, 2011년부터 만 10~19세 모두를 청소년으로 정의함

14)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증상을 보이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장애가 발생되는 특성을 가짐

15)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고, 인터넷 사용조절력이 감소하며, 이에 따른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 저하가 발생함

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의 법적규제 조항이 없음

- 인터넷 최초 이용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 26.9%가 만 9세 이전 인터넷을 처음 이용한 것으로 보고됨

○ 인터넷·게임 중독은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성숙기를 거치고 있는 청소년기에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인터넷·게임 중독군은 주의력집중장애, 불안 등 공존장애 증상이 높았고, 주관적 안녕과 통제력, 자기결정성, 자존감이 특히 낮게 나타남. 또한 부모와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가족갈등을 경험함. 학업 및 교우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게임 이외의 성취경험과 대안적 여가활동이 부족함.

□ 우울 및 스트레스, 주의집중장애(ADHD) 등 정신건강 문제 보편화

○ 아동의 41.9%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30.5%는 우울증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2)

〈표 2-Ⅱ-11〉 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현황(2009-2012년)

구분	2009		2010		2011		2012	
	%	(S.E.)	%	(S.E.)	%	(S.E.)	%	(S.E.)
스트레스인지율	43.2	(0.3)	43.8	(0.3)	42.0	(0.3)	41.9	(0.3)
우울증상경험율	37.5	(0.3)	37.4	(0.3)	32.8	(0.2)	30.5	(0.2)
주의집중장애 유병율	0.8	(0.2)	0.6	(0.2)	0.6	(0.2)	0.7	(0.3)
자살생각율	19.1	(0.2)	19.3	(0.2)	19.6	(0.2)	18.3	(0.2)
자살계획율	—	—	—	—	6.8	(0.1)	6.3	(0.1)
자살시도율	4.6	(0.1)	5.0	(0.1)	4.3	(0.1)	4.1	(0.1)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경계성 지능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 특수 교육 체계 안에서, 학습지원, 놀이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치료계획이 구성되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차원에서 개인학습계획(individualized learning plan)이 구축되어 있음. 하지

만 주의집중장애(ADHD) 아동의 경우 통합적인 치료계획 및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아동의 스트레스는 학업 및 부모와의 관계 갈등에서 주로 기인함(김미숙 외, 2013)

－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수행한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조사(최인재와 이기봉, 2010)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이 ‘공부문제’로 나타남. 이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및 학교와 연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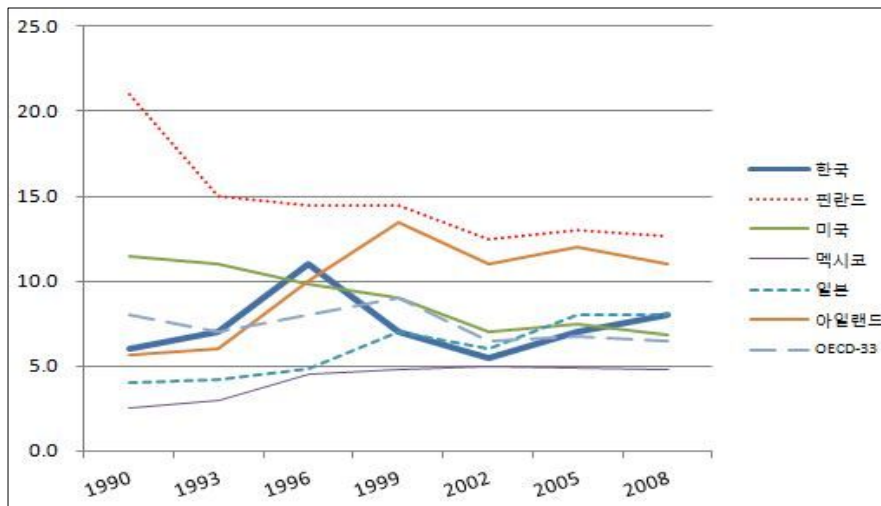
○ 재난, 사고, 폭력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아동이 있으나, 이들의 규모 및 실태 파악이 부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인력, 기관이 부족함.

○ 5년마다 이루어지는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조맹제 외, 2011)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행동장애, 불안장애 등 아동에게서 발견되는 정신질환 실태에 대한 파악 어려움.

□ 청소년 자살 증가

○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2008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사망은 10만명당 평균 6.2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6.8명과 유사하게 나타남. 하지만 OECD 회원국의 청소년 사망률은 1990년 및 2000년 대비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2-Ⅱ-2] OECD 회원국 청소년 자살률(중단자료)



자료 : 전진아 외(2013), 『아동정책지표개발연구』

□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 체계 부재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유경험자 중 15.3%이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아동의 경우 정신보건서비스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는 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체계 미흡
 - 특정 정신질환의 경우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나, 조기발견 체계가 미흡함.
 -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인데 전국에 50개소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연결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보건의료자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
 - 현재 학교보건법의 경우 건강검사 이후 신체건강검사에 따른 사후조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정신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치료 이후 학교로 복귀하는 등의 사회재활훈련이 필요하나, 지역사회재활 훈련시설은 매우 부족함

○ 아동정신건강 전문 인력 부족

- 현재 정신건강증진법 제 8조(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2항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간호사 및 정신건강증진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 및 등급, 수련과정 및 자격증 교부 절차 등의 세부 지침 마련이 완료되지 않음

나. 정책과제

2-2-1.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

□ 아동 정신장애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지 강화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홍보사업

○ 사업내용

- 아동 정신장애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지 강화 및 편견해소를 위한 부모 대상 예방교육홍보 사업
- 또래 교육 활성화를 통한 상호 모니터링 체계로 활용하는 등의 예방의 한 주체로 활용
-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미디어 홍보 및 정신건강의 주간 활용
- 학교 및 직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 교육
- 교사 대상 아동정신건강 증진교육 및 전문성 개발 워크숍 확대

○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
- 광역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 정신보건관련 단체 및 협회
- 정신보건관련 학회

2-2-2. 아동 중독 및 정신건강 예방사업

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과몰입 예방 사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과몰입 예방 위한 매뉴얼 구축 사업

○ 사업내용

-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침서 구축 및 배포
- 아동의 경우 취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여 매뉴얼 구축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사업

○ 사업내용

- offline 및 e-learning 프로그램 구축
- 부모 대상 자녀 미디어 이용관련 교육
-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과 같은 보육기관의 기관장 및 교사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

○ 사업내용

- 아동의 인터넷을 통한 도박 경험이 증가 및 성인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확대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등에 연령표시 의무화 및 아동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의 적절한 사용 시 긍정적 효과와 감시 없이 혼자 방치되어 사용했을 시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 의무화
-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의 법적규제 조항 구체화. 아동청소년과 달리 영유아의 미디어매체 노출과 관련된 규제 법조항이 없음. 최근 증가하는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관련 법적 조항 마련 필요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연구사업

○ 사업내용

-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실태조사 실시
- 학교 안 스마트폰 및 기기에 관련된 이용지침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및 발달영향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체계 구축하여 전반적 정신건강 수준 현황 파악 및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 사업내용

- 취학 전 2회, 초등학교 시기 2회, 중학교 시기 1회, 고등학교 시기 1회 실시하여, 각 시기의 주요 정신건강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인터넷 중독 등) 파악
- 각 연령대별 생활환경, 정신과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검진 항목 및 방법을 차별적으로 구성
- 교육부의 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를 활용하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 문항을 추가하여 정신건강 현황 파악 및 조기발견 가능하도록 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

○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교육부
- 학교, 보건소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이후 사후 치료 연계 등의 사후조치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 현재 학교보건법의 경우 건강검사 이후 신체건강검사에 따른 사후조치는 규정되어 있으나 정신건강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음

3) 기타 아동 중독 및 정신건강 예방 사업

□ 또래상담 운영프로그램 강화

○ 사업내용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또래 상담운영프로그램에 아동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강화
- 또래상담자를 상담인력으로 활용
-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여성가족부, 교육부

□ 아동 정신건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 사업내용

- 아동 정신건강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
- 실제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정 및 개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 설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완료: 현재 정신건강증진법 제 8 조(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 2항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간호사 및 정신건강증진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자격 및 등급, 수련과정 및 자격증 교부 절차 등의 세부 지침 마련이 완료되지 않음

○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보건복지부, 교육부
- 정신보건 관련 기관 및 조직

2-2-3. 아동 정신건강 증진 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

○ 사업내용

- 시군구 내 아동의 비율이 20%가 넘는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1개소 당 아동전문 정신건강 전문가 2-3인으로 이루어진 아동전담팀 구축 (2014년 8월 현재 연령별주민등록인구 통계 활용)
- 중앙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 내 아동전담팀 구축: 정신건강증진법 제 16조(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 등) 4항에서는 지역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위해 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시도지사는 지방정신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 중심의 아동 정신건강 증진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 간 연계 체계 구축. 즉, 아동 개인, 가족, 학교, 의료체계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치료계획을 구성하고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함.
- 여성가족부의 CYS-Net, 교육부의 Wee 프로젝트, 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정신건강증진체계 간 연계 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의 아동정신건강 증진체계와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등) 간 연계체계 구축 (소아 정신장애와 우울의 경우 주기적 약물치료 및 상담으로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정신건강증진체계에서 조기 스크리닝 기능

을 강화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또한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후 지역사회로 증진체계로 연계)

- 학교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국립정신병원 중심 정신건강 병원 학교 운영 확대. 해당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병원학교 출석 지원적학교 출석 인정)
- 학령기 아동의 정신질환(예. 정신분열병)에 대한 접근의 방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이후 학교로 복귀하기 전 단계인 지역사회재활훈련시설 확대 (현재 복지법인 '비상' 1개소 운영). 광역단위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 아동 트라우마 대응사업

○ 사업내용

- 국립 트라우마대응센터 1개소 설립 및 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 국립트라우마 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마련
- 재난, 사고, 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기개입 및 중장기 개입 (상담 및 치료)
- 아동청소년 대상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 구축
- 지역사회 내 아동대상 정신건강증진체계 및 의료기관 정보 제공
- 학교기반 트라우마 대응 사업(진행 주체는 학교심리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 트라우마 대응 전문 인력 양성 및 파견(주체: 국립트라우마대응센터)
- 트라우마 관련 아동, 부모, 교사 교육

□ 정신질환 아동 지역사회 통합강화 사업

○ 사업내용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통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서비스, 생활보호서비스, 교육서비스,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정신질환 아동을 둔 가족 대상 가족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 (진단 초기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 체계 구축(치료 및 개입 이후)

□ ADHD 및 정서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진단, 치료개입, 사후관리로의 유기적 연계

○ 사업내용

- ADHD 아동 지원: 경계성 지능장애, 자폐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경우 특수 교육 체계 안에서, 학습지원, 놀이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치료계획이 구성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차원에서도 개인학습계획(individualized learning plan)이 구축되어 있음. ADHD 아동의 경우 만성적인 정신질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통합적인 치료계획 및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 놀이치료, 운동치료, 언어치료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 치료계획을 구성하고, 학교차원에서도 개인학습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함.
- 취약계층인 ADHD 및 정서발달장애 아동 진단 및 치료비 지원

2-2-4. 아동 자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 자살예방교육 강화

○ 사업내용

- 기존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자살예방 내용 추가 및 강화
- 학급별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 주기적 실시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통한 자살생각 조기진단 및 지역사회전문기관 연계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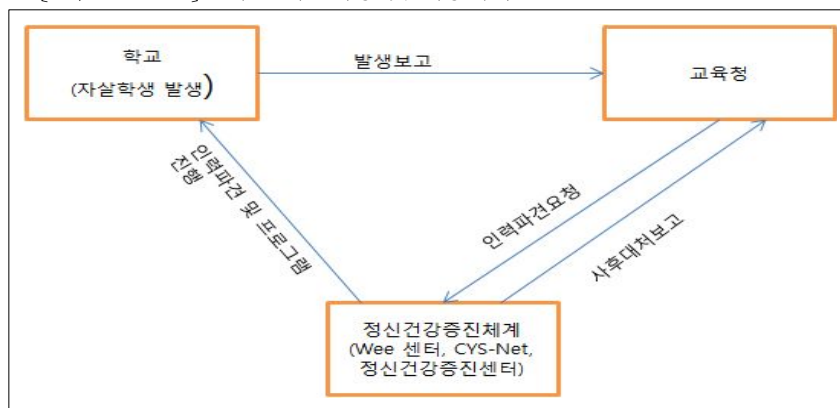
- 아동 개인에 대한 지역사회전문기관 연계
- 아동 부모를 대상 부모교육 및 상담
-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난 학교 대상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체계에서 전문 인력 파견하여 교육, 상담,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자살 학생이 있는 학교 및 학급 대상 트라우마 대응 사업

○ 사업내용

- 현재 학교장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살학생 있는 학교 및 학급대상 트라우마 대응 사업 강화 및 확대 필요
- 교육부와의 협조 하에 보건복지부의 역할 강화

[그림 2-Ⅱ-3] 아동 자살예방 및 대응체계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2-2. 선제적 정신건강 관리	2-2-1. 정신질환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사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매뉴얼 구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예방위한 법적규제					
	2-2-2. 아동 중독,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과몰입 연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진 후 사후조치에 관한 법적규정마련					
	또래 상담 운영프로그램 강화					
	아동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사업					
	아동 정신건강 전문인력 자격요건 설정					
	2-2-3. 아동정신건강 증진사업					
	소아정신장애 아동 부모대상 부모교육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					
	교사대상 아동정신건강 증진교육					
	취약계층 아동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사업					
	정신건강증진 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증진 체계 및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교 및 정신건강증진체계 간 네트워크 구축					
	국립트라우마 대응센터 설립 및 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					
	아동 대상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 구축					
	트라우마 대응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트라우마 대응 위한 아동, 부모, 교사 교육					
	정신질환 아동 지역사회 통합위한 가족상담 바우처 지원					
	2-2-4. 아동 자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자살예방교육					
	부모교육					
	학교 및 학급대상 트라우마 대응사업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¹⁾
2-2-1.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부모의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	신설
	ADHD 인지율	—	신설
	소아정신장애 인지율	—	신설
	우울증을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는 부모비율	—	신설
	아동정신질환자 의료기관이용율	—	신설
	아동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이용률	—	신설
	소아정신장애 부모교육 경험률	—	신설
2-2-2. 아동 중독,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 업	또래상담자를 통한 상담건수	—	신설
	아동 정신건강 전문 인력 수	—	신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경험률(아동, 부모, 교사)	—	신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매뉴얼 구축 여부(아동, 부모, 교사)	—	신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관련 법적규제 마련 여부	—	신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 및 게임 과몰입률 (연령별, 성별 등)	10.7%	7.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율	—	신설
2-2-3. 아동 정신건강 증진사업 ²⁾	지자체별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아동전담팀 구축 비율	—	신설
	우울증 유병률 혹은 우울증상경험률	30.5%	25%
	스트레스인지율	41.9%	40%
	주의집중장애 유병률	0.7%	0.6%
	아동 정신건강검진 이후 사후치료를	—	신설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 중 정신건강 치료비지원 수혜율	—	신설
	지역 내 정신질환 아동을 둔 가족대상 가족상담 바우처 수혜율	—	신설
2-1-4. 아동자살예 방 및 대응체계 강화 사업 ³⁾	자살생각률	18.3%	16%
	자살계획률	6.3%	3.5%
	자살시도율	4.1%	2.5%
	자살이 예방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비율 향상(아동, 부모)	—	신설
	10-19세 이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율	8.3명	6.2명

주: 1) 현황이 나타나 있는 지표들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감추세를 바탕으로, 2019년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2) 아동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지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a),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b)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3) 아동자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의 지표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a),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b), OECD(2009)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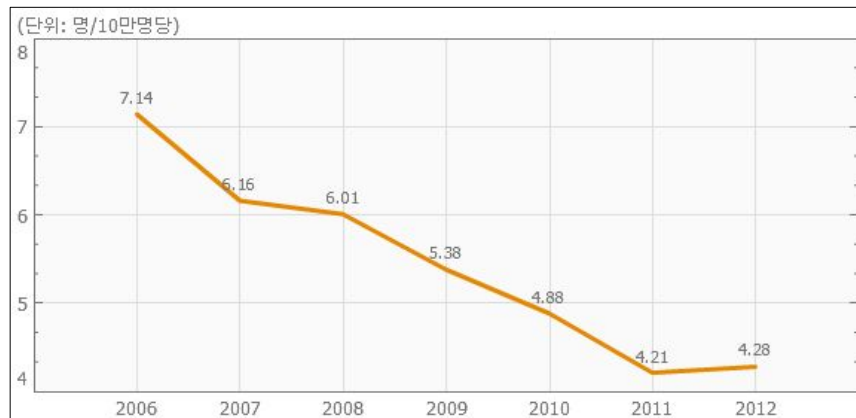
자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 및 게임 과몰입률'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3. 안전환경 구축¹⁶⁾

가.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사고는 교육, 환경개선, 지도적 접근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음

[그림 2-Ⅱ-4] 아동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자료: 통계청(2013). 사망원인통계.

- 주요선진국과 비교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안전사고 사망자율을 보이고 있음
 - 프랑스 3.5명('09년), 영국 2.5명('10년), 독일 2.6명('10년)
- 어린이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익사, 추락 등 실제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망사고 원인별 집중관리로 어린이 사망자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
 -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은 전체 사망자 중 40%를 차지하고('12년 131명), 익사한 아동은 전체 사망자 중 16%('12년 53명)를, 추락사한 아동은 전체 사망자중 11%('12년 36명)를 차지함

16) 본 절은 고석 대표(한국어린이안전재단)의 자문원고를 활용하였음.

- 현재 교통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연 10시간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으나 자전거 등(바퀴달린 놀이기구)은 의무교육시간은 없음(단,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으로 명시).

□ 어린이의 주기적 손상현황 파악 미비

- 현재 1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손상으로 인해 방문한 퇴원환자들 대상으로 손상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기에는 경미한 손상도 빈번하게 발생함.
- 또한 경찰청 교통사고조사, 119 구급활동일지 등 손상과 관련하여 조사되는 자료는 많으나 통합되지 않아 손상 지표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손상은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우연히 일어나는 결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손상의 원인 및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 기초한 개인의 행동, 물리적·환경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중재방안을 다분야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손상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가능

□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필요

-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수집된 위해 사례를 보면 지난 3년간 안전사고 67,951건의 사고 가운데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고가 44,545건(65.6%)으로 가장 많았음.
- 특히, 사고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사고의 79.4%가 “만 6세 이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Ⅱ-12〉 2011~2013년 어린이 손상사고 발생 수

구분	명	%
가정	44,545	65.6
교육시설	5,263	7.7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5,089	7.5
상업시설	3,477	5.1
교통시설	1,898	2.8
스포츠/레저시설	1,398	2.1
의료서비스시설	572	0.8
기타	5,709	8.4
합계	67,951	100.0

자료 : 한국소비자원(2014)

- 아동이 주로 생활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게 됨.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정 내 손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는 날카로운 물건, 의약품, 뜨거운 물건 등 아동들이 다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 조금의 부주의에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정책의 실효성 미비

- 현재 보육시설 및 학원의 경우 100인 이상 시설에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육시설의 10% 정도에만 해당되므로 유치원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서 어긋남(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시설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따라서 실태조사를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제한속도 및 이에 따른 범칙금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지정되어 있으나 단속이 매년 진행되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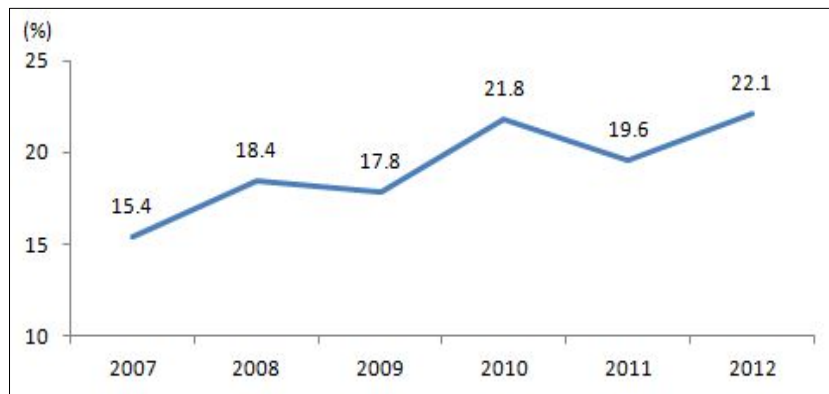
□ 미흡한 안전교육 및 안전습관

-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 의하면, 안전교육을 받은 아동은 44.3%로 절반 미만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안전교육 경험률이 높지 않음.

○ 안전습관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실천율이 높으나 자동차 안전관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흡함.

-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3), 국내 어린이카시트 착용률은 미국 94%, 스웨덴 93%, 캐나다 87%, 독일 96%에 비해 한국은 22.1%로 선진국에 비해 착용률이 저조
-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 의하면, 카시트의 착용률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질수록 낮아짐(수급층 24.1%, 차상위층 33.4%, 일반가구 66.1%),

[그림 2-Ⅱ-5] 어린이 자동차보호장구(카시트) 장착률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통계

- 특히 고가의 가격으로 인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10만원대 국민보급형 카시트 제작 필요성)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 안전교육, 환경개선, 법적규제를 이용한 예방 대책이 필요함.

나. 정책과제

2-3-1.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사업

□ 가정사고 예방사업(Safe House Start)확대

○ 부모대상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사업내용

- 정기적인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교육
- 산부인과, 소아과, 보건소 등 산모 및 아동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안전교육 책자 비치
- 일정교육 수료 후 모임 등을 개설하여 안전노하우 개발 및 공개

○ 대중매체 통한 안전정보 제공

- 사업내용

- 월별 이슈에 맞는 가정안전정보를 TV, 옥외광고,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노출하여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한 육아환경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언제나 원하는 안전정보 제공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보급·확대

- 사업내용

- 정부차원의 어린이 가정안전용품 보급 및 지원필요.
→ 오스트리아의 사례 : 정부차원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10가지 안전용품이 들어있는 SafetyBox 보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그림 2-Ⅱ-6] 어린이 가정안전용품 예시

현관(문)			
손가락 보호대	손가락보호대	손가락 보호대	모서리보호대
			
거실, 방			
전기안전커버	장식장 잠금밴드	모서리보호대	모서리보호대
			
화장실		주방	
미끄럼방지스티커	화상방지용수도꼭지	가스렌지잠금장치	가스렌지 안전가드
			

□ 안전한 주거환경 표준모델개발 및 지원

○ 사업내용

- 아동 주거시설의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
- 아동 주거시설 리모델링 지원

□ 안전한 주거시설 관리 감독

○ 가정용 연기탐지기 설치 의무화

- 사업내용
 - 가정용 연기탐지기 설치 의무화(주택)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 가정용 연기탐지기 설치 의무화 단계적 실시
- 저소득층 가정 대상 연기탐지기 무료 설치

○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연령별 가정안전체크리스트 제작 배포

- 산부인과, 소아과, 보건소 등 산모 및 아동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가정 안전체크리스트 비치
- 가정안전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5세 이하 가정대상 정기적인 가정방문안전점검 실시
- 저소득층 및 장애부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2-3-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 아동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아동들의 생활용품(가방, 우산, 옷, 모자 등) 반사표식체(Reflector) 부착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법적 규제¹⁷⁾

○ 효율적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실시를 위한 환경개선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도로부속물 설치확대
-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신호 길이 조절, 신호등 차단기 설치 등 추가적인 시설 마련

1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 전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효과성 검증
- 학교별 안전한 통학계획 수립 강화: 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호활동 지원 및 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감독관 운영

○ 효율적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규제 강화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주변 도로안전 진단제도 도입 및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제한속도(30km) 규정 법적 강화

→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적 규제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관련 규제강화

□ 어린이 보호 차량 안전성 개선 사업

○ 사업내용

- －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운전자 심화교육과정 운영 : 현재 보호차량 운전자 교육과정이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고 매번 비슷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음. 차량 내 안전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전반적인 아동안전에 대한 주제별 심화교육도 필요.
- － 표시등 점멸방법 개선, 후방감지센터 또는 카메라 설치의무화, 승강구 제2단의 발판높이 기준개선 등
- －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보급·확대를 위한 운영비 지원
- － 학원 및 보육시설 차량 내 어린이전용 안전벨트 및 카시트 장착 의무화

□ 아동 카시트 장착률 확대 사업¹⁸⁾

○ 아동 카시트 장착률 확대를 위한 교육

－ 사업내용

- 어린이카시트 올바른 착용법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신생아 대상 정부차원의 카시트 지원

－ 사업내용

- 국민보급형 카시트를 제작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확장하여 카시트 할인(사용자 50% 정부나 지자체 50% 부담) 및 대여 지원 확대-연간 2만개 내외 →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카시트 무상보급 연간 2,000개 내외.

□ 아동 자전거 등(바퀴달린 놀이기구)에 대한 규제

○ 사업내용

- － 아동 대상 자전거 등(바퀴달린 놀이기구) 의 안전교육 의무화: 자전거 보급 및 생활화가 이루어져 있는 지금 아동시기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의무화 필요.
- － 바퀴달린 놀이기구 사용 시 안전모 및 안전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특히 자전거 대여 시 안전보호장구까지 같이 대여
- － 자전거 보험 의무화 및 제도 개선: 현재 자전거 보험은 보장내용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장과 기준이 불명확해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만 20세 이하의 자전거 보험가입이 어려움. 또한 자전거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선 적자상품으로 신규가입을 하지 않는 실정임

18) 도로교통법 제50조 참조

2-3-3.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사업

□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 강화

○ 사업내용

- 중금속·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및 규격 제·개정
-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성 평가 실시
- 아동 다소비 식품의 식품첨가물 사용량 규제 방안 강구
- 학교 및 주택가의 불량식품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식품안전교육 강화

○ 사업내용

- 식품안전 및 영양교육 강화
-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식품안전영양평가원 설치 운영

□ 식중독 상시예방체계 강화

○ 사업내용

- 「법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운영 :식중독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교과부 등 34개 유관 기관 연계로 신속·체계적 대응(보건소 →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시도, 시·군·구 등 유관 기관 동시 보고)
- 청소년 수련원, 학교 등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식중독균 검출 시 즉각 현장 식재료 폐기, 시설개수 명령 조치

2-3-4.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사업

□ 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유키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환경 안전성 강화

○ 사업내용

-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환경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조사 및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개방시간에 안전지킴이 상주 의무화: 2002년부터 미국에서 각 지역별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평가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지도감독'영역임.
-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의 상해보험 의무화 및 공제회제도 마련
- 모든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에 안전수칙을 포함한 표지판 설치

□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 공간 안전관리

○ 사업내용

- 전 직원 안전교육의무화: 현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업소 당 업주 1명만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됨. 상당수의 안전사고가 관리자의 안전지식과 의식부재, 이용자의 부주의 및 부적절한 사용 등에 기인하므로 전 직원 안전교육 실시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하여 현실적이고 명확한 안전관리 규정아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익사예방 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영과 더불어 수상안전의무교육 실시: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학교 정규 수업 과정에 인명구조자격증을 획득하는 수준으로까지 수영 수업을 의무화했고, 일본·필리핀 등 섬나라에서도 학교에 수영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이들의 수영 수업을 필수 교과목의 하나로 설정

하고 있음.

- 익사사고예방 경고 표지판 및 경계망 구축
- 「119시민수상구조대」확대

□ 아동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 강화 사업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교육 강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과 관련하여 수련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급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응급환자의 원격의료 시스템 도입
- 아동, 청소년 수련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학회, 여가부, 민간차원의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및 등급제 실시: 청소년 수련시설의 등급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
- 수련시설의 신고 의무화: 이동·숙박형 활동을 주최 시 사전신고 의무화 및 미신고시 처벌강화. 신고자는 수련시설장뿐만 아니라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필요
- 수련시설의 규제강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정은 그렇지 못함.

2-3-5. 안전 교육확대 및 강화사업

□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사업내용

- 안전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제도 마련
- 안전인증제 기준 마련 및 시범적용 실시
-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기준 마련
- 안전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 안전교육 강화

○ 사업내용

- 국가차원의 통일화된 연령별·분야별 아동 안전교육 목표 및 내용 선정을 위한 지침 개발
-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홍보물·TV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활성화
- 아동, 보호자, 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관 설립 및 확대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관 지역별 설립 관련 제도 마련
-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관 지역별 설립 및 확대: 대부분의 안전체험장은 교통안전에 국한되어 있고, 전국에 종합안전교육장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9곳 중 대부분이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재난안전 내용으로 치우쳐져 있음. 종합안전교육장을 지역별 최소 1곳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별화된 일상생활 속에서의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체험관 건립필요(민간위탁 활성화).

2-3-6. 안전한 보육시설 환경 조성 사업

□ 안전사고 보상체계 현실화¹⁹⁾

○ 사업내용

- 교육시설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학교안전공제회’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제도를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보육시설 안전주치의 제도 마련

○ 사업내용

- 지역 병·의원과 연계하여 보육시설 안전주치의제도 마련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보건교사를 두고 있으나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은 의무적이지 않아 즉각적인 사고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

2-3-7.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 아동·청소년 안전정책 조정기구 설치

○ 사업내용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내 아동·청소년안전정책조정실무협의회 설치(아동·청소년안전관련 부처 장관, NGO 대표): 아동·청소년안전정책이 10여개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안전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청소년안전정책 조정기구 설치 필요
- 아동·청소년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 아동·청소년안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부처별 아동·청소년안전 추진사업 조정
 - 아동·청소년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 31조의2 참조

- 아동·청소년안전 관련 규제개혁 추진

- 아동·청소년안전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 안전사업의 활성화와 정책개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지원기구 설치
 - 정책개발, 연구조사, 평가, 교육, 대외협력, 가정안전사업지원 등의 주요기능 부여.

- 아동·청소년 안전 및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안전종합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안전 및 보호 관련 법령 정비(OECD 국가 수준)

- 안전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 각 지자체, 부처의 아동·청소년안전 추진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각 분야별 안전지표 개발
 - 정기적(1년 단위) 부처, 각 지자체 아동안전사업 평가 및 평가정보 공유

-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내용

-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네트워크 구축
 -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아동·청소년 안전 지킴이집 운영
 - 아동·청소년 안전지킴이 구성·운영

□ 어린이의 주기적 손상현황 파악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들의 손상에 대한 심층적 조사: 현재 100명상 이상의 병원에 손상으로 인해 방문한 퇴원환자들 대상으로 손상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실제로 아동·청소년기에는 경미한 손상도 빈번하게 발생함. 사망, 퇴원환자, 교통사고, 구급활동일지 등 손상정보가 수집되는 자료들을 통합하여 주기적이고 검증된 자료 도출
- 정기적인 학교 및 보육시설 안전실태조사 수집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2-3. 안전환경 구축	2-3-1.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사업	가정사고 예방사업 확대					
		안전한 주거환경 표준모델 개발지원					
		안전한 주거시설 관리 감독					
	2-3-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아동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법적 규제					
		어린이보호 차량 안전성 개선사업					
		아동 카시트 장착률 확대					
	2-3-3.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사업	아동 자전거 등(바퀴달린 놀이기구)에 대한 규제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강화					
		식품안전교육 강화					
	2-3-4.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사업	식중독 상시예방체계 강화					
		놀이시설(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 유희놀이시 설) 및 체육시설 환경 안전성 강화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관리					
		익사예방 사업					
	2-3-5. 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사업	아동·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성 강화					
		교육 및 보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안전교육 강화					
	2-3-6. 안전한 보육시설환경 조성사업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관 설립 및 확대					
		안전사고 보상체계 현실화					
	2-3-7. 안전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보육시설 안전주치의제도					
		아동·청소년안전정책 조정기구 설치					
		아동·청소년안전지원센터 설립 및 확대					
		아동·청소년 안전 및 보호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 화					
		안전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지역 아동·청소년 안전네트워크 구축·운영					
		어린이의 주기적 손상현황 파악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2-3-1.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사업	만 6세 이하 아동의 가정 내 손상 발생률 ¹⁾	—	신설
	만 6세 이하 아동 가정의 가정안전용품 보급률	—	신설
2-3-2.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카시트 장착률	33.6%	50%
	자전거 안전보호장구 착용률	5.5%	15%
	자동차 보호장구 이용률 ²⁾	—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	81.8%	100%
2-3-3. 안전한 식생활환경 조성사업	식품안전 교육 수혜율(아동, 보호자 등)	—	신설
2-3-4.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사업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환경 표준모델 구축율	—	신설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	신설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율	—	신설
2-3-5. 안전교육 확대 및 강화사업	안전교육 전문인력(강사) 배출 인원수	—	신설
	안전교육 이수율(아동, 보호자 등)	—	신설
2-3-6. 안전한 보육시설환경 조성사업	보육시설 내 손상발생률	—	신설
2-3-7. 안전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아동 손상경험률	9.7%	7%
	아동 안전사고사망자 수(10만 명 당)	3.86	2.7

주 : 1)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가정 내 손상발생건수만 측정이 되고 있음.

2) 소아 및 청소년의 동승차량 좌석 안전벨트 착용율을 의미함. 기존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이를 구분해서 측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율을 측정하고 있으나, 2011년 4월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표가 측정되어야 함.

3) 아동 손상경험율은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분율을 의미함.

4) 아동 안전사고사망자 수의 목표치는 OECD 2008 Mortality Database에 제시된 OECD 회원국들의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스웨덴의 2.7명을 기준으로 설정함.

자료: 1) '카시트 장착률': 교통안전공단(내부행정자료)

2) '자전거 안전보호장구 착용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2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 경찰청(2013)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자료 활용

4) '아동 손상경험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2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2-4. 사회적 안전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장기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또한 최근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증가추세와 더불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역시 대두됨
 -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42.4%는 2개 유형 이상의 중복피해 경험을 보고하였음.
 -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년별로는 초등학생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이 4.2%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남.
 -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일주일에 1-2회 이상이나, 4개월 이상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도 전체 피해의 19.6%인 11만 건에 달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 의하면, 전체 아동의 2.8%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도시나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수동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일반적이며, 실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은 저조하게 나타남((재)푸른나무 청예단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2014)
 - 초·중·고등학생의 91.9%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은 강당에 모여서 교육을 받거나(48.5%), 방송을 통한 교육(27.3%)을 받는 등 수동적인 교육이 일반적임. 또한 응답자들은 이러한 교육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

에 29.6%의 학생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활발한 예방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도움 체감도는 높지 않으므로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47.2%에 불과하였으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37.6%로 나타남. 이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 정도는 약 30%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인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폭력 SOS 지원단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 86.9%, 74.9%로 높게 나타남

-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발달기를 이해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년별, 폭력유형별, 성별 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대처와 인식강화, 예방 및 대처를 통해 자체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사회적 역량강화가 필요. 정부 및 각 부처는 단편적 이슈만을 쫓는 임시방편적인 학교폭력 정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각 대상별, 연령별, 유형별 등의 맞춤형 세부적 대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

□ 학대 및 방임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3b)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지원한 건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음. 2012년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6,403건으로 이 중 47.1%가 중복학대로 나타남 으며, 26.7%가 방임, 14.6%가 정서학대, 7.2%는 신체학대로 나타남. 또한 2012년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신고 의무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2010년의 신고의무자 신고율 30.9%에서, 2012년에는 36.9%로 향상되었음.

[그림 2-Ⅱ-7]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건수(2002-2012년)



자료 : 보건복지부(2013b).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에 의하면, 0~8세 아동이 지난 6개월 간 집에서 30분 이상 성인이나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률은 약 18.7%였으며, 6~8세 아동은 38.1%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방치율은 빈곤가구, 농어촌 지역, 한부모·조손가족이 높게 나타남.

- 아동방임 및 학대와 관련해서 정서적 학대가 신체 학대보다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피해 및 가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남.

- 아동이 보고한 경험률(피해)은 신체학대 6.1%, 정서학대 11.9%, 방임 40.7%로 나타남.

- 양육자가 보고한 경험률(가해)는 신체학대 3.9%, 정서학대 8.8%, 방임 38.4%로 나타남.

- 9-18세 아동(피해)이 부모(가해)에 비하여 경험을 높게 보고하였음.

- 최근 울주, 칠곡 사건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재판부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고 더불어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양형기준에 따라 최대 7년보다 더 강하게 10년, 15년으로 구형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국민들은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최소 성폭력 양형기준 등으로 상향해야 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증가

- 아동 대상 전체 성폭력 건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2008년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여성가족부, 2010).
- 피해 아동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할 뿐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결과를 보이므로(Reeker, Ensing & Elliott, 1997),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유관기관(예: 사법기관, 학교 등) 협력망 구축이 필요함.

□ 실종아동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6월 4일에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도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들까지 포함하는 범위 설정 모색
- 2013년 6월 개정된 실종아동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실종아동 발생건수, 발견건수, 미발견 건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13년 9월 기준 경찰청의 발생건수는 17,758건이며, 이중 17,224건이 보호자에 인계되었음.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이나, 실종아동 미발견 건수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Ⅱ-13〉 실종아동 발생건수(2009-2013년)

연도/사례	실종아동			실종아동 미복귀율 (%)*
	발생건수	발견건수(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	
계	127,299	126,326	973	0.76
2009	21,832	21,803	29	0.13
2010	26,984	26,915	69	0.26
2011	28,099	28,013	86	0.31
2012	27,295	27,070	225	0.82
2013	23,089	22,525	564	2.44

주: 실종아동전문기관 (www.missingchild.or.kr)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함

-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 의하면, 아동을 잃어버린 경험은 약 6%로 나타났으며, 실종경험 시기는 3-8세로, 취학전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실종의 위험이 높았음.
 - 장소는 집주변이 가장 많았음.
- 신고되지 않은 실종이 약 25%임.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함

나. 정책과제

2-4-1.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²⁰⁾

□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범국민 운동 강화 및 확대

○ 사업내용

-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 부처 합동 범국민 인식 개선 운동: 온/오프라인 공익 광고 활성화
- 대중매체를 통한 인식 개선: 폭력에 대한 다각적인 매체 활용 및 노출로 정보 및 인식 개선 상시 진행.
- 단순 유해물 단속에서 벗어나, 폭력적 대중매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규제 등의 실제적 접근
 - 청소년보호법률의 유해물 등급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섯다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청소년유해물 구분 및 공시, 각 지자체 및 민간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단 활동 중.

20) 이 부분은 (재) 푸른나무 청예단 김승혜 부장의 자문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대책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도 추진계획 참조

□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사업 실효성 제고

○ 사업내용

- 폭력으로 인한 아이들 간의 문제가 확산되어 갈등과 분쟁이 학부모간의 문제로 악화되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학부모 이수 의무화 필요
- 직장으로 가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 산모, 예비부모 교육 등에서 폭력, 인성에 대한 교육 과정 확대 필요.
-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incentive 부여 방안 모색
- 교육내용
 -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가치관, 인식, 정의에 대한 정기 교육 및 학교폭력 발생 시 가정 내 1차 보호 인식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강화 사업

○ 사업내용

- 저연령층 대상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연령에서도 폭력인지 장난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들로 빈번하게 일어나는²¹⁾ 실태임으로 이에 대한 예방교육의 조기 교육 의무화
 -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부터임. 실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들 취학 전 아동 대상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예방사업을 실시할 필요 있음
- 학급단위 및 소그룹 단위의 학교폭력예방교육 확대
 - 학급단위 체험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예방교육 시수확보: 현장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 '학교폭력, 왕따 논란 유치원으로 번지다'. 한겨레 신문 기사 발췌. 7월1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6965.html

수업 시수를 확보하거나 교과필수과정으로 등록하여 교육 이수 의무화

□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강화

○ 사업내용

- 피해 측 Total-Care(토탈 케어)하기 위한 전담기관(현재 시도별 교육청 산하 기관 운영 중)의 확충
 - 학교폭력 피해전담기관이 전국 30개소 정도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일시보호, 사후관리, 통합지원을 위한 기관 확대가 필요함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업중단이나 가출등 제2,3의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전용 청소년 쉼터(그룹홈, 전담 보호기관)의 확충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예.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Wee센터,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과 제3의 전문 민간기관(예. (재)푸른나무 청예단, (사)학가협(학교폭력피해자부모협의회)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 구축
-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치유 전담 바우처 시행 및 확대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통합지원 강화

○ 사업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 선도 전담 바우처 시행 및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에의 연계
- 가해학생들의 회복적 선도를 위한 전문인력(예.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등) 및 전담기관 확충

□ 학교폭력 관련 사각지대 최소화

○ 사업내용

-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응: 사립학교는 공립과 운영주체의 차이와 법률 적용 차이가 근본적 원인이므로 학교폭력 발생 시 사립학교에 대한 컨설팅, 법률 동일적용, 사안처리 공정화 등이 필요함
 - 사립학교는 학교폭력 발생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됨(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큼).

- 실질적 학교폭력 피해보상 마련: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이 모호함. 또한 현재 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선 치료비지원 후 구상권 행사의 체계로 이루어지나 금액이 적을 경우 실효성이 낮음.
- 과가해 발생 시 갈등조정 능력강화를 위한 갈등조정 능력함양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어린이집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아동 및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학교폭력 점검 및 안전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강화
 - 각 지역별, 학교별 학교폭력 점검 및 안전 강화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한 안전모니터링 강화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현 교육부의 컨설팅 개념에서 확장된 민·관 협력의 객관적·전문적 진단과 해결 시스템 가동: 학교폭력 사안발생시 교육부(교육청)과 전문민간(청예단 등)이 함께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사안처리, 피해자 지원, 가해자 선도,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각자의 역할과 해결방안 지원

2-4-2.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²²⁾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강화

○ 2.28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추진방향

- 아동·부모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및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
-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 활성화, 학대

22) 이 부분은 '2.28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2.28 아동학대 예방종합대책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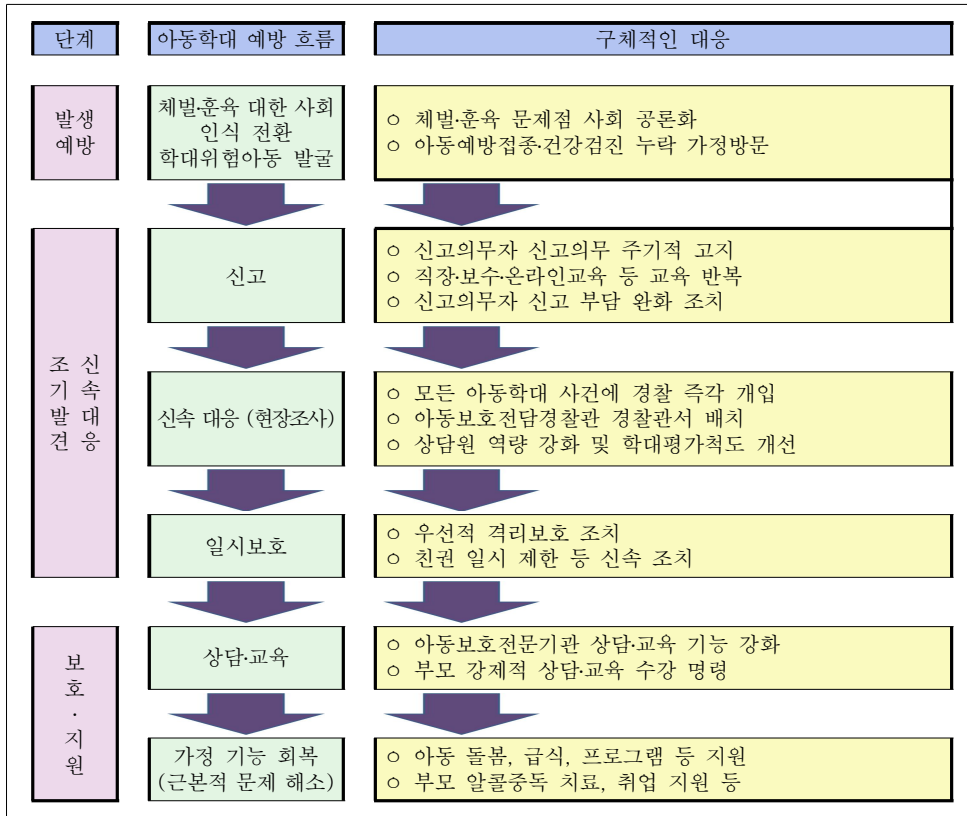
사건 발생 즉시 경찰 개입 등 조기발견·신속대응 체계 구축

-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고위험군 가정 기능 회복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사업내용

- 지속적인 공익광고로 학대예방: 아동학대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 송출 및 온라인교육 등을 통한 일반 국민 인식 개선
 - 체벌·훈육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필요: 체벌과 훈육에 대한 국민 간담회 실시 등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
- 아동교육 실시
 -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980만명 아동 및 청소년 안전교육 충실 이행
- 아동교육 담당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 부모 및 신고의무자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온라인 교육
 - 부모교육: 출생신고, 아이사랑 카드 발행 시 공식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설 교육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신고의무자: 140만 신고의무자 교육 상설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그림 2-Ⅱ-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추진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의 자료 재인용

□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직군의 양성과정·자격취득과정 및 보수교육·직장교육 실시 및 즉시 활용 가능한 아동학대 간이점검표 보급(2014, 9, 29 이후)
 - 정보시스템(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고위험군 발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조기 발견
-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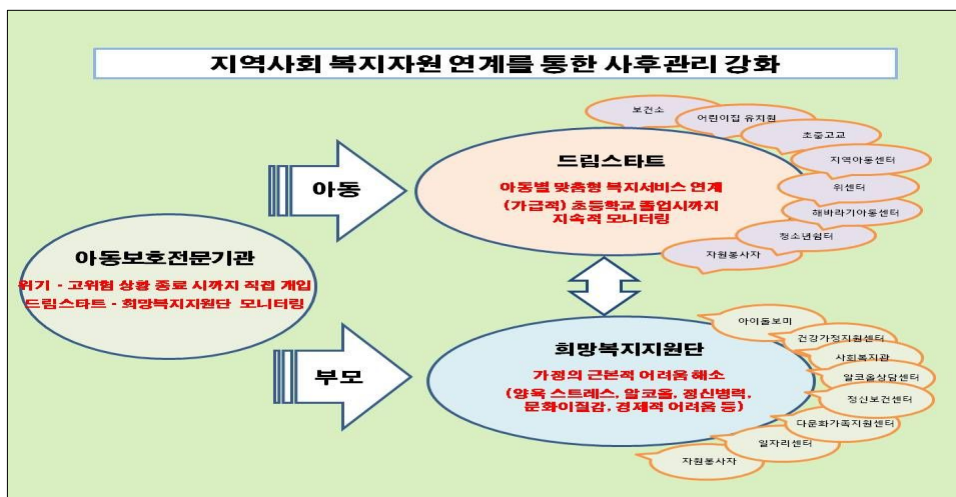
-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경찰이 반드시 개입하여 수사 실시(2014, 4월 개시)
- 가해자 부모에 대한 퇴거, 접근·통신 금지, 친권행사 제한·정지 등을 실질적으로 이행 및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도입(2014, 9, 29 이후)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사업내용

-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을 활용, 아동학대 고위험군의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기능 회복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강화
- 신고접수부터 보호처분 실행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중 관리, 그 이후 원가정 보호된 아동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모니터링 기관으로는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활용
- 모니터링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자원들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함

[그림 2-Ⅱ-9]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 관리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의 자료 재인용

□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 사업내용

- 양형기준 상향 조정
 -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2014. 9. 29 이후)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하는 경우 및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2014. 9. 29 이후)
-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 등 제한(2014. 9. 29 이후)
- 검사 및 판사 등 법조계 인식 개선

□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 및 개입 강화

○ 사업내용

- 예방교육 강화: 부모대상 on/offline 교육,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및 시행, 아동 대상 성폭력예방 애니메이션 개발 및 보급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 정착 및 홍보 강화
-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확충
 - 현재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8개소이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8개소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개입 강화
- CCTV 모니터링 강화
 - 현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사전예방용이 아닌 사후사건 해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아동의 이동아 잦은 장소를 선별하여 모니터링 하여 사전 예방

2-4-3. 실종아동 대상 예방 및 개입 강화²³⁾

□ 실종아동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사업내용

- 실종아동 등 관련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 TF팀 설치
 - TF팀은 관련 부처 담당공무원 외에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 및 실종아동 가족대표도 참여를 목표로함.
- 찾기 관련 민관 네트워크의 구축 및 다 기관적 접근
 - 최근 들어 협력활동의 일환인 민·관 통합 일제수색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경찰청과 전문기관은 찾기 사업에 있어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과 확대가 필요함.
- 전문기관의 전국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 전문기관 1곳 이외의 광역단위 거점 확보 필요.

〈표 2-II-14〉 전문기관 서비스 전달체계 확대(안)

대안		장점	단점
1안	전문기관과 유사한 3-5개의 권역별 지부 확대	전문성과 체계성이 높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에 의문
2안	어린이재단지부(권역별)에 담당 실행인력 배치	기존 인프라 활용	위탁기관이 바뀔 경우 문제가 발생함
3안	시범사업실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연계)	저비용의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

자료: 김성천 외(2009). '실종아동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62의 자료 재인용.

23) 이 부분은 실종아동전문기관 강병권 소장이 작성한 부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2008년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실종아동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실종유괴 예방사업 강화

○ 사업내용

- 공익광고 방송, 실종 아동 등 예방캠페인, 홍보 포스터 및 비디오 배포 등의 인식교육 프로그램 강화
 - 기존의 실종아동 등 예방주간 선정, 정보제공사업, 연령별 특성에 맞는 예방프로그램의 제작과 교육 실시 강화 포함
- 실종예방관련 교사교육이수 의무: 보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에게 의무적인 교육시간(4시간)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인사 등에 반영함.
- 14~18세 연령확대에 따른 예방프로그램 마련: 가출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제작, 연구 진행
- 보호자 교육 강화: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필요 시 가정방문을 통해 고위험대상(아동방임 가족, 장애아동 가족, 조손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교육 제공
- 실종예방 ID 발급과 보급
 - 실종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아동, 장애인 등이 이동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ID(명함형, 스티커형, 찢찍이형)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각 10~30매(1년 단위) 정도씩 보급하여 이들의 실종 가능성을 낮춤

□ 실종아동 찾기 사업 강화

○ 사업내용

- 찾기사업 수행은 경찰에서, 찾기사업 관련 정책 제시는 복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수행은 미비함.
- 경찰관,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 지문등록사업 홍보 강화
 - 지문등록사업에 대한 부모인식교육
- 지문등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 대상 Child ID Kit 보급: 경찰청, 복지부, 민간 지원으로 운영 가능 (2013년의 경우 KBO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10,000개 지원)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생산 및 배포하는 예방수첩 보급

□ 실종가족지원사업 강화

○ 사업내용

- 기존 실종가족지원사업강화
 - 사례관리,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자조모임,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자조모임 등

□ 실종 아동 관련 법제도 재정비

○ 사업내용

-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상카드 제출
 - 현재 실종아동등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③항에 따르면,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게 되어 현실적 연계시스템에 대한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아동신상카드 입력자료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
- 관공서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활용한 실종정보 제공 및 실종아동 포스터 게시
- 실종아동 등 예방사업을 위한 관련 법조항 개정
 - 정보제공사업을 위해 관공서 등 정보게시판 활용의무화 법조항 개정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2-4. 사회적 안전 확보	2-4-1.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인식개선 및 규제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부처 연합 캠페인				
			온라인-오프라인 인식 개선 운동				
			폭력물 등급제 강화				
			폭력유해물 규제 강화				
			폭력물 정기 모니터링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사업 실효성 제고	부모교육 이수 의무화				
			직장에서의 부모교육 실시				
			산모, 예비부모 교육 등에서 폭력 및 인성에 대한 교육과정 확대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모색				
		예방교육 강화	폭력예방교육 조기 실시 의무화 (어린이집, 유치원)				
			학급단위, 소그룹 단위 예방교육 확대				
			예방교육 시수확보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 강화	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관 확충				
			학교폭력 피해 아동 중심 청소년 쉼터 확충				
			지역사회 유관기관(공공 및 민간)과의 연계 구축				
			학교폭력 피해 치유 전담 바우처 실시				
		학교폭력 치유 바우처 사업	학교폭력 가해 선도(치유) 전담 바우처 실시				
			가해학생 선도 위한 전문인력 확충				
			가해학생 선도위한 전담기관 확충				
		학교폭력 사각지대 최소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대응				
			실질적 학교폭력 피해보상 마련				
			갈등조정 능력함양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점검 및 안전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강화				
	2-4-2.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강화	공익광고를 통한 인식개선 도모				
			아동대상 교육강화				
			아동교육 담당 강사 양성				
			부모 및 신고의무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온라인 교육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2-4-3. 실종아동 대상 예방 및 개입 강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학대 위험 노출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 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 모색, 기능회복 및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양형기준 상향 조정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경우 아동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제한					
		검사 및 판사 등 법조계 인식 개선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 및 개입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아동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제 정착 및 홍보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확충					
		장애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개입 강화					
		CCTV 모니터링 강화					
	실종아동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사업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 TF 설치					
		찾기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실종아동전문기관 확충(광역단위 거점)					
	실종유괴 예방사업	인식교육 프로그램 강화					
		실종예방관련 교사교육이수 의무화					
		14-18세 연령확대에 따른 예방 프로그램 마련					
		보호자 교육 강화					
		실종고위험군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실종예방 ID 발급 및 보급					
	실종아동 찾기사업	경찰관,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지문등록사업 홍보강화					
		가족 대상 Child ID Kit 보급					
	실종가족지원사업	기존 실종가족지원사업 강화					
	실종 아동 관련 법제도 재정비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상카드 제출					
		실종정보제공 및 실종아동 포스터 게시					
		정보게시판 활용의무화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¹⁾
2-4-1.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학부모교육 이수율	—	신설
	조기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아동대상)	—	신설
	학급단위, 소그룹단위 예방교육 건수	—	신설
	학교폭력피해진담기관 수	—	신설
	학교폭력 피해 전문 청소년 쉼터 수	—	신설
	학교폭력 피해치유 전담바우처 수혜율	—	신설
	학교폭력 가해 선도 전담바우처 수혜율	—	신설
	학교폭력 전문인력 수	—	신설
	학교폭력 피해율	13.7%	10%
	학교폭력 가해율	10.6%	7%
	범죄예방교육 실시 횟수	—	신설
	범죄예방교육 수혜자 수	—	신설
2-4-2.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학대피해 아동 보호건수(전체, 유형별)	6,403건	4,500건
	아동 성폭력 피해자 수	7,796건	5,500건
	아동 대상 성범죄건수	999건	600건
	학대 및 방임 교육 이수율(아동대상)	—	신설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	36.9%	70%
	아동학대율(인구 1천명당 학대아동 비율)	—	신설
	아동방임률	—	신설
	성폭력 피해지원센터 수	—	신설
2-4-3. 실종아동 대상 예방 및 개입 강화	실종아동 발생건수	23,089건	17,000건
	실종아동 발견율	98.8%	100%
	실종아동 전문기관 수	—	신설
	실종예방 교육 이수율(교사, 학부모)	—	신설
	고위험군 아동대상 실종 예방 ID 발급율	—	신설
	경찰관 실종 찾기 관련 교육 이수율	—	신설
	지문사전등록률	17.2%	35%
	실종가족지원서비스 수혜율	—	신설

주 1: 2019년 목표치의 경우, 일부 지표(실종아동 발견율, 지문사전등록율,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제외하고는 현재 수치보다 약 30% 개선을 목표로 삼음.

자료: 1) '학교폭력피해율' - 푸른나무 청재단(2014)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

2) '학대피해 아동보호건수': 보건복지부(2013).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 '아동 성폭력 피해자 수': 대검찰청(2012b). 『범죄분석』

4) '아동 대상 성범죄 건수': 여성가족부(2010). 『2000-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5) '신고의무자 신고비율': 관계부처합동(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6) '실종아동 발생건수': e-나라지표(2014). 『실종아동발생 및 처리현황』. www.index.go.kr

7) '지문사전등록률':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2013).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¹⁾
------	----	----	--------------------

www.safel82.go.kr



Ⅲ. 보호 및 돌봄 강화

- 3-1. 아동사회안전망 조성
- 3-2. 차별없는 사회 구축
- 3-3. 지역사회보호 강화

3-1. 아동사회안전망 조성

가. 현황 및 문제점

1) 가족의 기능상의 한계²⁴⁾

(1) 가족(부모) 지지서비스 정책의 부족

□ 국제아동권리조약 제 18조 1항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부모의 제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 2항에서는 ‘국가는 부모가 그 양육책임을 수행하는데 적당한 원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부모의 아동 양육과 발달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지지하는 서비스와 보충적인 또는 대리적인 서비스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는 주로 부모의 보호나 양육수준이 부적절하거나 한계가 있을 때, 외부 서비스를 통해 부모 역할의 일부분을 보충하도록 할 수 있는 보충적(supplementary) 서비스나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 대리적(substitute)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보충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육서비스 및 소득보장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이 이에 해당됨.

○ 대리적 서비스는 입양, 가정위탁, 양육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24) 본 내용은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의 자문원고임.

반면 아동복지서비스의 세 번째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지적(supportive)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취약한 것이 사실임.

○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나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고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서비스로 다른 서비스와 달리 아동이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따라서 이 서비스의 기능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조나 구성원의 역할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만 외부에서 가족 내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함. 아동 및 가정 상담소,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보충적 서비스나 대리적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강하여 실제로 지지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그 비중 역시, 매우 적은 상태임. 실제로 아동복지 실무 현장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개입만으로 아동의 변화를 유인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부모에 대한 개입이 동반되었을 때,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2) 부모교육(참여) 및 추진역량의 부족

① 부모교육 전문가의 부족

□ 부모의 역량강화 및 교육과 같은 지지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동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부모의 미참여, 즉각적인 효과 확인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부모의 교육과 같은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임.

□ 특히 일반적인 부모교육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의 유형 및 발달 단계, 문제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에 적합한 전문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임.

② 다양한 부모교육의 모형 부족

- 현재의 부모교육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모 교육은 학습 능력 향상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편적인 부모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다양한 부모의 특성이나 계층을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부모의 교육 참여 역시, 활발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모형이 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아동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부모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소규모 교육, 집단별 맞춤형 교육,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모 교육 모형이 개발되어야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또는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 사실임.

③ 부모의 교육 정보 및 참여 역량 부족

- 일반적으로 부모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부모교육이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부모 교육에 대한 참여 의지가 낮거나 참여할 여유가 없어 부모 교육 접근성이 매우 낮음.
- 사실 부모 교육은 참여가 필요한 사람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나 부모교육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참여 의지가 높은 사람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부모교육의 다양화, 부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부모

교육이 필요한 집단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동시에 개발될 필요가 있음.

2) 가족 중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

□ 가족중심의 아동보호 우선원칙의 실현

- 가족중심의 아동보호실천은 가족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체 보호시스템이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둬. 즉 가족중심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성, 영구성, 아동의 안녕, 전체 가족 개입의 초점이 되는 것임(노충래 외, 2009)
- 아동보호의 목적 중의 하나는 친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취해진 후에도 가족기능의 회복이 어려울 때 국가책임의 아동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다양한 가정의 아동보호의 형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친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가족지원기능 강화 노력이 필요함

□ 가족기능 및 부모역할의 강화

- 핵가족화 및 독거가주 증가, 이혼의 증가, 저출산 및 노령인구의 부양부담 증가 등은 가족기능의 약화를 초래
- 2013년 이혼건수는 11만 5천 3백 건으로 전년도 대비 0.9% 혹은 1천 건 정도 증가하였으며, 조이혼율은 예년 수준에 머무름. 반면 평균 결혼지속 기간이 14.1년이어서 40대에 이혼 가능성이 높음.
- 2012년 이혼사유의 47%는 성격차이, 13%는 경제문제, 그리고 기타사유가 21%로 나타남.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51.2%, 10년 전 대비 17.3%p 감소하였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2003년 49%에서 2013년 56%로 약 7% 증가하였음(통계청, 2014).

- 이러한 가족해체 상황에서 부모의 이혼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부모가정, 특히 여성가구주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짐. 특히 이혼가정 가운데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은 24%에 불과할 정도로 양육비 지급 및 이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함.
- 친부모의 부모역할 능력강화 및 회복과 더불어 가족기능의 회복이 정책 및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함.

3)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국가 책임성 미흡

□ 출생신고제도의 문제

- 우리나라는 아직 부모의 자의에 의한 출생신고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신고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 시 제재도 매우 미미함.
- 가족관계등록법 제 44조 제 4항에 따르면, 출생 신고 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제 46조 제 2항에 의하면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함.
- 1991년 비준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아동권리협약 7조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함.
- 현행 출생신고제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혼모(부) 자녀, 재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난민 자녀 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본국 출생아동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의 그물망을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또한 부모의 출생신고에 의한 출생아동 수는 파악가능하나 신고 되지 않은 아동 수도 있을 것(예: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 출생 7년 만에 본인이 시조가 되어 출생 신고 및 이름을 가진 사례가 있음)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보호대상아동 보호체계 취약(김미숙 외, 2013)

- 아동학대 및 사망, 혹은 유기 등과 같은 아동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즉흥적 관심은 촉발되나,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은 매우 미흡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국가책임 경계에 대한 고민, 서비스 집행 과정의 부처 간 연계 부족, 형식적인 서비스 연계,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의 제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관과의 협력문제 등으로 인한 효율적 업무 처리 미흡 등이 공통된 문제로 나타남.
- 특히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서비스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 일선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및 잦은 교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부담, 가해부모의 상담원 대상 폭력행사, 가해부모의 강제수감명령 이행 모니터링 부재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보호대상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지속적이고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전체 보호대상아동 중 빈곤, 실직, 학대 등 해체가정 아동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미혼모 아동이 약 25%를 차지함(보건복지부, 2014).
- 친가정 지원 및 기능복원 서비스 제공이 취약하며, 보호대상아동은 보건복지부가, 가족관련 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어 전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임.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과정에서 일시보호 이전 단계에 친가정 지원에 필요한 진단(assessment)절차가 부재하여 그 결과, 일시보호 종결 이후 아동의 친가정 복귀는 가정위탁사례 중 12%, 일반위탁사례 중 36%로 복귀 사례가 저조함.
- 이에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부재 문제점과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전담인력의 부족이 문제의 심각성을 증가시켜 주

고 있음.

- 한편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 개입의 부재, 친권의 개입이나 제한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제반 규정의 부재, 구상권 청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부모 및 가족 단위의 문제점이 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아동 중심적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어 친가정 복귀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어려움.

□ 가정보호우선정책의 강화

- 보호대상 아동이 부득이하게 친가정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가정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함. 그러나 2013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 6,020명 중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3,257명으로 입양, 가정위탁 등과 같이 가정보호 조치된 아동 2,763명보다 훨씬 많음(보건복지부, 2014)
- 아동이 가정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보호원칙을 우선시 해야 함. 즉 아동 대 가족이 1:1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친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등과 같이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더불어 영원한 주거지를 가질 수 있는 영구계획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에 유입되는 사유로 빈곤과 실직, 이혼과 별거 등이 주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제도 운영과 일반국민의 제도 이해에 심각한 오해를 고착시킬 수 있음. 특히, 가정위탁보호제도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시보호서비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친부모의 아동 양육권 포기나 책임감 저하로 이어지면서 아동보다도 부모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되고 있음(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 고위험 아동 대상 서비스 기능 문제

- 아동학대나 아동의 범죄피해는 가족빈곤 또는 지역사회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짐.
- 학대와 빈곤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극단적 행동

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은 그 영향이 아동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상상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
- 특히 여러 위험요인에 중복하여 노출되는 아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입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가정이 아니라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은 개별 가정 내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보호시설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생활환경 스트레스, 지속적인 양육자 부재, 발달 지연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국내 시설 보호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더 많은 행동문제를 보이며(성미영, 2006), 정서조절능력이 뒤떨어지고(김성애, 박성연, 2009), 정서지능 및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 모두 일반가정 아동보다 낮았음(박미경, 문혁준, 2009).
- 그룹홈 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 부모의 이혼, 학대, 방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인해 우울 및 불안 정도가 높고 심리정서적인 상처로 인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음(강현아 외, 2012). 나아가 그룹홈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편견과 차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함(양은별, 정익중, 2013).
-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학대와 방임피해가 팔목할 만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입전략에 대한 지식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수행 문제가 깊어지고 우울감이 높게 나타남(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 특히 대리 및 친인척 가정위탁의 경우, 위탁부모의 고연령과 건강문제는 위탁아동이 보호대상이 아닌 보호자 역할을 하게 하는 ‘역할전환’ 현상이 일어남.
-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민감하고 반응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아동복지 서비스는 시설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영속성을 기본

원칙으로 재편되어야 함(정선옥, 2004).

□ 아동의 발달권·생존권 보장 미흡

- 2012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0,943건으로 매해 늘어나고 있음. 이 중 13.8%가 재신고 사례이며,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3.9%로 가장 많았음. 특히 재신고 사례에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현상은 궁극적으로 아동사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표 2-III-1〉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

(단위 : 건, %)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복신고	일반상담	계
응급아동학대 의 심 사 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1,368(12.5)	7,611(69.6)	8,979(82.1)	34(0.3)	1,930(17.6)	10,943(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3b).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51의 내용 재인용

〈표 2-III-2〉 재신고 및 신규신고 접수건수

(단위 : 건, %)

재신고 사례				신규신고 사례	계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949(8.7)	412(3.8)	143(1.4)	1,510(13.8)	9,433(86.2)	10,943(100.0)

자료 : 보건복지부(2013b).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52의 내용 재인용

〈표 2-III-3〉 아동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 %)

구 분	부모	타인	친인척	기타	파악 안 됨
비 율	83.9	7.9	6.8	1.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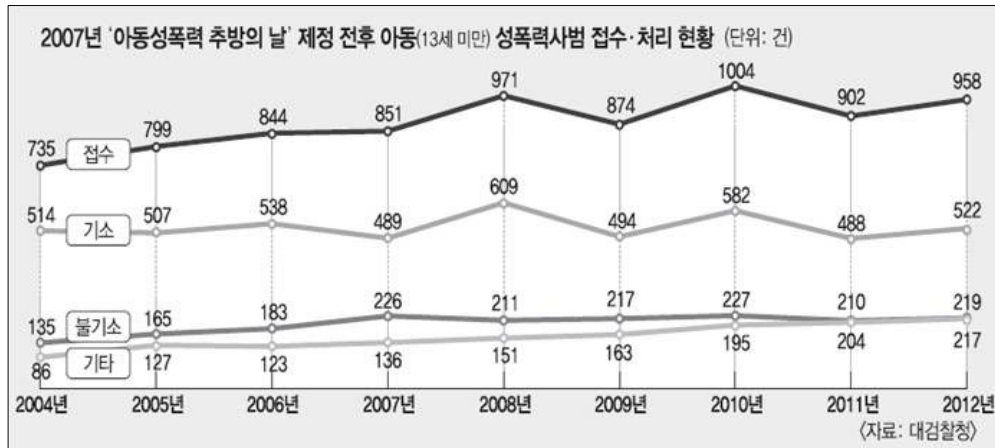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3b).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4의 내용 재구성

- 아동학대의 주 가해자가 부모인 점, 특히 아동이 학령기 발달과정에 있는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 전달체계 혼선,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 지자체마다 다른 아동학대예방센터 예산 편성 및 운영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예방사업 수준이 낮음.
- 이에 아동보호서비스와 같은 필수적인 국가사업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데 기인하기도 함.
- 2014년 1월 28일 제정되고, 동년 9월 29일에 시행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지자체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 및 의지 부족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학대 현상은 초국가적인 산업이 되어가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발달로 인해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점차 심화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회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일관된 방향의 근본적이고 지속인인 통합적 정책접근보다는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대응요법에 그치는 경향을 보임(김미숙 외, 2009).
- 아동성매매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자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됨.
- 우리나라는 성폭행 발생 세계3위이며 성폭력 피해 대상 중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로 성폭력피해 아동의 56%가 7세미만, 41%는 13세 미만으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의 비중이 큼.
- 여성가족부는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으며 대검찰청의 2004~2012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사범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 시행된 2007년 851명에서 2012년 958명까지 증가함.

[그림 2-III-1] 2007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제정 전후 아동(13세 미만)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 최지숙(2013, 2.23). [아동 성폭력 실태] 年1000명 아동 성폭력 피해... 24%가 친척·이웃 소행. 서울신문.

- 아동성폭행 예방 관련 교사양성이 절실하나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사양성이 미흡하며 전문상담교사 또한 부족한 실정임. 2010년까지 883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하였으나 전국학교의 학생 수를 감안할 때 전문교사의 적극적인 양성이 필요함.
- 체계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부족, 성매매 및 성학대 예방교육 시간 및 교육 자료의 부족 또한 문제로 나타남.

□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도입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음.
- 현행 법령 체계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이 나 다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74.5%가 고등학교 무상 혹은 의무교육 실시에 찬성하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들의 약 60%가 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양승실 외, 2012).

□ 취업부모 자녀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족 구조 및 기능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보육서비스란 기존의 영유아 보육차원을 넘어서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현대 사회의 보육은 일차적인 단순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영유아의 전 영역에 걸친 개입 및 이에 대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함(기순신, 김호인, 2012).
- 현재 아동 보육서비스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나, 보육의 공공성 부족, 취업부모 혹은 경력단절 여성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 종류, 보육교사 자격 남발 및 전문성 부족과 질적 저하 등의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음.
- 반면 무상보육의 전면시행으로 인해 취업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고 있으며, 사립 보육서비스는 경쟁적인 교과 외 과정으로 인해 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대비 5.3%에 그치고 있음(양미선, 임지희, 2012).
-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와 더불어 처우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공공보육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됨.
- 반면 최근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반면 저소득층 및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불합리한 요구(예: 아동돌봄의 목적 이외의 가사업무 요구 등)로 인해 문제발생의 소지를 만성적으로 갖고 있음.

4) 저소득층 및 유사빈곤층 아동 보호 문제

□ 저소득층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

-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아동의 출발선을 공평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음.
- 2012년 기준 아동의 빈곤율²⁵⁾은 12.2%로 추정되며 이는 2011년 11.7%에 비해 0.5% 상승한 수치임(통계청, 2013).
- 빈곤은 아동들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성 등의 전 영역에 다양한 부정적 문제를 야기함(권은선·구인회, 2010; 신인순, 2011)
- 2014년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연구 결과 수급권자 아동 280,000여명을 제외한 67만여 명의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됨. 사각지대에 속한 아동들은 수급권자 아동들보다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학업성적과 자존감이 이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 비율 또한 수급권자 아동보다 높았음. 또래애착도 수급권자 아동보다 낮았으며, 사회성도 낮게 나타남(허선 외, 2014).
-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결식은 식품미보장(food insecurity)의 문제를 야기하여, 아동에게 불균형적인 영양공급과 신체발달, 저체중 및 비만 등의 불균형적인 현상을 낳고 있음. 나아가, 결식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수준이 높고 학교 적응수준이 낮았으며, 영양지수의 하위요인 가운데 식사의 다양성, 절제, 실천 수준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음(조수민·노충래, 2014).

25) 빈곤아동은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함.

- ‘2009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2009)’에 따르면 12-18세 아동 가운데 빈곤아동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항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8.4%, 81.5%, 65.5%에 이른 반면, 그 외 아동들의 응답비율은 52.2%, 86.5%, 77.4%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의 조식 및 석식 비율에서 12-13% 차이가 있음
- 현재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층 가정과 아동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드림스타트’, 돌봄과 결식, 그리고 학업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등이 있으나,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만한 구심점이 없을뿐더러 서비스 중복을 중재할 기관도 없는 형편임.

5)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피해화

□ 노동참여아동 보호

- 아동·청소년 대상의 경제적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5년 노동부(고용노동부), 교육인자원부(교육부), 청소년원회(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근로자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50.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0.2% 등이 적발됨(여성가족부, 2014).
- 2012년 우리나라 청소년 중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관련 교육 경험을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고작 12.2%에 불과하며, 성인용 업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4%였고 전체 청소년의 0.8%는 지금 현재 성인용 업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음(여성가족부, 2013).
- 또한 근로청소년들의 불결하고 험한 작업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구타 폭행, 성폭행 피해 등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

-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를 금지(예외적으로 취직인 허증을 통해 허가)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법적 체계 혹은 청소년 보호 영역에 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고용노동부, 2012).

□ 미혼모 및 미혼모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미흡

-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양육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에 있으며, 기존 시설에 입소 대기 기간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표 2-III-4〉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시설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32	32	33	33	3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공동)	23	24	24	24	2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공동)	1	1	1	1	1

자료 : 보건복지부(2014a),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미혼모 가운데 재임신으로 인한 비율도 일정 수준에 머물러 있음. 즉, 미혼모의 28.6%가 미혼상태에서 이미 출산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미혼모들의 재임신, 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05).
- 이에 비해 미혼부에 대한 책임 및 구상권 청구는 전무한 상황임.
- 사회적 차별 및 낙인으로 인해 양육모가 아동을 양육하기보다는 입양 보내는 비율이 여전히 높음.
-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청소년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미혼모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양육을 위한 시설거주 기간, 양육비 지원, 자립을 위한 지원 등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이로 인해 영유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일부에서는 영유아를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입양대상 아동을 위한 제반 지원서비스 취약

- 미혼모(부) 아동의 친부모 양육 지원체계 취약
-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취약한 재정 지원으로 입양기관들은 기관운영비 확보를 위해 국외입양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공계순 외, 2008).
- 2012년 8월 5일 시행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입양이 길어지자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2013년 239명의 영아가 베이비박스에 유기됨.
- 또한 헤이그협약의 가입 및 비준 준비에 따른 국내 아동복지 여건 개선의 과제와 더불어 법원에 의한 입양대상 아동의 ‘입양가능’ 판정이 법원 조사의 지연과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입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아동의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입양이 거의 어려우나 ‘국내입양우선 추진’ 원칙으로 국외입양을 기다리는 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전경숙, 2013), 경제선상의 장애아동도 국외입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우려를 낳고 있음.
- 나이가 한국전쟁 이후 해외입양 아동 16만 여명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정보가 부재하여 ‘뿌리 찾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후관리서비스가 미비한 형편임.

□ 지체 및 정신 장애 아동의 자립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 현재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수 2백5십만 명 가운데 장애아동의 수는 7만8천 명 가량으로 전체의 3.1% 수준에 이르며, 장애아동 가운데 약 22%는 건강이 매우 나쁜 편에 속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장애아동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검진이 요구되나 전체 장애아동의 약 62% 정도만이 의료검진을 받고 있으며, 정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장애요인으로 조사됨(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은 평생장애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나아가 <표 2-Ⅲ-22>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과 2011년 사이 3년 동안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크게 향상된 것이 없을 정도임.

〈표 2-Ⅲ-5〉 장애인의 교육 수준

(단위 : %)

구 분	2008년	2011년
무학	16.0	11.8
미취학	0.6	0.3
초등학교	33.0	32.8
중 학 교	15.9	18.3
고등학교	24.4	24.9
대학(3년제 이하)	3.1	3.2
대학(4년제 이상)	6.0	7.5
대학원 이상	1.1	1.3
계	100.0	100.0

자료 : 김성희 외(2011).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각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매우 미흡하고 실제적인 기능도 매우 저조한 상황에 머물러 있음.
- 나아가 장애아동의 자립을 위한 전환계획서비스가 조기에 마련,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전문인력 또한 절대 부족함.
- 특히 장애아동이 독립된 성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일자리 창출, 우선구매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서비스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돌봄지원을 위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 주간보호 및 단기거주 서비스 장애영유아 보육지원사업, 양육수당이 있음.

- 정부가 주도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지체 장애와 정신 장애의 구분 없이 행정 업무 보조, 우편물 분류 보조, 주차단속 보조, 급식 도우미, 안마사 등 단순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어 장애아동이 자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
-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의 장애인 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고용 영역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적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음.

6) 가정외 아동 보호의 취약

□ 퇴소아동 및 연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 사회적 취약계층인 시설보호아동은 시설보호가 종결되면 대부분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하여 공식적인 사회지원체계로부터 멀어지게 됨, 하지만 독립생활을 위한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기에 가족이 중심이 된 일차적인 사회지원체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퇴소아동은 정신적, 경제적인 면에서 충격과 위기를 경험하게 됨. 연장아동 중 일부는 자립의지의 미약과 사회의 냉대로 사회적응력이 부족하여 문제청소년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보고됨.
- 아동이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입소부터 사후관리까지 자립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매뉴얼 개발이 요구됨(박은미, 2013).
- 가정이란 지원체계가 결여된 시설아동에 대해 국가 또는 사회가 제도적으로 그들의 퇴소 후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
- 퇴소 아동의 실태분석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주거의 불안정성, 퇴소아동의 진학을 위한 재정지원 미흡, 불안정한 취업과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의 높은 종사 비율, 구직단계에서의 지원 부족, 퇴소아동의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계층 진입 가능성, 퇴소아동의 진학 및 생활에 대한 높은 욕구 등이 있음(아동자립사업지원단, 2012).

- 퇴소이전 시설보호기간 동안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립프로그램과 퇴소 이후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균등한 체계의 구축으로 퇴소아동이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퇴소 후 학비, 자립지원금 등은 현재 지원이 가능한 영역에 있어 실제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심한 편으로 이는 어느 지역에서 아동이 보호되느냐에 따라 보호수준과 자립 상태가 다르게 준비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음(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2).
- 자립생활관의 경우 지역별로 12개소가 마련되어 있으나 2011년 정원 385명 중 23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6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퇴소를 앞둔 아동들의 가장 큰 자립욕구 및 어려움이 주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거시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아동자립지원사업단, 2012).
- 한편 시설퇴소 아동이 퇴소시 지원받는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계좌(CDA)의 저축금이 역기능적인 부모나 타인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가정외 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율 향상

- 가정위탁의 종결 사유는 ‘만 18세 이상 종결’(63.7%)이 가장 주요한 사유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이 ‘친가정복귀’(11.5%)로 나타남(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이는 미국의 2012년 통계 결과, ‘친가정복귀’가 종결사유의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입양’이 22%, ‘만 18세 이상의 종결’이 10%, ‘후견인지정’이 7%로 나타난 것과 비교됨.
-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하였다가 다시 가정외 보호유형으로 재진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현재 없는 실정임. 이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유형에 관계없이 개인사례수준에서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국가관리 데이터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임.

나. 정책과제

3-1-1. 가족의 기능강화²⁶⁾

□ 가족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 가족기능 및 부모역할 강화를 통한 아동의 원가정 분리 예방대책 마련

- 부모교육 및 학대 예방 교육, 미혼모(부) 가정 지원, 부모-자녀 상담 등 가족 기능강화서비스를 통해 아동이 가정해체, 학대 등의 이유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사전 예방
- 부모의 빈곤, 실직 등에 대한 대안은 가정위탁보호가 아니라 국민생활기초 보장제도와 고용보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이 되어야 함.
- 이미 아동이 가정위탁보호체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친가정 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제출, 계획에 대한 주기적 평가,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결정에 친부모 참여 독려, 부모의 양육의지와 책임 점검 제도 도입 및 강화 필요
- 부모가 이혼 혹은 별거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고 자녀양육을 포기할 경우 친권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여성가족부(2014)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조기 추진

○ 가정보호우선원칙의 실현을 위한 아동복지 제도적 기반 개편

- 모든 대리보호서비스에서 친부모와의 관계형성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아동이 가족과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도록 정부와 민간체계 협력이 필요함.
-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전문화된 행정적 지원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이에 는 아동 및 가족 전담 인력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 친가정 자립도를 고려한 위탁아동 및 그룹홈의 생계급여 수준 조율 및 친가

26) 본 내용은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의 자문원고임.

정 복귀를 위한 단계적 친권제한 완화 방안 법제화

- 친부모 상담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부처(고용노동부) 협조
- 친부모 관련 서비스 확대(특히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 친부모 양육책임 강화 법제화 및 구상권 제도의 법제화
- 친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재형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변숙영, 2013)

□ 가족 지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아동정책의 대상은 아동과 부모, 그리고 그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 관련 정책들은 아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아동 정책으로서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미진했던 것이 사실임.
- 이러한 현상은 아동에 대한 문제 또는 결과 중심의 개입,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 근시안적인 개입, 대안 없는 원론적인 원가족 중심의 보호정책의 결과라 판단됨.
 - 첫째, 특정한 문제가 이슈화된 이후에 해당 문제에 대한 문제 중심의 또는 결과 중심의 개입보다는 모든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또는 예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편적인, 예방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아동중심의 개입보다는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전적 개입, 포괄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둘째, 대개 아동정책으로서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성과가 목표로 한 아동발달 지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타나기도 함. 따라서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입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아동에 대한 개입이 현상에 대한 개입의 성격이 있다면,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개입의 성격을 가짐. 따라서 시간이 보다 소요되고, 당장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이 해소된다면, 또는 부모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아동 문제의 예방 또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가족 중심의 보호 강화와 아동보호시스템의 안정화, 예산의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임. 또한 아동복지의 대상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및 가족도 포함되며, 이들과 함께 하는 아동복지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 실천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동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부모 교육은 해당 아동과 그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마련되고,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교육 주제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형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반적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초적인 부모교육에서부터 학습, 양육, 아동발달 등을 주제로 한 내용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빈곤, 다문화, 장애 가족 등 문제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교육의 형태 또한 대규모 교육, 소규모 교육, 단기 교육, 장기 교육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 부모교육을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어느 기관이나 주체가 이러한 역할을 전담하거나 보조하는 역할 분담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부모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

- 아동기의 발달은 부모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부모가 많은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아동의 발달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아동을 가진 부모 개인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또는 고려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아동을 가진 부부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역시, 해당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와 연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기존의 아동 관련 기관들은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부모 교육을 시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 교육이 필요한 부모들보다는 참여 의지가 있는 부모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부모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노력이 부모 교육 모형 개발이나 전문가 양성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더불어 다양한 부모교육 주체들이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특히 기존의 아동복지 관련 기관들이 공공 기관 또는 학교와 함께 연계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공공 기관이나 학교와 연계한 부모 교육의 경우, 부모의 신뢰성이 높고, 따라서 접근성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으며, 내용적인 수준에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임.

□ 부모교육 지원센터 설립

- 부모교육은 교육의 규모, 대상, 문제의 형태, 아동의 발달 시기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부모교육 모형의 개발, 부모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부모교육 시행 기관의 활성화 등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조사 및 연구 개발할 전담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으나 기존의 기관 및 부서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역할 분담을 하는 것 역시,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3-1-2. 아동보호체계의 국가책임성 강화

□ 아동 출생 시부터 국가 차원 관리 보호망 구성

- 현재 부모의 출생 신고제는 가정 단위의 법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사회가 담당하는 법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출생등록제로 전환이 필요

※ 영국에서는 모든 아동이 출생하고 42일 이내에 지역의 등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병원을 통해서 출생 등록이 가능하며, 부모가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 병원의 행정 직원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호대상 아동 보호체계 개선(김미숙 외, 2013)

-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아동중심의 관점 강조하며 가정해체의 예방과 같은 정책이 우선시 되도록 해야 함. 이는 아동이 아동복지체계에 유입되어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됨.
- 아동중심 아동보호체계는 개별 서비스 기관 또는 담당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가 함께 대응하고 공유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며, 약화된 국가의 책임성을 규명,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제도적 개선도 필요함.
- 발달위기 대응력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이원체제 연동으로 위기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및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
- 위기발생에 대한 사후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친가정 보호 원칙을 지지하는 가족지원서비스와 사전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확충 병행 추진
-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아동의 발달적 연령과 특성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보호 및 양육될 수 있는 가정을 선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여 가정 외 보호보다는 가정보호서비스 비율 향상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상황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및 DB 구축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 활성화 및 아동복지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
- 아동복지 전반 및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전문인력 이탈 방지 및 확충을 위한

처우 개선

- 가정보호 조치 사전에 일반위탁가정을 다양하게 선별하고 사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교육 후 장기간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배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위탁가정은 친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틀 안에서 법정 교육과 훈련을 거치고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있도록 원칙 수립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개입을 거부하는 위탁가정 발생 시 행정관청 및 사법체계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접근 필요
- 조손가족의 경우 노인 문제와 아동 문제 양쪽 모두를 다룰 수 있는 장기간의 복합적인 서비스 개발 필요

□ 고위험 아동 대상 서비스 기능 향상

- 아동이 처한 위험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 또는 가족 내적의 문제로 국한 짓는 서비스를 거시적 관점의 복합적 서비스 체계로 전환
- 가정폭력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과 관이 함께하는 통합 사례 관리망 구축(김광혁, 김정석, 2012)
- 다차원적인 예방서비스망 및 지원서비스 구축 (심리치료 바우처의 적극적 활용 및 전문치료상담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고용 확대 등)

□ 국가 차원의 아동 생존권·발달권 보호

-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생존권 및 발달권을 침해할 경우 아동의 권리 우선
- 학대 등으로 아동이 위기에 처한 경우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피치 못할 경우(예: 아동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분리하고, 분리 후에는 꾸준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친가정 보호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가해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 수강명령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친권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 및 아동보호기관의 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더라도 일정 기간 부모의 친권을 제한적으로 이관(예: 미국의 경우 supervised visit, unsupervised visit 등으로 아동과 부모의 접촉을 단계적으로 해제함)함으로써 부모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이 이사 등으로 소재지가 바뀌더라도 상담 및 보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조 및 연계 네트워크 구성
 -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교육 관련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강화와 차등적 대응체계 구축하고,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다차원적인 예방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매체물 차단 및 사이버 상 보호 종합대책 수립. 즉, 유해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되, 유익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성학대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기능을 확대 향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즉, 전문적인 수사 및 기소 기능을 대폭 향상시키되, 반복적인 조사 및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됨. 또한 법원관련 종사자들의 전무가 교육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성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전문 강사 양성 및 활용 촉진
 - 성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제 강화 및 신고의무자 보호
- 교육권 보장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무상교육의 범위는 실질적인 기회 균등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을 말하므로(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공보 제191호, 1574), 재정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무상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교육제도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적어도

직접 법률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국가 교육재정의 한계 상, 교육비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과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
- 현재 근로기준법 상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근로를 행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된다면, 더 많은 근로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 보호자의 소득에 기초한 차등보육료제의 확대로 수요자를 위한 보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읍·면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 기혼여성의 초기 노동 및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영아 전담 보육시설 확충 및 취업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한 야간·공휴일·시간제·24시간·방과후 보육서비스 확대
- 보육교사자격제도를 정비하고 보수교육을 엄격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확보 및 양성
-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국 보육정보센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육의 유형 및 대상에 따른 표준시설, 설비 및 환경구성, 표준 교재와 교구 등을 확립
- 다양한 사회계층 및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하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영세민 지역, 농어촌 등의 취약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신설

3-1-3. 저소득층 및 유사빈곤층 아동 보호망 구축

-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보장
 - 저소득층 아동의 식품미보장 문제 (혹은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특히 식품바우처의 문제 (예: 아동이 중국음식 및 피자과 같은 패스트푸드 형태의 식품을 선호하여 비만과 같은 문제를 야기) 보완
 - 균형 잡힌 영양 제공(특히 채소 및 과일 섭취) 및 적절한 영양교육이 동반될 수 있도록 저학년부터 영양교육 기회 제공
 - 빈곤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실시(현재의 심리치료바우처 대폭 강화)
 - CDA(아동발달계좌)의 아동과 후원자의 1:1 매칭 방식을 아동과 부모로 하여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 반면, 아동복지 퇴소아동에게 제공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발달계좌가 부모나 친인척, 혹은 타인으로부터 아동이 이용되지 않도록 보완조치 마련

3-1-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노동참여아동 보호
 - 아동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노동참여의 기회를 갖는 것이 긍정적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동참여아동의 기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노력이 요구됨.
 -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한해 청소년 근로 관련법 준수 실태 검사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의 지도감독 기능 확대
 - 청소년근로 관련법 점검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적발·시정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경각심 고취
 - 공적 인증제도 도입하고 청소년 근로 친화적인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청소년 고용에 대한 교육 강화
 - 고용 사업주 직원 대상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교육 확대
 - 근로청소년 대상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의무교육시간 보장
- 고용청소년 보호 정책 강화
 -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적용 범위 확대
 - 고용근로아동 대상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위급 시 신고체계 구축
 -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 미혼모 및 미혼모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향상
 - 미혼모(부)의 아동양육 환경강화를 통한 양육모의 자녀양육의식 고취
 - 사회적 낙인 및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교육 강화
 - 미혼모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아동양육수당, 보육서비스, 교육 및 직업 교육 개편, 공공 대안학교의 확대 설립,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시설 거주기간 연장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 미혼모 및 미혼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양성평등에 입각한 성교육 강화
- 입양대상 아동을 위한 제반 지원서비스 확대
 - 미혼모(부)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보조, 입양가정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여 입양 촉진(공계순 외, 2008) 등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법 개정을 통해 입양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부과, 전문적인 입양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양가정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원조체계 구축(공계순 외, 2008)
 - 헤이그협약 가입 및 비준에 따른 아동복지 서비스 체계 개편으로 국내입양촉진
 - 헤이그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중앙입양원)의 기능, 조직 개편으로 인한 국제수

준의 입양서비스 체계 구축

- 반면 우리나라도 입양아동의 수여국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입양 및 인신 매매로 인한 입국 등의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 장애아동 교육권 보호를 통한 자립 및 사회참여 보장

-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통한 평생장애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각 교육청별 1개씩 의무적 설치 확대 및 기능 활성화로 장애 학생지원서비스를 공교육시스템에서 구축
- 장애아동의 취학률 향상을 통한 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아동의 개별화된 교육 계획 및 전환자립계획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제반 여건(특수교사 확보, 특수교육 지원 활성화 등) 조성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고용 영역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 장애아동이 각자의 장애 정도와 능력에 맞는 진로 설정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기회 보장

3-1-5. 가정 외 아동 보호 강화

□ 퇴소아동의 자립률 향상

- 퇴소아동 및 연장아동의 자립지원프로그램 이수와 자립지원금의 연계를 통해 자립지원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 퇴소아동 및 연장아동의 자립체험관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단계적 자립을 위한 주거체계(생활복지사의 지도감독 하에 주거생활, 생활복지사 지도감독 없이 하는 주거생활, 2인 1실의 주거생활에서 독실 등으로의 단계적 주거모형) 확립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 확대, 자립지원전담 요원이 퇴소대상 아동의 발달연령에 맞는 자립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별 자립지원금 격차 최소화 및 지자체의 자립지원대책 수립 강화

- 퇴소아동 및 연장아동의 퇴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복지체계 내의 아동에 대한 장기추적 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보호대상아동의 친가족 복귀율 향상

- 원가정 지지와 복원(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계를 위해 가족지원서비스와 아동 보호체계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이분화 된 전달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토록 함.
- 발달환경 개입 차원에서의 원가정 실태 진단 및 욕구 사정, 이에 따른 지원 서비스 확충
-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경로에서 일시보호 이전에 원가정 지원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 노력 강화와 조기 복귀지원 강화
- 가족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확충과 국가 책임성 강화
-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받는 아동, 혹은 가정외 보호(시설, 그룹홈, 가정 위탁 등)를 받는 아동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친가정 복귀를 통해 친부모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요구됨.
- 가정위탁보호는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보호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영구보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3-1. 아동 사회안전망 조성	3-1-1. 가족의 기능강화	가족 지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아동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모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강화				
		학교와 연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모교육 지원센터 설립				
	3-1-2. 가족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	가족기능 및 부모역할 강화를 통한 원가정 분리 예방대책 마련				
		가정보호우선원칙의 실현을 위한 아동복지 제도적 기반 개편				
	3-1-3.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국가책임성 강화	아동 출생시부터 국가차원 관리 보호망 구성				
		보호대상 아동보호체계 개선				
		고위험 아동 대상 서비스 기능 향상				
		국가 차원의 생존권·발달권 보호				
		교육권 보장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3-1-4. 저소득층 및 유사빈곤층 아동 보호망 구축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보장				
	3-1-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노동참여아동 보호 (노동착취율 감소)				
		미혼모 및 미혼모의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향상				
		입양대상 아동을 위한 제반 지원서비스 확대 (중앙입양원 설치)				
		장애아동 교육권 보호를 통한 자립 및 사회참여 보장				
	3-1-6. 가정 외 아동 보호 강화	퇴소아동의 자립률 향상				
		보호대상아동의 친가족 복귀율 향상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3-1-1. 가족의 기능강화	가족 지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실시
	아동 및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실시
	학교와 연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	실시
	부모교육 지원센터 설립	—	설치
3-1-2. 가족중심의 아동복지 체계 구축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이수율	—	40%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 여부	예정	설치
	양육비 이행률	24%	50%
	아동 및 가족 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	20%
3-1-3. 아동보호체 계에서의 국가책임성 강화	출생등록제 실시	미실시	실시
	보호대상아동 통합사례관리 DB 구축	미실시	실시
	시설 대 가정보호의 비율	5.5 대 4.5	3 대 7
	일반가정위탁 비율	7%	15%
	고위험 아동대상 서비스 기능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	30%	50%
	— 아동성폭력 비율 감소	6.5% (958명)	4%
	아동의 발달권 및 생존권 보장: 각급 학교 아동학대예방교육 이행률	—	50%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실시	저소득 및 농어촌지역 우선실시 후 전면확대
3-1-4. 저소득층 및 유사빈곤층 아동 보호망 구축	취업부모자녀의 아동보호서비스: 국공립보육서비스 비율 확대	5.3%	15%
	절대적 빈곤아동 비율	12.2%	9%
	식품미보장 비율 (저녁식사 기준)	65.5%	75%
3-1-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근로청소년의 노동착취, 임금착취 비율	6.5% (최저임금 위반비율)	3%
	근로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15.1% (근로자명 부 미작성)	5%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비율)	
	양육환경 강화를 통한 미혼모 양육비율	30%	50%
	입양아동: 중앙입양원의 아동 및 부모 DB 구축	미실시	실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1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설치	통계 없음	50%
3-1-6. 가정 외 아동 보호 강화	퇴소아동 및 연장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수율	-	100%
	자립체험관 이용률 ¹⁾	약 50% 추정	100%
	친가정복귀율(예: 가정위탁 11.5%)	11.5%	25%
	일반가정위탁 비율	7%	15%
	대리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부모교육비율	-	80%

주 : 1) 2011년 기준 총 534명 참여 (아동자립지원단, 2011, '자립체험관 운영실적 및 만족도 조사')

3-2. 차별 없는 사회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소수아동의 차별 문제

- 아동복지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에게는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성향,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상 권리이기도 함.
- 재한외국인 아동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가정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정착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지자체나 NGO 및 해당교육 기관에서 그 사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김용화, 2011).
- 전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70%가 초등학생이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를 마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다민족, 다인종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도 상반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208,544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음(박미경, 2010).
- 이로 인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이 되지만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임.
- 우리나라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등록된 체류외국인만을 수용하는 동화와 통제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08), 소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도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상대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가정의 경우에는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기본적 권리도 침해받고 있으며(오성배, 2009),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다른 인종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가 차별의 원인이 되면서, 출생부터 차별을 경험하게 됨.

- 이혜원 외(2010)의 이주노동자 아동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로 공교육 현장에서 발음을 놀리거나, 무시당함, 수군거림, 피부색 놀림, 돌아가라고 협박, 발로 걷어차임, 소지품 빼앗김 등의 차별적 경험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주노동자 아동의 약 61%는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약 34%는 비자문제, 약 15%는 학교의 입학거부로 학교입학이 어려웠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기택 외(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 중 큰 이유가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23.8%)’임을 미루어 볼 때 소수아동들이 제도권 교육에서 상당히 차별받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표 2-III-6〉 이주아동의 학내차별경험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1) 나의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린 적이 있다	41.9	56.5
2) 나를 따돌리거나 “너희 나라에 이런 것 없지?”라며 무시한 적이 있다	36.6	61.8
3) 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린 적이 있다	30.6	67.7
4) 내 이름 대신 나라이름으로 부르거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린 적이 있다	25.3	73.1
5)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21.0	77.4
6)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15.1	83.3
7)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내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	9.1	89.2

자료 : 이혜원 외(2011)의 자료 재인용.

〈표 2-III-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2012년 기준)

(단위 : %)

구 분	비 율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	23.8
어려운 가정형편	18.6
어려운 학교공부	9.7
학교생활, 문화가 달라서	5.1
가족 문제(부모의 이혼 등)	5.1
한국어를 잘 몰라서	5.0
나이 어린 아이들과 다니기 싫어서	2.7
질병 또는 사고	0.7
기타	29.4
합계	100.0

자료 : 전기택 외(2013)의 p.567의 자료 재구성.

-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부분이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이들의 언어교육 및 학교 적응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이 많고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이나 진로지도, 자립지원 또는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들에 관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통계도 제시되지 않고 부처별, 기관별로 다른 정책을 제공하여 중복되거나 정책이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이혜원 외, 2010).
-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내용들은 주말체험학습이나 학용품, 행사 참여 등 물적 지원 및 멘토링 등 일반 아동들과 구별하고 차별화 시켜 우리 사회의 소수자임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내재된 편견과 차별적 시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한국아동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부족한 능력을 가진 열등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양계민 외, 2009).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이 54.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학교 현장 내에서는 소수아동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표 2-III-8〉 다문화 이해 교육 받은 횟수

(단위 : %)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 없음
비율	19.9	12.6	6.7	2.1	4.3	54.4

자료 : 양승실 외(201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분석 연구.

□ 연장 소수아동(중고등학생)의 중등 및 고등 교육 실태

- 다양한 차별경험으로 인해 다문화 아동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율은 67.2%에 이르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은 21.3%에 이르고 있어 기초교육에서부터 매우 뒤떨어진 출발선상에 머무르고 있음.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졸업률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표 2-III-9〉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단위 : %)

구 분	2012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67.2
대학교, 대학원 재학	11.5
학교를 다니지 않음 (중퇴, 미취학, 졸업 등)	21.3

자료 : 전기택 외(2013)의 p.564의 자료 재구성

〈표 2-III-10〉 2012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

(단위 : %)

구 분	2012년		
	다문화가족 자녀 전체	외국 성장 자녀	국내 성장 자녀
초등학교	97.9	97.5	98.0
중학교	92.3	76.3	95.1
고등학교	85.1	63.1	91.3
고등교육기관	49.3	28.9	64.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전기택 외(2013)의 p.45의 자료 재구성.

〈표 2-III-11〉 2009년 결혼이민자 자녀의 취학률

(단위 : %)

구 분	2009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11세	86.7	0.5	0
12-14세	33.7	65.9	0.8
15-17세	0	31.5	68

자료 :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 조사 결과, 자녀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다문화가정 부모가 49.1%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음(여성가족부, 2013)
-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중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진학이나 진로지도, 자립지원 또는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거의 없음.

□ 중도입국아동의 한국생활 부적응

-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현황 및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으나 2010년 기준 출입국관리소에 특별귀화²⁷⁾를 신청한 상태인 부모 동반 입국한 청소년은 총 5,726명으로 파악됨(양계민과 조혜영, 2011).
- 우리나라의 법제도 하에서 모든 이주아동의 국적문제는 혈통주의와 귀화절차를 통해서만 수용될 수 있음. 다시 말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중도입국아동이 국적을 취득할 방법이 요원함.
-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부터 보장받지 못하므로, 가정환경이나 건강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임.
- 중도입국 아동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59.6%로 매우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향후 학교를 진

27) 특별귀화의 자격은 현재 외국국적을 지니고 있으면서 부모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와 귀화허가자의 자녀(나이 및 혼인여부 불문)인 경우에 해당된다.

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여성가족부, 2011).

〈표 2-III-12〉 중도입국 아동의 학교급 분포

(단위 : %)

구 분	2012년
초등학교	9.9
중 학 교	10.9
고등학교	12.4
대 학 교	7.2
학 교 밖	59.6
합 계	100.0

자료 : 양계민, 조혜영(2011)의 p.11의 자료 재인용.

〈표 2-III-13〉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

구 분	2012년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22.5
학교를 갈 필요성을 못 느껴서	17.5
돈을 벌기 위해서	15.8
학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	8.3
한국어를 못해서	3.8
기타	7.9
무응답	24.2
합계	100.0

자료 : 양계민, 조혜영(2011)의 p.15의 자료 재인용.

- 중도입국 아동 중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11).

□ 소수아동에 대한 스티그마(stigma) 문제

○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교사,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특수성에 대해 낙인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학교 친구들은 거의 없고 주말이나 여가시간에는 그들과 같은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보임. 또한 어머니의 출신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것이 큰 문제가 됨(조민식, 송시형, 2011)

○ 201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9.5%의 가족이 자녀가 교사로부터 차별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여성가족부, 2013)

□ 불법체류자 및 난민 아동의 기본 교육 및 건강권 문제

○ 미등록 이주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입학 후에도 언어 문제로 인한 학습능력 부진, 교사의 이해부족, 학교에서의 차별, 왕따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보건복지부, 2008)

○ 의료 문제의 경우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등에서 입원비 및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는 그 부모가 미등록체류자로서 신분노출을 극히 꺼려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박미경, 2010)

□ 비동반 북한이탈 청소년의 생존권 및 보호권, 발달권 문제

○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매나 형제 혹은 어머니와 자식, 부모와 자식 등 함께 입국한 경우도 있지만, 자기 혼자 단독으로 남한에 입국한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정진곤, 2011), 비동반 북한이탈 청소년의 누적 수는 약 1천 명에 이르고 있음.

〈표 2-III-14〉 북한이탈 청소년 1인 가구 비율

(단위 : %)

구 분	2012년
탈북청소년	3.4
제3국 출생 청소년	2.5

*'48.1월~'11.12월 입국자기준 누적 아동 수 : 약 3,440명
 자료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의 p.8의 내용 재구성.

- 북한이탈 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잘 먹지 못하여 신장이 작고 체격이 왜소하며, 남한에 오기까지의 고통스럽고 두려운 탈출과정에서 입은 심리적 상처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북한이탈 학생은 학교에서 기초학력 수준이 미흡한 것은 물론이고 남한의 교육제도, 교육내용, 학습풍토에 익숙하지 못하며,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문제도 겪고 있음(한만길, 2009).
- 질병, 경제적 사정 역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며, 학업중도 탈락률은 남한 학생의 8-15배를 기록함(김미숙, 2009).

□ 농어촌 아동 발달 문제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 교육,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서비스가 매우 취약함
- 응급의료서비스조차도 접근성이 쉽게 향상되고 있지 않으며, 119 출동 시간의 경우 농어촌은 도·농 복합시내와 비교했을 때 5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김동진, 2012).
- 2006년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위한 서비스 시행은 공공도서관에서조차도 활발하지 않음(이연옥 외, 2012).
-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와 빈곤아동청소년의 문화 및 교육을 위한 접근환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복지 및 교육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여 방

임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청소년이 많고, 이익집단화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노인복지 정책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투자는 미진함(윤명희, 2013).

- 교육 인프라 구축의 기본은 도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아동도서 보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빈곤청소년 문제

- 빈곤청소년은 빈곤 그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무기력, 낮은 자아존중감 등 심리문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향유 기회의 제한, 진로지도의 미흡, 친사회적 태도 형성 및 사회관계기술 부족, 비행을 유발하기 쉬운 지역 환경 및 열악한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노혁, 2009), 청소년 계층화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저소득층 아동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학업성취 수준이 낮고, 학교 규칙 준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홀로 방치되는 시간이 많아 컴퓨터나 게임기 등을 가지고 노는 시간에 굉장히 취약하였음(이혜연 외, 2012)
-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빈부 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빈곤아동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있으나 현재 이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들은 예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후대책이 대부분이며,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혜연 외, 2012)

나. 정책과제

3-2-1. 소수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다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 ☐ 교사 대상, 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 ☐ 사회적 평등과 소수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정책 수립
- ☐ 우리 사회의 단일혈통주의와 같은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및 교육
- ☐ 아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한국어 교육과 일방적인 문화전달에 중점을 둔 기존 교육정책 개선하여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시간 확충
- ☐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모국어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기회 부여
- ☐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국어 및 모국 문화 교류 기회를 증대하여 이중언어 습득 가능성 개발
- ☐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 보고 지원정책 제공
- ☐ 중도입국아동의 국적 취득 현실화
- ☐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힘들다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적어도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만큼은 미등록이주아동이라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지위 부여
- ☐ 중도입국아동 특성에 맞는 멘토링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강화

- 한국어 교육 등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
-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모국 문화 및 언어 발표 교육
-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중도입국아동과 부모(특히, 재혼가정 등)와의 관계재정립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정 간 자조모임 활성화
-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다문화정책 내지 이주아동정책은 서비스 간의 연계 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지원체계 구축(장진숙, 2011)
- 비동반 북한이탈 청소년의 생존권 및 보호권, 발달권 보장
- 북한이탈청소년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나 문제해결과정, 갈등해결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또 이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 비전 수정
- 정부 부처 간 중복사업을 검토 및 개선하여 효율성 향상
- 부처별 산재되어 있는 북한이탈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부서 및 연계방안 합의
- 현안 위주의 단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학교 중심으로 장기적·종합적인 교육 지원 대책 수립

3-2-2. 농어촌 아동 발달 인프라 구축

- 농어촌 아동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및 문화시설 우선 지원
- 농어촌을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적인 전달체계 수립
- 농어촌 지역 특수성의 이해가 선행된 후 특성에 맞는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망 구축
- 농어촌 지역 병원, 교육기관, 돌봄시설 등 사회서비스 기관 설립 장려(세제 혜택 등)
- 희망나눔지원단을 활용하여 농어촌 아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통합사례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 지원)
- 농어촌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위해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 실행 및 강화
- 아동발달을 위한 아동도서 출판 및 보급 장려
- 농어촌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도서 보급 정책 시행

3-2-3. 청소년 계층화현상 해소

-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
- 빈곤가정 청소년 중 ‘나홀로 아동’이 많은 것을 감안, 이들의 생활을 지도해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시설 확충
-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의 학습지도 기능 보강 필요
- 빈곤청소년의 취약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빈곤청소년에 대한 교사 교육 및 교내 사회복지사 배치 등 학교사회복지 기능 강화
- 빈곤가정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제공
- 빈곤청소년의 교육 격차 해소, 지역사회 이해 및 공감대 확대, 긍정적 사회 인식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프라 및 자원들이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학부모를 포함하여 주민들이 재능 나눔 등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방안 적극 모색
-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아동보육과 방과후활동 정책을 하나의 중앙정부 부처 내에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체계 구축(이혜연 외, 2012)
- 교육, 노동, 경제정책과의 협력적 방안 모색을 통한 정책 수립
- CDA(아동발달계좌)의 아동과 후원자의 1:1 매칭 방식을 아동과 부모로 하여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차적인 확대가 필요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3-2. 차별 없는 사회 구축	3-2-1. 소수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 다문화가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교사 대상, 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				
		사회적 평등과 소수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정책 수립				
		우리 사회의 단일혈통주의와 같은 사회적 편견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 및 교육				
		아동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어 교육과 일방적인 문화전달에 중점을 둔 기존 교육정책 개선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모국어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기회 부여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국어 및 모국 문화 교류 기회를 증대하여 이중언어 습득 가능성 개발(이중언어 교육 실시율)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우리 사회의 미래 인적 자원으로 보고 지원정책 제공				
		중도입국아동의 국적 취득 현실화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 및 의료 접근권 보장률				
		중도입국아동 특성에 맞는 멘토링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부모교육 프로그램 포함)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시간 확충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가정 간 자조모임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의 강화 및 확대				
		비동반 북한이탈 청소년의 생존권 및 보호권, 발달권 보장				
		북한이탈청소년의 주인의식 확립을 위한 정책 비전 수정				
		현안 위주의 단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학교 중심으로 장기적·종합적인 교육 지원 대책 수립				
	3-2-2. 농어촌 아동 발달 인프라 구축	농어촌 아동의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및 문화시설 우선 지원				
		농어촌을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통합적인 전달체계 수립				
		농어촌 지역 특수성의 이해가 선행된 후 특성에 맞는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망 구축				
		농어촌 지역 병원, 교육기관, 돌봄시설 등 사회서비스 기관 설립 장려(세제 혜택 등)				

		희망나눔지원단 활용을 통한 농어촌 아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					
		농어촌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위해 찾아가는 아웃리치 서비스 실행 및 강화					
		아동발달을 위한 아동도서 출판 및 보급 장려					
		농어촌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도서 보급 정책 시행					
	3-2-3. 청소년 계층화현상 해소: CDA(아동발달계좌)의 점진적 확대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체계 구축 (매 3년 마다 추진)					
		빈곤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효과성 검증 근거를 마련					
		빈곤가정 청소년 중 '나홀로 아동'을 지도 및 보호할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 등 이용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빈곤청소년의 취약한 심리정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모관계 개선 pg 포함)					
		빈곤청소년에 대한 교사 교육 및 교내 사회복지사 배치 등 학교사회복지 기능 강화					
		빈곤가정 부모-자녀 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제공					
		교육격차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및 학부모 참여 개선					
		중앙부처 내 아동보육 및 방과후 활동 추진체계 구축					
		교육, 노동, 경제정책과의 협력적 방안 모색을 통한 정책 수립					
		CDA(아동발달계좌)의 확대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3-2-1. 소수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다문화 가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	초중고 각급 학교 교사의 다문화 이해 교육 이수율 ¹⁾	약 42%	70%
	초중고 각급 학교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이수율 ²⁾	약 70%	90%
	다문화 아동의 의무교육 이수율 확대 (혹은 한국어 이중언어교육 운영학교 비율) ³⁾	100개	400개 (100개 * 4년)
	다문화 연장아동의 중고등교육 재학률 확대	67.2%	95%
	다문화 연장아동의 대학교육 진학률 향상	49.3%	55%
	중도입국아동의 학교중퇴율 감소	59.6%	20%
	난민/불법체류 아동의 의무교육 이수기회 제공	통계 없음	50%
	북한이탈청소년의 학업중단을 감소 (남한 학생의 8-15배) ⁴⁾	통계 없음	10%
3-2-2. 농어촌 아동 발달 인프라 구축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설치 운영 비율 ⁵⁾	-	14개×4년 = 56개소 신설
3-2-3. 청소년 계층화현상 해소: CDA (아동발달계 좌)의 점진적 확대	CDA 보유 저소득층 아동 비율 ⁶⁾	88.7%	100%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 ⁷⁾ 수의 확대	초중등 약 8,200명	초중등 약 15,000명

주: 1) 교사임용후 인권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41.1%(평균3.7회)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원이 44.8%, 고등학교 39.7%, 중학교 39.2%로 높게 나타남.

2)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69.1%가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 80.2%, 중학생 77.0%, 고등학생 53.8%가 학교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2014년 다문화교육 중점학교(학교교육과정 등을 통해 문화이해교육, 반편견 반차별 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실시) 120교 운영되고 있음.

3) 교육부 보도자료(2014)에 따르면, 2014년 중도입국 학생 적응촉진을 위한 예비학교 80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운영하는 학교를 100개교로 확대할 예정임. 또한 일반학교에서 일상적인 교과수업 시 바로 활용 가능한 교과연계 다문화교육자료 학교급별 개발 및 보급할 계획임(2014년 초등학교 → 2015년 중·고등학교).

4) 남한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전체 평균 2%임.

5)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 도서관 수는 총 83개. 이 중 시 단위 80개, 군 단위 3개임.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 수는 745개였음. 문화체육관광부(2013)는 2014년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농산어촌에 작은 도서관 14개관 신규조성지원할 계획임.

6) 2013년 기준 저축현황 가입대상 49,481명 중 가입자는 43,397명, 가입률은 88.7%, 만기(18세)후 통장 보유아동 포함된 가입자임(여성가족부, 2013).

2011년 기준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일부 추가 포함(기초수급 청소년 6,317명)되었으며,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1,315명이었음(한국아동청소년데이터아카이브, 2014).

7) 2013년 11월 기준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참가현황을 살펴보면 총 8,200명이며, 이 중 초·중학생이 6,015명, 중학생이 2,185명임. 대상별로 분류해보면, 저소득 가정이 3,4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기초생활

수인 2,271명, 차상위계층 2,010명, 한부모가정 369명, 기타 108명임.

자료 : 1) '초중고 각급 학교 교사의 다문화 이해 교육 이수율' - 정해숙 외(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실태조사.

2) '초중고 각급 학교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이수율' - 정해숙 외(2011). 앞의 책, 교육부 보도자료 2014.3.17. "2014 다문화교육 215억원 지원"

3) '다문화 아동의 의무교육 이수율 확대' - 교육부 보도자료 2014.3.17. "2014 다문화교육 215억원 지원"

4)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설치 운영 비율'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5) '방과후아카데미 이용아동' - 양계민(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3-3. 지역사회보호 강화²⁸⁾

가.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 밖 아동보호

□ 학업중단 및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7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비진학 청소년의 지원 근거 마련 및 정책지원대상이 확대됨²⁹⁾

－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과는 정책지원대상과 일부 차이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2007년 이후 초·중고 재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인구의 약 7.8%에 해당하는 29만 여명으로 추산됨(김기현, 오병돈, 2013: 42).

28) 지역사회보호 강화의 ‘학교 밖 아동보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연구위원의 자문원고인 ‘학교 밖 아동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활용하였음. 더불어 소년사법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부연구위원의 자문원고인 ‘소년사법특성과 사회복귀방안 고찰’을 활용하였음.

29) 그간 학교중퇴, 학교중단, 학업중퇴, 학교중도탈락 등의 용어를 혼용하다 2003년 「청소년기본법」 개정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은 상이한 개념이므로 정책과제는 법률 상 용어인 학교 밖 청소년에 국한하여 기술하였음.

○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0.3%에서 2012년 0.6%로 2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중학생은 0.7%에서 0.9%, 고등학생은 1.3%에서 1.9%로 각각 증가하여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중학생의 2배, 초등학생의 3에 달함(윤철경 외, 2013: 19).

－ 단,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은 해당 연령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백 만명 달할 것으로 추산(김기현 외, 2013: 42)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³⁰⁾

○ 진로 및 학업 고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진로상담(48.3%), 학업중단 이후 7개월 이상 지속한 경험내용 중 긍정고시 공부(24.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진로, 학업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자료에서 진로정보를 찾기 위한 방법은 부모 혹은 지인과 대화(87.5%), 인터넷 검색(69.2%) 등에 의존하였고 공공기관의 상담을 받은 경우는 10명 중 2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22.5%).

- 다만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보호관찰 중인 경우 학업중단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일자리 소개(38.6%)로 일반 청소년의 욕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임.

○ 취약위기 경험 증가

－ 학교 밖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학업중단 이후 7개월 이상 목표없는 일상을 보내고 10명 중 1명은 가출,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소년원 등 보호시설 수용 경험도 전체의 2%에 달함.

- 양친부모 가정 및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형’, 부모가 부재하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비행형’ 비율이 높아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은

30) 윤철경 외(2013)를 요약한 것임.

가정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보호관찰 대상 학교 밖 청소년은 아동학대, 가출팸(가출+family), 보호시설 생활 경험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과 개입이 요구됨.
-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가출청소년의 경우 식생활, 건강관리, 음주 및 흡연 정도 전반에서 건강관리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 청소년기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백혜정, 임희진, 2014).

□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지원 필요

○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초·중등 교육의 기회는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를 모든 아동이 이용,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도 각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15세 미만 아동의 취업은 법으로 제한되나, 초·중등 학령기 학업중단으로 인한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 1인 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강진령 외, 2013: 1 재인용), 청소년의 교육권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 건강한 청소년기, 성인기 이행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차별없는 복지를 보장하여야 함.
- 학교 밖 청소년이 저학력, 비숙련 상태로 성인기로 이행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 및 미래사회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과 대응이 요구됨.

2)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범의 개입

□ 저연령 아동의 범죄비율 증가

- 소년사범에서 연령별 소년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이전에는 18세 이상 아동의 범죄비율이 높았던 반면에, 2000년대 후반부터는 14-15세 아동의 범죄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표 2-III-15〉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년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8	134,992 (100)	3,800 (2.8)	16,638 (12.3)	26,385 (19.5)	26,932 (20.0)	21,784 (16.1)	20,808 (15.4)	18,645 (13.9)
2009	113,022 (1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
2010	89,776 (100)	445 (0.4)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
2011	83,068 (1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
2012	107,490 (1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
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3). 「범죄분석」.

- 특히,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죄질이 변화하여 경찰이 훈방이나 즉심회부로 넘겨버리기에는 죄질이 중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김지선, 2007: 67).
- 문제는 지금까지 소년사범에서 저연령 아동에 대한 개입의지나 노력이 부족했음으로 인해, 사법단계로 들어온 아동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점임.

□ 경찰단계에서의 저연령아동에 대한 개입노력 부족

- 저연령 아동의 경우 검찰까지 넘어오기 전에 경찰단계에서 자체 훈방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됨.

- 현재 경찰은 ‘20만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는 경미사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훈방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저연령 아동의 경우 대부분 저연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선도조치 없이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지는 사례가 많음.
- 경찰은 관서별 실정에 따라 ‘사랑의 교실(외부 전문단체 위탁)’과 경찰관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경찰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되는 훈방·즉결 심판 청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소년법 특성에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음.
- 그러나 경찰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 2012년 107,018건의 소년사건 가운데 사랑의 교실을 실시한 사례는 8,531건으로 10% 미만에 불과함.

〈표 2-III-16〉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소년범죄 인원	123,044	118,058	94,862	86,643	107,018
사랑의 교실 참여인원	7,630	6,837	17,877	9,859	8,531

자료 : 경찰청(2013). 「경찰백서」.

- 대부분 저연령 소년들이 선도조치 없이 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데, 가정의 지속적 보호력이 약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 저연령 아동은 방치되게 되고 또다시 재범에 빠질 우려가 높아짐.
- 초기 단계에 저연령 아동에 대한 선도적 형태의 없게 될 경우 재범율이 높아지고 이 상황에서 개입할 때에는 선도교육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비행성향을 고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름.

□ 검찰단계에서의 저연령아동에 대한 개입의지 부족

-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로 넘어온 저연령 아동의 경우에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음. 전체 소년범죄의 40-50%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실시함.

〈표 2-III-17〉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2010	89,776 (1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93 (0.1)	1,392 (1.6)
2011	83,060 (1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86 (0.1)	1,455 (1.8)
2012	102,871 (1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0.0)	141 (0.1)	- (0.0)

자료 : 경찰청(2013). 「경찰백서」.

- 기소유예 사건 중 검찰단계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고 있음. 2012년도에는 43,013건 중 5,812건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실시되었음.

〈표 2-III-1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	전체 소년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1	89,068	1,363	176	297	353	267	185	85
2012	107,490	5,812	790	1,296	1,388	1,247	701	390

자료 : 대검찰청(2012a). 「검찰연감」,

- 검찰 단계에서도 대부분 사건이 불기소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사건 가운데도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소유예되는 사례가 대부분임. 경찰단계를 거쳐 검찰단계로 넘어온 저연령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선도교육을 하지 않은 채 사회로 돌려보낼 경우 재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비행이 상습화될 수 있음.

□ 법원단계에서 보호자감호위탁에 의존

- 소년법원에서 소년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보호자감호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비율이 높은 편임. 이 중 저연령 아동의 경우 대부분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호관찰과 병행되는 사례가 많음.
- 법원실무에서 저연령 아동에 대하여 소년원 등 시설 내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소년보호기관에서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별도의 관리시스템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고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보호자 감호위탁을 많이 하고 있음.

〈표 2-III-19〉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명, %)

구 분 연 도	계	보 호 처 분																	
		소 계	1호 보호 자 등에 감호 위탁	2호 수강 명령	3호 사회 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소년 보호 시설 위탁	7호 병원 요양 소 위탁	8호 1개 월 이내 소년 원 송치	9호 단기 소년 원 송치	10 호소 년원 송치	1,2 호	1,2, 3 호	1,2, 4호	1,2, 5호	1,2, 3,4 호	1,2, 3,5 호	1,3 호
2008	36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972 (2.5)	-	3535 (8.9)	874 (2.2)	765 (1.9)	1576 (4.0)	227 (0.6)
2009	478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0.2)	1186 (2.5)	1905 (4.0)	1581 (3.3)	1148 (2.4)
2010	49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2011	4713 (100)	35072 (72.0)	4021 (8.3)	18 (0.0)	53 (0.1)	77 (0.2)	28 (0.0)	9 (0.0)	150 (0.3)	15 (0.0)	883 (1.8)	1019 (2.1)	4123 (8.5)	874 (1.8)	4998 (10.3)	1393 (2.9)	2420 (4.9)	1990 (4.1)	1629 (3.3)
2012	5071 (100)	36150 (71.2)	4222 (8.3)	51 (0.1)	104 (0.2)	103 (0.2)	71 (0.1)	14 (0.0)	195 (0.4)	7 (0.0)	1206 (2.8)	1169 (2.3)	4518 (8.9)	1040 (2.0)	5180 (10.2)	1118 (2.2)	2266 (4.5)	1831 (3.6)	1405 (2.8)
구 분 연 도	보 호 처 분																		
	1,3,4 호	1,3,5 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기타	불처분	심 리 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사 송 치	기타*						
2008	1,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0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5 (0.0)						
2009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						
2010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						
2011	2,418 (5.0)	1,352 (2.8)	3,689 (7.6)	808 (1.76)	146 (0.3)	922 (1.9)	1,915 (3.9)	122 (0.2)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						
2012	2,087 (4.1)	1,560 (3.1)	3,054 (6.0)	637 (1.3)	56 (0.1)	1,164 (2.3)	2,607 (5.1)	485 (1.0)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						

주: 1) 2호 및 3호 처분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2) 2008년도 6월 22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유형이 7호처분에서 10호처분으로 변경됨.

자료: 법원행정처(2013), 여성가족부(2013a)의 자료 재인용.

3)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여건

□ 소년보호기관의 절대적 부족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년범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기관이 통합 축소되기에 이룸. 2014년 현재 전국에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이 있음.
- 이 중 단기소년원 송치처분을 하는 8호 처분 소년원은 전국에 1개(대덕)에 불과하고, 전국에 1개에 불과한 여자소년원(청주)의 경우 1개월 이내 송치와 중장기 송치를 함께 병행하고 있음.
-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에서 위탁한 아동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기관으로 전국에 1개에 불과함.
- 지역적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기관에 많은 인원이 수용됨으로 인해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처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드러냄. 소년분류심사의 과부하로 인해 소년원에서 분류심사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음(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외, 2007: 568).

□ 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

- 소년원에 수용되는 아동의 비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2년 소년원 신수용인원은 전년도 2,960명보다 15.8% 증가한 3,429명임.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속 감소하였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390명임.

〈표 2-III-20〉 보호소년의 수용현황

(단위: 명)

연 도	출원사유	신수용인원	1일 평균수용인원
2008		1,732	1,361
2009		2,775	1,191
2010		2,822	1,162
2011		2,960	1,264
2012		3,429	1,390

자료 : 여성가족(2013a)의 p.386의 자료 재인용.

- 소년원 시설수용규모에 비해 많게는 50%까지 수용인원이 초과되고 있고, 11평의 생활실에서 15명까지 수용되는 경우도 있음. 2013년 5월에 부산소년원의 집단난동사건은 과밀수용에 의한 것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함.
- 과밀수용 중에 단기수용아동의 경우 소년원 내에서의 수용경험을 통해 비행을 학습하는 사례도 발생함.
- 8호처분 소년원의 경우 9,10호처분과 병행해서 운영되거나, 7호 위탁처분과 병행하여 운영관리 함으로 인해 처분별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대상아동의 여건에 맞는 처우관리가 어려운 실정임(이승현, 2010).

□ 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수용

- 소년분류심사원은 전국에 1개(서울)가 있고, 1개의 기관에서 1년에 5,000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분류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각 지역의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표 2-III-2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단위: 명)

구 분 \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신 수 용 인 원	5,620	6,065	6,295	6,682	6,582
1일 평균수용인원	341	399	419	456	464

자료 : 여성가족(2013a)의 p.377의 내용 재인용

□ 소년보호기관의 전문성 부족

- 1개 기관에서 수용하는 대상아동이 많다보니 수용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움. 소년원의 경우 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자원을 활용한 교육이 부족함. 외부와의 연계가 어렵다 보니 시설 내에서 교육만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에 미흡한 현실임.
- 일본의 경우 소년원 직원당 소년원생 비율이 1.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5.1명에 이르고 있음.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수용기간 동안 충분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건전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내 인적 요건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체계 부재

-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운데 6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 위탁처분이 가능함.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과 법원 위탁 아동복지시설로 나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이승현, 2010).
- 일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비행아동과 일반요보호아동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비행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 보호아동 가운데 수용기간 이후에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분받은 기간 외에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아동이 시설 퇴소 후 방황하다가 가출, 성매매 유혹 등을 뿌리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음.
- 아동복지시설이 소규모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기간 내에 절한 비행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되지 않음.

4) 소년사범 경험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관리 부족

-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가정관을 운영하고 있음. 가정관은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족합숙제, 1일 생활제, 가정관 면회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무의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음. 자립생활관은 경기(의왕, 안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일부 지역에서 ‘소년원 출원생 돌봄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음. 자체평가에 따르면 소년범 재입원률은 효과는 12% → 5%로 평가됨(이동환, 2014).
- 소년원내 인적·물적 한계로 인해 소년원 전체 대상자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시행되기 어렵고, 단기간 학비지원이나 직업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개선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6개월 이내의 단기 아동복지시설 수용인 경우가 많음. 아동복지시설 수용기간 동안 적절한 진로 교육과 직업교육 등이 병행되지 않아, 수용기간 종료 후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음.

나. 정책과제

3-3-1. 학업중단 예방 및 가족지원 강화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 장기결석 및 유예 청소년 지원강화

-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에 대한 개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들의 조기 발견 및 지역 내 자원을 통한 연계 개입 강화
- 부모의 교육적 방임 상황이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신고 강화, 이를 위해 일선 초·중학교 대상 교사 연수 확대
- 저소득 빈곤계층 가정인 경우 가구 단위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학업지속 지원 체계 구축

□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운영

○ 자퇴 전 숙려단계 이전에 개별 맞춤 지원 강화

- 2014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은 약 4만명으로 추정, 숙려기간 이후 학업 복귀율은 10명 중 3명 이하에 불과
- 교육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조치로 학교부적응, 장기결석 시 상담실(교내), Wee센터(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아동상담소(지역) 연계 강화 및 조기개입 의무화

○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경보제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은 고등학교 자퇴자에 국한되는 만큼 퇴학 숙려제 이용률이 낮음. 또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의 경우 숙려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포괄적인 ‘학업중단 조기경보제’ 운영 필요
- 특성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지역 등 학업중단 학생 발생 비율에 따라 위기 청소년 집중 지원 강화

- 교내 대안교실, 지역사회 내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운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강화

- 가족의 유대 및 지도감독 등 기능 회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초·중등 학령기 아동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 강화

3-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2015년 전국 200여 개 센터 및 중앙지원기관 설치 예정)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등 기존 아동 및 취약계층 가족지원 인프라와의 연계 기반 마련
- 자퇴원 제출 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허브로 개인정보 동의 명단 자동 이관 체계 구축을 통한 조기 발굴 및 개입 기반 마련(학교 밖 청소년 DB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

○ 학업 및 진로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우선지원 및 지원 확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15조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등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2008~2013년 시범운영(87개 자치구)을 거쳐 2014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를 반영한 사업 확대 필요(여성가족부, 2014)

- 개인별 진로 희망 여부에 따라 초·중학교로의 재취학,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자립지원(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및 자립지원을 위한 해밀, 두드림 사업 연계(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개소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고용안정센터) 연계를 통한 취업 및 자립지원 강화
 - 지역 내 대안학교, 징검다리 등 대안교육 연계

○ 생활 및 건강지원

- 비수급빈곤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
 -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비수급빈곤층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을 강화하여 최소한의 복지 수준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 시설외소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강화
 - 보건소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제공
 - 청소년쉼터 등 가정 밖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건강지원 확대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보건소) 관련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 활동 및 기타 지원

- 청소년활동, 참여 등 청소년의 권리 보장 강화
 - 휴(休)카페 등 쉼과 활동 공간 제공
-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각종 우대 지원

- 폭력이나 학대,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른 무료 법률지원 제공(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이를 근거로 정책수립(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책대상으로서의 학교 밖 청소년 DB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반영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행 여부 모니터링과 점검체계 마련
 - 교육부(학업중단숙려제 및 학업중단예방정책),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 간 업무협약을 통한 공조 기반 마련

3-3-3.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범의 개입 강화

□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범에서의 개입 노력 강화

-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범적 대응체계 구축
 - 단순 가정복귀보다는 선도교육을 조건으로 한 복귀 유도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속적 관리 노력
 -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사회내 보호력 강화
 - 가정, 사법기관, 지역사회내 연계시스템 구축
- 저연령아동 관리를 위한 소년사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
 - 저연령 아동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경찰, 검사, 법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
 - 저연령아동사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 보수교육 실시

□ 경찰 훈방시 조건부 선도교육 확대

-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 확대
- 경찰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훈방프로그램 운영체계 구축
 - 경찰 내부의 훈방프로그램 운영모델 마련
 - 경찰관서 내 지역사회 자원의 수요 파악 및 상시 연계시스템 구축
- 훈방시 부모에 대한 일정시간 교육 이수 의무화

□ 저연령아동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강화

- 저연령아동에 대한 단순기소비율 축소
- 저연령 아동을 위한 선도교육프로그램 개발

□ 법원단계에서의 보호자감호위탁 기준 강화

- 저연령 아동에 대한 보호자감호위탁시 보호자의 보호력 검증절차 마련
-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부가를 위한 여건 확립
- ‘대안가정’ 등 가정의 보호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3-3-4.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여건 마련

□ 소년원 시설의 소규모화

- 소년원 1개 생활실 내 수용인원 최소화
- 지역수용여건 상황에 맞는 소년원시설 설치

□ 관련기관의 전문성 확보

- 8호처분 소년원의 독립 운영
-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회복귀 교육 병행

- 수용아동 유형별, 연령별 전문교육 프로그램 마련
- 소년보호기관 담당자의 전문화
 - 소년보호기관 담당인력 확대
 - 소년보호기관 담당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 비행아동 전문 아동복지시설 마련
 - 보호필요시 아동복지시설의 장 요청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아동복지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마련

3-3-5. 소년사범 경험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소년원 출원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속적 진로교육체계 마련
 -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지역사회 정보공유로 지역사회내 관리체계 구축
 - 소년원 출원생에 대1한 지역내 기업의 취업알선 프로그램 실시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지역사회내 가정관리 서비스 제공
 - 열악한 환경에 있는 출원생에 대한 주거지원
 - 지역사회센터와 연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후 연계서비스 제공
 - 아동복지시설 퇴소전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실시

○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퇴소아동관리체계 구축

-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지속적 서비스 개입 실시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3-3. 지역사회 보호강화	3-3-1. 학업중단 예방 및 가족지원 강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학업중단숙려제 개선 운영				
	3-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학업 및 진로지원, 생활 및 건강지원, 활동 및 기타 지원)				
	3-3-3.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법의 개입 강화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법에서의 개입 노력 강화				
		경찰훈방시 조건부 선도 교육 확대				
		저연령 아동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강화				
		법원단계에서의 보호자 감호위탁 기준 강화				
	3-3-4.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여건 마련	소년원 시설의 소규모화				
		8호처분 전문기관 확대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 기능 분리 (소년분류심사기관 확대)				
		소년보호기관 담당자의 전문화				
	3-3-5. 소년사법 경험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사후 연계서비스 제공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3-3-1. 학업중단 예방 및 가족지원 강화	의무교육대상 장기결석(3개월 이상) 사례관리 도입	학교장 재량	의무 추진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경보제 운영	해당 없음	신설
	드림스타트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가족 통합지원 확대	통계 없음	통계 구축
3-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해당 없음	자치구 설치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수혜율 개선	약 26%	50%
	학교 밖 청소년 DB 구축 및 관리	논의중	신설
3-3-3. 저연령 아동에 대한 소년사법의 개입 강화	사랑의 교실 등 운영 확대 ¹⁾	7%	50% 이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확대 ²⁾	5%	80% 이상
	보호자감호위탁을 비롯한 보호처분기준 마련	논의 없음	신설
3-3-4.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보호여건 마련	소년원 1실당 수용인원 4인 이하 변경	논의중	80%
	소년원에서 소년분류심사기능 분리,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확대 ³⁾	1개소	17개소 (시도별)
	8호처분 전문 소년원 설치 확대	2개소 (대덕, 청주)	17개소 (시도별)
	비행전문 아동복지시설 설치	없음	시도 단위
	아동복지시설 운영프로그램 평가인증제 실시	없음	추진
3-3-5. 소년사법 경험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알선 프로그램 마련 ⁴⁾	9%	50%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⁵⁾	7개	17개
	아동복지시설의 사후연계 프로그램 개발	없음	추진

주: 1) 2013년 전체소년범 90,694명 중 사랑의 교실은 6,5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됨(경찰청, 2014).

2) 전체소년범 107,490명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는 5,812명임.

3) 소년분류심사 대상자는 2008년 5,198명→2013년 6357명으로 증가, 소년분류심사전문기관은 서울 1 곳에 불과함(법무부 소년과 내부자료).

4) 2013년 소년원 수용생 중 2,867명 중 취업자는 273명에 불과

5) 무의탁자립생활관은 경기(의왕, 안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법무부 소년과 내부자료)



IV. 인프라

- 4-1. 조직개편
- 4-2. 예산확충
- 4-3. 전문인력 확보
- 4-4. 평가체계 도입
- 4-5. 주제별 역할 정립

4-1. 조직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정책의 보편주의적 확대와 청소년정책의 복지영역 확충에 따라 부처간 중복과 누락으로 아동·청소년정책의 체계화와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우리나라의 부처이기주의와 부처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은 상당히 중첩되는 대상임에도 마치 다른 대상인 것처럼 정책이 혼란스럽게 추진되어 왔음
- 사회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해짐.
 - 2012년을 기준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15부 2처 18청) 중 2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7개 청소년관련 사업 추진 중(여성가족부, 2012)
 - 아동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정책은 수련활동지원이나 유해매체 및 문화로부터의 보호정도를 중심으로 존재
- 아동정책 업무들이 상이한 법제에 의해 서로 다른 유관부처로 분산되어 아동정책 총괄 강화의 필요성 증대
 - 서비스 중복, 책임전가 및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발생할 가능성 증가, 긴급을 요하는 아동관련 사안에 대한 정부의 능장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 증가(정익중, 2008, 2009)
 - 아동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국이나 실무조직의 부재로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조정할만한 기구가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는 실정
- 특히 방과후돌봄서비스 부문에서 각 부처 사업 간에 중복성이 존재하여 체계화 필요(정익중, 2013)
 -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교육부의 방과후돌봄교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사업대상, 프로그램 내용과 제공시간에 있어서 중복
 -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전달체계로서 방과후돌봄 정책의 각 사업들 간의 연계조정 기능이 취약하여 방과후에 방치되는 아동이 많음.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하거나 서비스 연속성이 미흡한 실정. 시설별, 지역별 서비스 편차 발생(정익중, 2008)
- 아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활성화 필요
 - 아동은 발달적 특성상 의존성을 지니고 있기에 성인이나 환경,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아동은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지만 아동의 의견이 대부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아동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필요

나. 정책과제

4-1-1. 아동정책 총괄 조정 강화

- 아동복지 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조정 및 통합 필요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위원장: 여가부 장관) 등 통합한 명실상부한 정책조정위원회와 사무국을 구성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부서 설치 필요: 아동청소년가족부 또는 아동청소년청 설치
- 다양한 차원에서의 종합조정체계 구축
 - 아동복지와 일반사회복지 혹은 가족복지 서비스 사이의 조정체계 구축 필요
 - 아동복지 대상과 관련하여 발달단계, 욕구, 위기도 등에 따라 구분되어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사이 조정 필요
 - 시군구 아동복지전달체계에서 종합조정체계의 실무자와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부모 및 가족체계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필요
- 아동청소년정책 R&D를 위한 연구원과 인력공단 설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공단이나 진흥원 설치
 - 청소년정책연구원을 확대개편하거나 육아정책연구소를 아동정책연구원으로 개편
- 아동정책 총괄 시스템 지원
 - 각 서비스체계를 인정하되 기본규정을 정립하여 지역종합계획을 공동수립, DB 구축, 공통평가 시행

4-1-2. 아동복지 정책 전달체계 정비

- 지역중심의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및 관리 체계 필요
 - 중앙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 지역사회까지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수준의 전달체계 정비 필요(여성가족부, 2012)

- 시·도 및 시·군·구 아동·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여부의 점검을 강화
-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를 통해 중앙부처의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중복문제와 비효율성 문제 해결 필요
- 아동복지 종합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법체계 개편방안
 - 광역시도 및 시군구 수준까지 이르는 아동복지종합조정 및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아동복지법 내에 마련 필요
 - 청소년기본법의 취지를 보전하면서 아동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법을 통합하는 방식 고려 필요
-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위한 아동복지 종합상담체계 필요
 - 상담 및 심리평가과정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 필요
 -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의 통합 필요
- 우수 실천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수여

4-1-3.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 아동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 통합의 방향은 중앙-지방-지역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중심축을 통합하여 규모화하고 지역의 실제 서비스 기관은 다양화하여 지역중심의 서비스 비중을 확대(정익중, 2009)
- 드림스타트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양하고, 드림스타트센터는 시군구 내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이나 기관간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초지자체 전담자와 각 분야의 민간 수행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방식에 따라 드림스타트센터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서비스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증가

4-1-4. 아동보호나 가정외 보호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

- 아동보호 기능의 공공화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공공화하거나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합치는 방안 검토 필요
- 헤이그협약에 맞게 아동입양절차 개편하고 입양기관의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아동보호에서 가정외 보호로 이어지는 과정을 공공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필요(일시보호, 배치,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체계 마련 필요)
- 시군구 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가정외 보호서비스 배치 후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6개월에 1회 정도 모니터링하여 현 보호체계가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 필요. 또한 원가정 복귀시 가정환경이 안전한지 필수적 확인 필요(정익중, 2013)

4-1-5. 방과후돌봄서비스 체계의 확립

-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및 특성화·전문화된 지역아동센터 체제를 구축
-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간의 유기적 통합, 연계 필요
-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방과후돌봄종합센터의 설치를 통한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조정

4-1-6. 아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 마련 및 검토

□ 현재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희망센터를 통합하여 16개 시도에 설치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권리 전문가를 확보하고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치 운영하는 방안 필요

□ NGO나 NPO 단체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아동·청소년권리 네트워크에 참여 지원이 필요

□ 청소년 정책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기회 마련(여성가족부, 2012)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아동을 둘러싼 생활환경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 체계화. 또한 복지, 교육, 문화, 노동, 환경, 경제·재정, 정치 등 광범위한 영역의 관련법과 시행령,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 시행

□ 아동권리지표에서 제시된 영역들에 대해 생산된 통계자료 분석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활성화 필요

□ 아동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위험상황에 있거나 잠재적 위험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사례분석을 통해 아동권리 침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4-1. 조직개편	4-1-1. 아동정책 총괄 조정 강화	아동·청소년 통합 정책조정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아동·청소년 통합 부서 설치)				
		아동·청소년정책 R&D를 위한 연구원 및 인력공단 설치				
		아동정책 총괄시스템 지원				
	4-1-2. 정책 전달체계 정비	지역사회 수준의 아동 정책 전달체계 정비				
		지자체별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점검				
		우수 실천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수여				
	4-1-3.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중앙-지방-지역 서비스 중심축 통합 및 규모화, 지역중심의 서비스 비중 확대				
		드림스타트센터의 시군구 내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또는 기관간 네트워킹을 위한 허브 기능 확보 방안 마련				
	4-1-4. 아동보호나 가정의 보호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화 또는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통합 방안 마련				
		헤이그협약에 맞는 아동임양절차 개편 및 입양기관 공공성 강화위한 방안 마련				
		아동보호에서 가정외보호로 이어지는 과정 공공화 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시군구 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성화				
	4-1-5. 방과후돌봄서비스 체계의 확립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및 특성화·전문화된 지역아동센터 체제 구축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간의 유기적 통합, 연계 구축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과후돌봄종합센터의 설치 통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조정				
	4-1-6. 아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 마련 및 검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여성가족부 청소년희망센터 통합 및 16개 시도 설치				
		NGO, NPO단체의 아동·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아동·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참여 지원				
		아동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아동권리지표 제시 영역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및 모니터링 활성화				
		심층사례분석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정도 평가 및 필요한 서비스 제공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4-1-1. 아동정책 총괄 조정 강화	아동청소년 통합 부서 설치 여부	없음	준비작업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연구원 설치건수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아동정책총괄 연구원설립
	아동청소년 총괄시스템 지원 확대 비율	20%	100%
4-1-2. 정책 전달체계 정비	지역사회 수준의 아동정책 전달체계 정비 여부	10% 일부 진행중	100%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수립 여부(지자체별)	일부 진행중 청소년기본법에 따 라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아동정책도 포함
	우수실천지자체 중 포상 수혜율	0%	20%
4-1-3.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서비스 중심측 통합 여부	미흡	100%
	지역중심의 서비스 확대율	미흡	50% 확대
	드림스타트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 비율	20%	100%
	기관 간 네트워킹을 위한 허브기능 확보 방안 마련 여부	미흡	100%
4-1-4. 아동보호나 가정의 보호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화 및 각 센터 통합 방안 마련 여부 (드림스타트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중	통합
	아동입양절차 개편과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여부	개편방안 논의중	헤이그협약에 따라 진행
	가정외보호 과정 전달체계 개편 여부	개편 논의중	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진행
	시군구 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성화 비율	5%	100%
4-1-5. 방과후돌봄 서비스 체계의 확립	국공립지역아동센터의 확충 비율	1%	30%
	특성화·전문화된 지역아동센터 체제 구축 비율	0%	20%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돌봄교실 간 통합, 연계 구축 비율	10%	100%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비율	50%	100%
	방과후돌봄종합센터 설치 여부	0%	100%
4-1-6. 아동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 마련 및 검토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 통합 및 16개 설치 여부	각각 존재하고 있음	통합
	NGO, NPO단체의 아동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구축 비율	30%	100%
	국제 아동청소년 권리 네트워크 참여 지원건수	근거 통계자료 없음	
	아동의 정책결정 참여 및 모니터링 기회 제공건수	0건	300건
	아동권리 침해정도 평가 여부 및 서비스 제공 비율	0%	30%

4-2. 예산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정책에 대한 예산 비율은 매우 낮아 사회적 지원과 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
 - 아동복지관련 예산: 우리나라 아동인구가 전체인구의 20%에 달하지만 아동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0.8%, 보건복지부 예산의 1.2%에 불과함 (김미숙 외, 2012)
 - 가족에 대한 OECD 지출통계 : OECD 평균 2.4%, 한국은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
 -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 : 선진국의 1/7~1/100 수준
- 아동청소년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예산의 확충이 필요(여성가족부, 2012)
 -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를 도입
 -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하고 청소년육성기금 민자 유치 등 재원 확충이 필요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관리운영비 및 기능보강비가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여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지원이 필요
 -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급속한 양적인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시설 당 지원수준이 대략 월 420만원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역 내 빈곤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의 한계가 존재함
 - 아동복지전담기관 역시 기능보강비가 책정되어있지 않아 시설노후 및 장비노후에 대한 보강이 지정위탁 법인체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세제 개편 요구 확대

-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GDP 25.1%로 OECD 평균 33.8%에 비해 무려 8.7% 포인트 정도 국민부담률이 낮음. 그만큼 국가재정 규모가 작고, 복지지출에 투입할 재정 여력도 부족함(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3).
- 표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세목은 소득세와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임. OECD평균보다 소득세에서 GDP 4.8%,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에서 2.8% 적음.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시급한 과제는 일반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더 내야하고, 기업들이 사회보장기여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책임져야 함(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13).
-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개혁,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OECD평균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복지분야 예산으로 인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제안 확대
- 사회복지세는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세로, 아동수당신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 그동안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행하지 못했던 복지사업 시행을 위해 도입이 절실한 시점

〈표 2-IV-1〉 세목별 세입 비교

(단위: GDP %, 2010년)

구분	소득세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국민 부담률
						고용주	피고용자	기타*	계	
OECD(a)	8.4	2.9	1.8	11.0	0.5	5.3	3.2	0.6	9.1	33.8
한국(b)	3.6	3.5	2.9	8.5	0.8	2.5	2.4	0.8	5.7	25.1
차이(a-b)	-4.8	0.6	1.1	-2.5	-0.3	-2.8	-0.8	0.2	3.4	8.7

출처: OECD(2012). Revenue Statistics 1965-2011. 기타*에는 자영자, 국가 몫 등이 포함.

나. 정책과제

4-2-1. 아동예산의 개편 및 확대

- 우리나라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0.8% 수준이고 OECD 평균에 따른다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이 약 2.9배 증가하여 원화 환산하면 약 27조원에 이르러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예산이 보육예산(9조)을 제외하고 18조원 정도가 소요됨.
- 지방이양사업 재검토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 필요
- 일반회계 예산의 연차적 증액, 아동육성기금의 민자 유치 및 신규재원 발굴 등 아동 재원 확충 필요
- 지자체 아동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아동청소년예산의 일정비율 확보를 지자체 평가기준으로 선정.
- 시설, 단체의 자체기금 마련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정책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청소년기금 현황 파악 및 재원조달과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

4-2-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금 현실화

- 관리운영비 및 표준건축비의 상향 조정이 필요(시설별 차등지원 철폐 및 표준관리운영비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전담기관 기능보강비지원

4-2-4. 세제 개편을 통해 아동정책 활성화 도모

- 세제개편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 신설
- 재정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수목적세를 신설하거나 아동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4-2. 예산확충	4-2-1. 아동 예산의 개편 및 확대	아동 예산의 대폭 확대				
		지방이양사업 재검토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으로의 전환				
		아동재원 확충				
		지자체 평가기준으로 아동청소년예산 일정 비율 확보 추진				
		지방청소년기금 현황 파악 및 재원조달, 확충방안 마련				
	4-2-2.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금 현실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전담기관의 관리운영비 및 표준건축비 상향 조정(시설별 차등지원 철폐 및 표준관리운영비 지원)				
		아동복지전담기관 기능보강비 지원				
	4-2-3. 세제 개편을 통해 아동정책 활성화 도모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 신설				
		특수목적세 신설, 아동기금 마련 등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4-2-1. 아동 예산의 개편 및 확대	아동예산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20%	75%
	아동예산 확대 비율	보건복지부 예산의 1.2%	5%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여부	논의중	전환
	아동재원 확충 비율	논의중	3배 확충
	지자체 평가기준으로 아동청소년예산 일정 비율 확보 추진	논의중	추진
	지방청소년기금 채원조달, 확충 비율	15%	30%
4-2-2. 아동복지시설 및 전담기관 관리운영비 지원체계 개선 및 지원금 현실화	아동복지시설 및 전담기관의 운영비와 표준건축비 상향 조정 비율	75%	100%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기능보강비 수혜율	10%	30%
4-2-3. 세제 개편을 통해 아동정책 활성화 도모	사회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복지확충 특별회계 신설 여부	논의중	신설
	특수목적세 신설 여부	논의중	신설
	아동기금 마련 여부	논의중	신설

4-3. 전문인력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복지인력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조건으로 장기간의 근무 유지와 전문인력을 유인하기 어려운 실정(정익중, 2006)
 - 적절한 수의 전문인력의 배치와 임금 향상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정익중, 2011)
- 열악한 아동전문인력의 근무조건은 소진을 유발하기 쉽고 이직이 많아 업무의 연속성 감소로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
 - 전문인력의 소진은 부모의 우울 등 정신건강문제처럼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움(정익중·이경림·이정은, 2010; 정익중·이정은·이상균, 2011).
 - 실무자의 잦은 인력교체는 아동청소년의 정서불안이나 신뢰감 상실 등 심리적 외상을 일으킬 수 있음(정익중·이정은·이상균, 2011)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급여기준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임금체계 개편 요구(정익중, 2006)
 - 아동복지전담기관은 급여기준표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정하는 인건비에 의존하는 실정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급여 및 인건비에 대한 위탁법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아동복지인력의 경우 급여기준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담기관 등 각 시설 유형에 따라 별도의 급여기준 존재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제외되어 아동복지전담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자체 시설종사자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아동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금기준의 문제로 인건비의 현실화, 직무의 적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정익중, 2013; 맹영임 외, 2007)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승급에 대한 호봉체계가 없고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으로 전문적인 역할에 맞는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
 - 인건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센터별 편차가 큰 형편
 - 인건비의 현실화와 직무의 적정화 방안이 전문화 과정에서 병행되어야 하며, 인력 양성 시 적절한 수입과 활동에 상응하는 대우 미리 계획 필요
 -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표준 임금기준표를 만들어 자격별, 경력별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지자체 조례 및 시설단체 내규로 활용하도록 유도 필요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인력 확충 필요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인당 담당 아동수는 23명, 가정위탁지원센터 1인당 아동 수는 189명으로 나타남(정익중, 2006)
 - 종사자 1인당 고위기 아동 83명, 위기아동 340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아동 수에 비해 전문인력의 숫자가 매우 부족(정익중, 2006)
 - 아동상황을 적절하게 사정하거나 감독할만한 충분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아동의 사망, 사고, 실종 등 치명적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음(정익중, 2013).
 - 적정사례 수 기준 연구를 통해 적정인력 배치 필요
- 아동복지전문인력은 일반아동보다 어려운 아동을 다루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 요구(정익중, 2013)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 취득한 인력에게는 현장의 임상경험이 필요
 - 현재 100시간의 의무교육으로는 부족하여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 슈퍼바이저의 지도하에 1년 이상 장기 수련하도록 유도 필요
 - 단순한 필기시험보다 수련과정에서의 사례기록검토나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인력 대부분 비정규 계약직으로 충분한 전문성 발휘를 못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력운영체계가 필요

○ 현재 학교 내에서 방과후 학교, 혁신학교, 위스쿨, 위센터, 위클래스 등 학교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처 노력

○ 전국 4,300여 개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음.

○ 아직도 학교 내에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안정된 정규인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와의 학교 연계, 학생 및 가정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해결,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문제의 사전 예방 등을 행하도록 하는 체제로는 정착되고 있지 못함.

○ 사회복지전문인력이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운영체계가 필요

□ 아동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전문사회복지사 필요 요구

○ 현재 아동과 청소년관련 법규상 나타나 있는 전문인력으로는 전담공무원으로는 아동복지지도원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그리고 민간전문자격자로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있지만 아동분야는 전무한 실정(정익중, 2013;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09)

○ 현재 학부에서 아동복지론이나 청소년복지론 등 한 두 과목만 수강하고 아동복지 실천현장에 투입되어 아동관련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아동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필요(정익중, 2006)

나. 정책과제

4-3-1. 아동보호나 가정의 보호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력 확보

- 아동보호 기능의 공공화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확보 필요
(아동 1만명 당 공무원 1인이면 1,000명, 아동 5천명 당 공무원 1인이면 2,000명 필요)
- 2014년까지 7,000명 확대 예정된 복지공무원 중 일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확보 필요
-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특히 가정의 보호 아동의 배치,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향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화를 통해 아동보호기능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4-3-2. 전문인력의 임금체계 개편과 전문성 고려

- 사회복지이용시설 기준과 동일한 임금체계 도입
-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통해 전문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 확보(정익중, 2006)
-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담기관 등의 호봉제 도입
-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표준 임금기준표를 만들어 자격별, 경력별 최저 임금 가이드 라인 제시 필요(맹영임 외, 2007)

4-3-3.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여성가족부, 2012)

-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3교대제 도입(2교대제→3교대제)
- 아동복지전문인력 추가 배치
- 자격검정 개선 추진
-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 개선

4-3-4. 전문인력의 확보(정익중, 2013)

- 현금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장을 강화하기보다 서비스 제공자의 수준 향상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문인력 확보 중요함
- 아동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정 사례 수 기준 수립
- 위기아동 보호인력의 전문성 확보
 - 아동복지전문인력에게 단순한 필기시험보다는 수련과정에서 사례기록검토나 면접 등을 통해 선발
- 자격증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 시설, 쉼터 등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온 임상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격증과정과 수련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4-3-5.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 인력 활용 제도화

- 교육복지기본법제정, 교육복지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역할 인정
-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1학교 1사회복지사)
-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인력에 정규직 지위 부여

4-3-6. 아동전문가 제도 신설과 전문성 강화

- 학부에서 아동복지서비스, 아동발달, 아동상담, 발달심리, 이상심리, 아동과 가족, 아동과 지역사회,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의 과목을 전공심화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하여 아동전문사회복지사 제도 신설(정익중, 2006)
- 최근 신설된 기관들은 아동전문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해야 함
- 자격검정시험으로 기존 청소년상담사와 동일하게 필기시험과 면접이지만 수련기관의 범주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기준인 청소년단체, 지방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부기관, 법인단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에서 아동상담사에서 제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기관, 각 지역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조정하고, 검정과목을 확대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임(주은희, 2012)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4-3. 전문인력 확보	4-3-1. 아동보호나 가정의 보호기능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력 확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확보				
		2014년까지 확대 예정된 복지공무원 중 일부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확보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기능 명확화				
	4-3-2. 전문인력의 임금체계 개편과 전문성 고려	사회복지이용시설 기준과 동일한 임금체계 도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전담기관 등의 호봉제 도입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표준 임금기준표 마련				
	4-3-3.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여성가족부, 2012)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3교대제 도입				
		아동복지전문인력 추가 배치				
		자격검정 개선 추진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 개선				
	4-3-4. 전문인력의 확보	아동복지서비스 분야 적정 사례 수 기준 수립				
		위기아동보호인력의 전문성 확보				
		자격증이 없지만 오랫동안 해당 분야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기간 동안 자격증 과정, 수련과정 동시 진행하도록 유도하여 전문성 지속적으로 높이기				
	4-3-5.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인력 활용 제도화	교육복지기본법제정, 교육복지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역할 인정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1학교 1사회복지사)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인력에 정규직 지위 부여				
	4-3-6. 아동전문가 제도 신설과 전문성 강화	아동전문사회복지사 제도 신설				
		아동전문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자격기준 마련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반영				
		수련기관 범주 및 검정과목 확대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4-3-1. 아동보호나 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력 확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확보 비율	0%	50%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비율 향상	0%	100%
4-3-2. 전문인력의 임금체계 개편과 전문성 고려	사회복지이용시설 기준과 동일한 임금체계 도입 여부	논의중	도입
	아동보호 기관의 호봉제 도입 여부	논의중	도입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에 대한 국가표준 임금기준 표 마련 여부	논의중	도입
4-3-3. 아동복지 전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여성가족 부, 2012)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종사자 3교대제 도입 여부	논의중	도입
	아동복지전문인력 추가 배치율	아동학대 관련 임상심리치료전 문인력 2명까지 추가	아동수에 따른 필수적 추가배치
	자격검정 개선 추진 여부	논의중	추진
4-3-4. 전문인력의 확보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직무표준화 비율	논의중	추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기준 마련 여부	논의중	추진
	아동복지서비스 분야 적정 사례 수 기준 수립 비율	논의중	추진
	위기아동보호인력의 전문성 확보 비율	30%	100%
4-3-5.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의 전문 인력 활용 제도화	해당 분야의 장기간 임상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자격증 및 수련과정 동시 진행 횟수	논의중	추진
	교육복지기본법제정 여부	제정	학교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포함
	교육복지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역할 인지율	20%	100%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1학교 1사회복지사) 여부	20%	100%
4-3-6. 아동전문가 제도 신설과 전문성 강화	학교 내 다양한 전문 인력에 정규직 지위 부여 비율	논의중	추진
	아동전문사회복지사 제도 신설 여부	논의중	추진
	아동전문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자격 기준 마련 및 법률 반영 여부	논의중	추진

4-4. 평가체계 도입

가. 현황

□ 아동영향평가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에게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해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관점과 필요,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관계부처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경향이 있음(윤철경·김윤나, 2013)
- 청소년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청소년의 실제적 삶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미 청소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동평가분석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실정(윤철경·김윤나, 2013)

나. 정책과제

4-4-1.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여성가족부, 2012)

□ 정책성과 평가 수행체계·방법·절차 등 법적 근거 마련

□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 구축

□ 아동 활동·문화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통계 신규 생산,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정기·비정기)와 비승인 국가통계를 아우르는 DB구축

4-4-2. 증거기반(evidence-based)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성과평가 체계 등 과학적 정책기반 마련(여성가족부, 2012)

-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해 체감도 높은 정책 설계 지원(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합 및 주기 축소)
- 국내외 정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적시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아동청소년의 역량계발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책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국민적 관심 환기
-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기초통계를 일체 정비해 체계적으로 집적하여 지속 관리

4-4-3. 정책별 아동영향 평가제 도입(여성가족부, 2012)

- 아동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관련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정책을 실행하도록 요구 필요(윤철경·김윤나, 2013)
- 정책의 실효성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와의 중복을 피해 상호보완적 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아동정책의 목표로 강조되는 것들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해야함, 평가대상에 따라 질적, 양적 평가지표가 모두 활용하여 아동관련 법령, 계획,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사전, 사후평가 방식 도입
- 아동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위해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가 필요. 이를

통해 대상과제 선정, 평가지표 수정, 아동영향평가제 관련 운영지침과 관리 매뉴얼 개발

□ 아동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하여 전국적인 평가사업 대상을 신청·접수·선정할 필요가 있음

다.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과제	정책과제	'15	'16	'17	'18	'19
4-4. 평가체계 도입	4-4-1.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정책성과 평가 수행체계·방법·절차 등 법적 근거 마련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 구축				
		아동 활동·문화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통계 신규 생산,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정기·비정기)와 비승인 국가통계를 아우르는 DB구축				
	4-4-2. 증거기반(evidence-based)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해 성과평가 체계 등 과학적 정책기반 마련	아동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해 체감도 높은 정책설계 지원(아동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통합 및 주기 축소)				
		국내외 정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적시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책의 관심이 필요한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국민적 관심 환기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기초통계를 일제 정비해 체계적으로 집적하여 지속 관리				
	4-4-3. 정책별 아동영향평가제 도입	아동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아동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				

라. 목표

정책과제	지표	현재	2019
4-4-1. 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별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정책성과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	논의중	추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류체계 구축 여부	논의중	추진
	아동·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정기·비정기)와 비승인 국가통계를 아우르는 DB구축 여부	논의중	추진
4-4-2. 증거기반 아동청소년정책 수립 위한 성과평가 체계 등 과학적 정책기반 마련	정책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체감율	낮음	높음
	국내외 정책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비율	0%	100%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	20%	80%
4-4-3. 정책별 아동영향 평가제 도입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기초통계 정비 여부 및 지속 관리 비율	0%	100%
	아동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여부	논의중	추진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여부	논의중	추진

※ 관련 법과 개선사항

구분	주요내용	개선사항
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제29조)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제5장 제1절 아동복지전담기관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통합 운영 -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5년→ 3년, 청소년조사와의 통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 내실화 -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아동청소년수 대비 확보 강제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구체화 - 아동청소년예산 확보 지자체 평가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 감독 (제25조)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	-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운영 - 청소년시설의 지도 관리 평가제 운영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육성 및 확보 강제화 - 청소년단체 지원체계 개편 및 확대 - 청소년들의 인식 조사 체계 개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제11조) 위기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체계 개편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평가 과정 구체화 - 위기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운영 및 강제화 -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체계 내실화 및 확대

참고문헌 <

<

- 강진령, 노기호, 김범구, 윤소민 (2013). 학교 밖 청소년 욕구조사를 통한 정책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강현아, 노충래, 전종설, 정익중(2012). 가정외보호청소년의 부정적 사건 경험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pp.193-222.
- 경찰청(2013).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자료.
- _____(2014). 경찰백서.
-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 교육부(2014). “2014 다문화교육 215억원 지원”. 교육부 보도자료. 2014. 3. 17.
- 관계부처합동(2004).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 투자전략-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 _____(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_____(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 국회입법조사처(2013). 농어촌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윤명희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 권은선, 구인회(2010).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11, pp.129-148.
- 기순신, 김호인(2012). 보육학개론. 고양: 공동체.
- 김기현, 오병돈 (2013). 청소년복지정책 대상규모 추정: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4호, pp. 31~54.
- 김기현, 임희진, 장근영, 김혜영, 황옥경(20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진(2013).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현황 및 접근성 제고 방향. 보건복지포럼. 198, pp.79-89.
- 김미숙(2009).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한국사회, 학교적응문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양심영, 김기현, 하태정(2013).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외(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

- 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조애저, 김효진, 이주연(2008). 아동청소년 성착취근절을 위한 국가뇌 이행실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정익중, 이주연, 하태정(2012). 아동복지지출 실태 및 적정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애, 박성연(2009).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30(1), pp.43-57.
- 김성천, 이웅혁, 장혜림, 강소영, 이은주(2008). 실종아동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송희 외(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미숙, 강은정, 김현철, 이경상, 조혜영 외(2008).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 수립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지, 김경준, 최운호, 유설희(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용화(2011).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아동과권리. 15(3), pp.287-311.
- 김은경, 김지선, 이승현 외(2007).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선(2007). 청소년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1966-2005, 형사정책, 19(2), pp.54-86.
- 노충래, 강현아, 강현주, 이효진, 선지숙, 조유리(2009).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사정도구 개발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노혁(2009).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 미래청소년학회지. 6(3), pp.23-43
- 대검찰청(2012a). 검찰연감.
- _____ (2012b). 범죄분석.
- 대한민국정부(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 맹영임, 김경준, 이춘화, 조혜영, 김현철(20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김희진(2009).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생존권, 보호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4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계획.
- 박미경(2010).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사회통합정책과 과제 :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다문화와평화. 4(2), pp.101-130.
- 박미경, 문혁준(2009).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7(2), pp.1-13.
- 백혜정, 임희진 (2014).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원행정처(2013). 사법연감,
- 변숙영(2013). 텔파이조사를 통한 가정위탁지원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32(4), pp.1-20.
- 보건복지부(2007).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_____ (2008).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 _____ (2009).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_____ (2010).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_____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_____ (2013a).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_____ (2013b).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_____ (2014a). 201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_____ (2014b). 요보호아동현황보고.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2 국민건강통계.
- _____ (2013a). 국민건강영양조사.
- _____ (2013b).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3). (내 아이처럼 한 가족처럼)가정위탁 10년 : 2003~2013.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2013). 가정위탁아동 가정보호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아동청소년정책5개년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복지국가소사이터티(2013).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 부산광역시(2009). 제1차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플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 2012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 성미영(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pp.17-29.
- 송다영, 장수정, 김은지(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pp.27-52.
- 신인순(2011). 빈곤아동 과체중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문화포럼, 27, pp.62-92.
- 아동자립지원단(2011). 자립체험관 운영실적 및 만족도 조사.
- 양계민(2013). 201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양계민, 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정, 이수정(2009).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증장기 정책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양미선, 임지희(2012).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승실, 김왕준, 김종민, 김현정(201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양은별, 정익중(2013). 누구를 위한 설문조사인가? -그룹홈청소년의 설문조사 경험. 한국아동복지학회. 43, pp.29-63.
- 여성가족부(2010). 2000-20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_____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_____ (2013a). 2013 청소년백서.
- _____ (2013b).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 _____ (2014a). 2014 청소년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4b).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 _____ (2014c). 여름방학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 185건 적발. 2014-08-06 보도자료.
- 오성배(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pp.305-334.
- 오정수, 정익중(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 윤철경, 김윤나(201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 이광현(2012).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능한가? : 무상성의 범위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소요 추정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논의. 교육정치학연구. 19(4), pp.89-109
- 이기영, 최명민(2006). 사회복지전문직과 인적자원 개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동환(2014). 소년보호기관의 현황과 노력. 2014년 한국소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현(2010).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승현(2010). 아동복지시설(6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15, pp.253-280.
- 이연옥, 노영주(2012).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pp.73-98.
- 이재연, 박은미, 황옥경, 김형모, 이은주, 강현아(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이현주, 강신옥, 강혜규, 금현섭, 김문길, 김미곤 외(2012).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1년 추진실적 평가. 보건복지부.
- 이혜연, 박영균, 유성렬, 정선옥, 고정원(20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I.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신순영, 이경숙 외(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장진숙(2011). 이주아동의 법적 지위와 인권 보장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 10, pp.341-384.
- 전경숙(2013).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황문제와 향후과제.
- 전경숙, 최윤선, 이의정(2012).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수립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기택, 정해숙, 김이선, 김영란, 주재선, 김혜영 외(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진아, 김미숙, 오혜인(2013). 아동정책 지표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선옥(2004). 시설보호 아동의 애착유형과 심리사회적 적응. 아동과권리. 8(1), pp.1-15.
- 정영철, 강혜규, 박세경,(2011) 통합적 사례관리 및 자원관리방안마련을 위한 연구III,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정익중(2006).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12, pp.95-115.
- _____(2008). 참여정부 아동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 14(2),

- pp.282-313.
- _____(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pp.297-322.
- _____(2011).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육 교육보장의 전략. 안상훈 외 편. 고용복지 연계형 사회정책 개혁전략. 서울: 고용노동부, pp. 252-266.
- 정익중, 박현선, 오승환, 임정기(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공동체.
- 정익중, 이경림, 이정은(20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1, pp.205-234
- 정익중, 이정은, 이상균(2011).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교사의 소진과 이직이 아동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pp.137-163.
- 정진곤(2011). 북한 이탈 학생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연구. 다문화교육연구, 6(4), pp.79-97.
- 정혜숙, 박성정, 구정화, 최윤정(2011). 초중등고등학교 인권교육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민식, 송시형(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1), pp.53-72.
- 조수민, 노충래(2014). 결식경험이 신체건강,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2), pp. 229-254.
- 조맹제 외 (2011).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건복지부
- (재) 푸른나무 청예단(2014).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미발간).
- 주은희(2008). 청소년 통합정책하의 전문인력 재정비 방안: 아동전문인력의 보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토론회 발표자료.
- 최인재·이기봉(2010). 한국청소년 지표조사 V: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조사(한·미·일·중 4개국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지숙(2013, 2.23). [아동 성폭력 실태] 年1000명 아동 성폭력 피해... 24%가 친척·이웃 소행. 서울신문.
- 통계청(2004), 생활시간조사.
- _____(2009). 생활시간조사
- _____(2013), 2012년 사망원인통계.
- _____(2014a). 경제활동인구조사.
- _____(2014b). '2013년 맞벌이 가구현황' 보도자료.
- _____(2014c). 2013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2014d). 2013 혼인·이혼 통계.
- 통계청,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 보도자료.
- ‘학교폭력, 왕따 논란 유치원으로 번지다’. 한겨레 신문 기사 발췌. 7월15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6965.html)
- 한국소비자원(2013).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KODDI 연구요약집.
- 한만길(2009).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황옥경(2011). ‘차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아동과권리. 15(3), pp.313-335.
- 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2009). *Protecting Children is Everyone's Business -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An initiative of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2012). *National Action Plan for Child Injury Prevention*. Atalanta(GA): CDC, NCIPC.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1). *Family reunification: What the evidence show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An action plan for Adoption: Tackling Delay*. Department for Education UK.
- Farmer, E., Dance, C., Beecham, J., Bonin, E., & Ouwejan, D.(2010). *An investigation of family finding and matching in adoption - briefing paper*.
- OECD(2005). *Income distribution questionnaire*. www.oecd.org/els/workingapaers
-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 Comparative Child Well-being across the OECD*, OECD publishing,
- Reeker, J., Ensing, D., & Elliott, R.(1997).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group treatment outcome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21(6), pp.669-680.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 실종아동전문기관 www.missingchild.or.kr
- 안전Dream www.safe182.go.kr